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7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7. 12.

대한민국정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7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대한민국정부

차 례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1. 목표 및 방향	3
가. 농업부문	
나. 임업부문	
다. 수산부문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10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나. 임업부문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3. 2007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7
가. 2007년 농림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나. 2007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다. 2007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25
1. 협동조합 개혁	27
가. 농업협동조합	

나. 산림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38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2)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확대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51
가.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1) 농업분야	
(2) 산림분야	
(3) 수산분야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1) 농업분야	
(2) 산림분야	
(3) 수산분야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61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68

- 가. 영농규모화 촉진
-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다.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
-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 (3) 농업교육 체계 개편
 - (4) 경영컨설팅 지원
 - (5) 농업벤처 육성
 - (6)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 바. 농지은행제도
- 사.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아.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90
 - 가. 생산기반 정비
 - (1) 우량농지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 (2)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 (4) 수리시설 개보수
 - (5) 배수개선사업
 - (6) 농업용수개발
 - (7)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 나. 농업의 기계화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3) 농기계 사후관리강화	
(4) 농기계 생산지원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3) 축산시설 현대화	
라.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04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나. 종자산업의 육성	
다. 종축산업의 육성	
라. 사료산업의 육성	
마.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바.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18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1) 농업분야	
(2) 임업분야	
(3) 수산분야	
(가) 어업정보화 촉진	

(나)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추진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132
가. 수출진흥대책	
(1) 농림분야 시책 개요	
(2)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나. 수입관리대책	
(1) 농림분야	
(2) 수산분야	
6. 친환경농업의 육성	141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2)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4) 가축분뇨의 자원화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152
가.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1) 농림분야	
(2) 수산분야	
나. 농산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4)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5) 농산물가공·특산품 생산의 활성화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2) 농가부채대책 추진	
(3)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4) 수산부문	
8.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속추진	175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77
1. 쌀산업	179
가. 양정제도 개편	
나. 수급전망 및 정책방향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라.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촉진	
마. 쌀소비 촉진 전개	
2. 채소·원예산업	187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3. 과수·화훼산업	189
가. 과수산업	
나. 화훼산업	
4. 축산업	194

가. 한우산업	
나. 낙농산업	
다. 양돈산업	
라. 양계산업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체계의 강화	
(1)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5. 임 업	215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라.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6. 수 산 업	283
가. 연근해어업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3) 친환경어선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나. 해면양식어업	
다. 내수면양식어업	
라. 원양어업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291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298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1) 2006년 이행실적	
(2) 2007년 추진계획	
(3) 어촌분야	
다. 전원마을조성사업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마.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확충	
바.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사. 농어촌노후·불량주택 개량 촉진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자.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사업 추진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	
(3)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 추진	
차.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 교육여건 개선	309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나.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경감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311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313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3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10
3. 2007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7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가. 농업부문

현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대외적으로는 DDA협상, 한·미 FTA 협상, FTA 확산 등으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안전·건강(Well-Being)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농산물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이라는 새로운 농정비전과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 6대 정책 목표 >

- ① 농업개방확대 적극 대응
- ② 농업 경영체 육성 등 소득 경영안정
- ③ 쌀 산업의 체질 강화
- ④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및 소비촉진
- ⑤ 소비가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
- ⑥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6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2007년에는

첫째, 한·칠레 FTA 협상을 계기로 개방화 시대의 대책으로 20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을 한·미 FTA협상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 보완한다. 농업정책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제도를 도입하여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농식품 정책과 농촌 정책을 대폭 강화하게 되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에 따라 119조원 투융자계획도 집행성과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대폭 조정하게 된다.

한편,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을 뒷받침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FTA이행특별법」을 개정하여 농가피해 보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투융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을 발굴하여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는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되고, 이를 위해 농림부·농업인·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농정 리모델링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둘째,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불제 개편을 위해 정부는 2009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밭농업·과수·축산을 포괄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외국 사례 및 농가소득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해 고령농 은퇴 촉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되며, 조기은퇴 직불제는 고령농 은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한편, 기존 직불제는 대상지역 확대 등 내실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는 도서지역 지급대상을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전도서(제주도 포함)로 확대하고 경사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경관보전 직불제는 연, 자운영 등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셋째, 식품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경영개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칭)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수급에서 식품 가공·소비까지 통계정비를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2008년 이후 해외 한식당 국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민간 주도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육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육종가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년중 ‘농업유전자원의보전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농업유전 자원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국외 반출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500ha 규모의 바이오 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돼지콜레라 경구용 백신, 가축사료용 항생제 대체물질, 배추분자마커 개발을 통한 분자육종 등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 정부는 농산물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및 상품차별화를 위해 금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쌀은 20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하고, 금년에는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브랜드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를 추진하며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를 실시하고 12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원예농산물은 2013년까지 채소류 50개소, 과실류 21개소(전국 1, 광역 20)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되 채소류는 주산지들 중심으로 우수브랜드 경영체 선발·지원하고 과실류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상품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과실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며 고려인삼을 세계적으로 명품화하고,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삼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축산물은 규모화된 광역브랜드 조성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총 80여개소 내외의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한다.

2004 ~ 2006년까지 선정된 73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규모화·내실화를 추진하고 브랜드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드 경진대회」, 「브랜드 인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농식품 안전성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농약위주에서 중금속으로 확대되고, HACCP 적용범위가 소 사육 단계, 축산물 보관·운반·집유단계까지 확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한우 위주에서 육우까지 확대하고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까지 사업방식을 다양화한다.

금년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2008년에는 쌀로 확대 적용된다.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여 Non-GMO 쌀 도입을 위해 선적전 수출국 정부기관 확인, 국제검정기관 검사, 국내도착시 식약청 검사 실시 의뢰 등 3단계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한편, 2007년부터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가 지자체·가축위생사업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섯째,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정주기반 확충,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주택정비, 신활력지원과 지역특화사업 등의 통합을 검토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은 2007년에 지원 조건을 단일화하고 2008년 이후 지원한도 및 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생활상담을 하는 교육 도우미 제도를 30개 시군에 시범 실시한다.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이 추진되고 시군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인구 과소화 시군 등 10개 시군을 선정하고 최대 3년간 10억원 내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추진중인 55개소 외에 신규 15개소를 추가 착수하고 2008년 사업지구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공모방식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전원마을 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시 도시계획구역 결정 등 관련법령 의제사항 확대 등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림부 정책기획팀 서기관 윤원습)

나. 임업부문

임업분야에서는 녹화된 산림을 숲 가꾸기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난개발 방지 등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숲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격에 걸맞은 국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녹화된 숲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국가계획인 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는 ‘숲다운 숲’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휴양 공간을 확충하며 산촌진흥에 노력하는 등 사람과 숲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정책팀 주무관 김동성)

다. 수산부문

2007년 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은 WTO/FTA 등 국내외 어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회복, 자율관리어업 확산,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첫째, 어종별 조업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회복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정착,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 바다목장,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연근해 어선세력 축소,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등을 통해 연근해 자원관리형 어업생산 구조를 정착시키고,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수산기술 개발과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어자금, 수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업 및 선도경영인 지속 육성과 어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양식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인 경영안정망 장치를 확충하는 한편,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94개)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넷째,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관광모델 개발 등을 통해 어촌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500사 500어촌 자매결연 체결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 촉진 및 다양한 어항 수요에 부응한 다기능어항을 개발하고 있다.

다섯째,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양식장 HACCP 확대, 수산물 생산 이력추적제 도입 등 수산물 생산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친환경 양식생산기반을 확대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품질인증 대상 확대 등 우수 수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서해안 Sea-Food Town 조성 등 수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여섯째,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원양어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일곱째, WTO/DDA에서 주요 어업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수산물관세는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FTA는 협상의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회도 적극 참여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미리 발굴하고, 자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WTO/DDA 및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수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요 어종·업종별 경쟁력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 전업방안과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국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06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3년차로서 2006년 투융자규모를 10조 3,289억원(국고예산기준)으로 계획하여, 계획대비 실적은 106.2%로 10조 9,715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계획(A)	실 적(B)	B-A	대비(B/A)
국 고	103,289	109,715	6,426	106.2
(보 조)	(77,146)	(84,687)	(7,541)	(109.8)
(융 자)	(26,143)	(25,028)	(△1,115)	(95.7)

분야별로는 국고투융자 10조 9,715억원 중 영농규모화 촉진, 전문농업인 육성 등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에 3조 4,733억원(31.7%),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농외소득 증대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분야에 2조 7,841억원(25.4%), 농촌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지역 개발 등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조 2,402억원(11.3%), 농산물 유통혁신 분야에 7,018억원(6.4%), 산림자원 육성 분야에 8,574억원(7.8%), 농업기계화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에 1조 9,147억원(17.4%)이 집행되었다.

일부 미집행 사업의 사유로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분야에서 재해 미발생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으로 인한 경영회생자금 수요 미발생,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농기계 구입 수요 저조 분석되었다.

2006년 국고투용자의 사업분야별 내역

(단위 : 억원, %)

분야(기능)별	계획(A)	실적(B)	대비(B/A)	비 중
합 계	103,289	109,715	106.2	100.0
□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28,267	34,733	122.9	31.7
◦영농규모화 촉진	4,371	4,485	102.6	4.1
◦친환경농업 지원	1,917	1,620	84.5	1.5
◦농산물상품가치 및 안전성 제고	2,471	1,169	47.3	1.1
◦전문농업인 육성	1,308	2,353	179.9	2.1
◦농림업 기술개발 보급	4,304	4,051	94.1	3.7
◦원예 및 축산업 선진화	3,896	4,654	119.5	4.2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8,000	15,347	191.8	14.0
◦지역농업 육성지원	2,000	1,054	52.7	1.0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25,695	27,841	108.4	25.4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25,182	27,432	108.9	25.0
◦농외소득 증대	513	409	79.7	0.4
□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15,223	12,402	81.5	11.3
◦농촌사회 안정망 확충	3,331	2,465	74.0	2.2
◦교육 및 기초복지인프라 구축	2,755	1,973	71.6	1.8
◦농촌지역 개발	9,137	7,964	87.2	7.3
□ 농산물 유통혁신	9,877	7,018	71.1	6.4
□ 산림자원 육성	6,210	8,574	138.1	7.8
□ 농업생산기반 정비	18,017	19,147	106.3	17.4
◦농업생산기반 정비	15,315	18,530	121.0	16.9
◦농업기계화 지원	2,702	617	22.8	0.5

한편, 119조 투용자 사업은 3년 단위로 종합평가(중간점검)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2007년 농업·농촌종합대책팀을 구성하여 연도별 사업별 투용자 계획 조정하였다.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1단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92~'98), 2단계 45조원 농업농촌발전계획('99~'03), 15조원 농특세사업, 119조원 투융자계획('04~'13)에 따라 1992~2006년간 국고기준 약 97조원이 투융자 되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투융자 효율성 및 체감도가 낮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실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농업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9~2006년 농림어업 실질 부가가치는 0.03% 증가하였고, 농가소득 및 농가자산은 1998년 대비 각각 57.6%, 85.6%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도 65.5% 증가하였다.
 - 실질 농림어업부가가치 : ('91) 214,530억원 → ('98) 233,554('91대비 8.9% 증) → ('06p) 247,853('98대비 6.1% 증)
 - 농림어업 부가가치 성장율 : ('91~'98) 연평균 1.2% → ('99~'06) 연평균 0.03%
 - 광업 부가가치 성장율 : ('91~'98) 연평균 - 6.7% → ('99~'06) 연평균 - 3.1%
 -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율: ('91~'98) 연평균 4.9% → ('99~'06) 연평균 8.3%
 - 농가소득 : ('91) 13,105천원 → ('98) 20,494 → ('06) 32,303
 - 농가자산현황 : ('91) 99,189천원 → ('98) 192,335 → ('06) 356,963
 - 농가부채현황 : ('91) 5,192천원 → ('98) 17,011 → ('06) 28,161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은 대폭 진전되었다.
 - 배수개선 : ('98) 84천ha → ('01) 111 → ('06) 134
(배수개선율) (45%) (59) (71)
 - 밭기반정비 : ('98) 30천ha → ('01) 48 → ('06) 73
(밭기반정비율) (27%) (43) (66)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98) 5,608km → ('01) 11,128 → ('06) 17,520
(확포장비율) (16%) (26) (50)
-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가 진전되었다.
 - 경지 3ha이상 농가 : ('98) 66천호 → ('01) 75 → ('06) 86
('06총농가 : 1,245천호) (4.7%) (5.5) (6.9)
 - 짓소 50두이상 농가 : ('98) 2,976호 → ('01) 4,270 → ('06) 4,388
('06총농가 : 8,260호) (19.0%) (33.3) (53.1)
 - 양돈 1천두이상 농가 : ('98) 1,932호 → ('01) 2,733 → ('06) 3,088
('06총농가 : 11,309호) (7.2%) (14.0) (27.3)
 - 양계 3만수이상 농가 : ('98) 862호 → ('01) 1,161 → ('06) 1,530
- 농업기반 확충 및 기계화규모화 확대로 노동·토지생산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자본생산성은 농림어업부가가치가 줄어 당초보다 감소하였다.
 - 노동생산성 : ('98) 9,897원/시간 → ('01) 12,141 → ('06) 13,384
 - 토지생산성 : ('98) 880천원/10a → ('01) 1,074 → ('06) 1,161
 - 자본생산성(부가가치/자본액) : ('98) 0.42 → ('01) 0.47 → ('06) 0.36
 - 농업기계화율(논, 벼) : ('98) 85.5% → ('01) 88.7 → ('05) 89.9
 - 농업기계화율(밭, 주요작물) : ('98) 41.8% → ('01) 47.0 → ('05) 47.2
- 품질인증 확대와 안전성 검사 강화 등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공급이 확대되었다.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비중 : ('99) 0.1% → ('01) 0.4 → ('06) 6.2
 - 원산지표시 이행률 : ('98) 92.5% → ('01) 95.9 → ('06) 97.1
 - 쇠고기(한우) 1등급이상 출현률 : ('98) 15.4% → ('01) 29.9 → ('06) 44.5
 - 돼지고기 A등급 출현률 : ('98) 24.8% → ('01) 37.2 → ('06) 36.3

-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규격화·포장화·직거래화가 촉진되어 농산물 산지유통구조가 선진화되었다.
 - 산지유통센터 : ('98까지) 134개소 → ('01) 196 → ('05) 232 → ('06) 242
 - 표준규격출하율 : ('98) 26% → ('01) 46.2 → ('05) 54.5 → ('06) 69.3
 - 농산물포장화율 : ('98) 75.1% → ('01) 88.5 → ('05) 87.8 → ('06) 88.7
-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 유통구조가 확립되었다.
 - 공영도매시장 : ('98) 18개소 → ('01) 29 → ('05) 32 → ('06) 32
 - 농산물공판장(국고지원) : ('98) 24개소 → ('01) 35 → ('06) 33
 - 종합유통센터 : ('98) 3개소 → ('01) 12 → ('06) 15
 - 미곡종합처리장 : ('98) 301개소 → ('01) 328 → ('05) 302 → ('06) 297
 - RPC 시장점유율 : ('98) 24.4% → ('01) 27 → ('05) 54 → ('06) 56
- 김치, 화훼, 과일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이 증대되었다.
 - 화 훼 : ('98) 12백만불 → ('02) 32.1 → ('05) 52.1 → ('06) 40.4
 - 과 실 : ('98) 39백만불 → ('02) 82.8 → ('05) 120.9 → ('06) 98.4
 - 채 소 : ('98) 59백만불 → ('02) 168.8 → ('05) 231.4 → ('06) 203.9
 - 김 치 : ('98) 44백만불 → ('01) 69 → ('05) 93 → ('06) 70
 - 닭고기 : ('98) 1,605천불 → ('01) 3,106 → ('05) 5,833 → ('06) 6,594
- 농촌 의료·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
 - 농어업인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률 확대
 - ('98) 15% → ('01) 22 → ('05) 40 → ('06) 50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04) 270천명 → ('05) 275 → ('06) 268
 -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 : ('98) 26천원 → ('01) 39 → ('05) 224 → ('06) 259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 ('98까지) 80천명, 793억원, ('06까지) 251천명, 3,956억원
 -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실적
 - ('98) 7,748명 → ('01) 9,460 → ('05) 10,520 → ('06) 13,460
 - 농어촌 생활여건도 많이 개선되었다.
 - 농어촌 주택개량('06까지) : 430천동, 49,857억원 지원(융자)
 - 농어촌생활환경정비(면개발) : ('98까지) 299개면 → ('05까지) 770
 - 전원마을조성 : ('06까지) 55지구 착수, 537억원 지원
- (농림부 정책평가팀 기술서기관 손영규)

나. 임업부문

2006년도 산림투융자 지원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05년도 7,725억원보다 1,076억원(13.9%) 증가한 8,801억원이다.

기능별로 보면 숲가꾸기·조림·산불피해지조림복구 등 가치 있는 산림육성에 2,274억원을 투자하였고, 산불방지·헬기운영·산불취약지관리·산림병해충방제·사방 등 산림자원의 보호에 2,154억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산림사업종합자금·임산물유통지원·목재이용가공지원·임업기술지도·산림조합육성·임도시설·산림재해복구지원 등 산림경영기반확충에 1,781억원, 자연휴양림·수목원·박물관·백두대간보호·도시숲 조성관리·식물자원보전관리 등 휴양·녹색공간 및 생태관리에 1,189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융자 부문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투융자 부문별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05예산	2006예산	증 감	
				%
합 계	7,725	8,801	1,076	13.9
◦ 가치 있는 산림육성	2,167	2,274	107	4.9
◦ 산림자원의 보호	1,548	2,154	606	39.1
◦ 산림경영기반확충	1,919	1,781	△138	△7.2
◦ 휴양·녹색공간 및 생태관리	913	1,189	276	30.2
◦ R&D, 국유재산관리 등	1,178	1,403	225	19.1

투융자 사업의 향후 지원방향은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확대, 산림경영모델숲 등 경영림 확보, 대형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의 확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 대책,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휴양·녹색공간 확충, 지역산림경영 모델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림 조성권역에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새로운 산림경영기법 도입 등이다.

(산림청 재정기획팀 주무관 백기종)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2006년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7,808억원이며, 2005년에 비해 증가율이 3.6%로 생산기반조성 부문은 감소한 반면, 부담경감·소득보전 등 기타 부문은 증가하였다.

기능별로 보면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소형기저인망어선 정리,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171억원(27.8%), 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478억원(6.1%), 국가 및 지방어항건설, 어촌어항관광개발 등 어

촌어항 개발 2,460(31.5%), 어업인정책자금이자보전, 수협경영지원 등 수산경영 지원 2,095억원(26.8%), 해양수산연구 등이 604억원(7.7%)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 2007년 농림·수산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가. 2007년 농림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2007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2007년도 농림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소요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다.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지원 강화를 위해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예산을 확충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및 부담경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체질 개선 지원 강화를 위해 농산물과 워브랜드 육성 및 새로운 소득작목을 적극 발굴하고, 친환경농업육성, 안전성제고 정예인력 육성 및 수출농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7년도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직불관련 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타부처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예산을 농림부소관으로 이관하고, 농특세관리특별회계와 재정용자특별회계가 폐지되어 농림부소관 회계가 6개에서 4개로 단순화 되었다. 또한, 농특회계내 전입금계정을 농특세사업계정으로 전환하고, 균특회계내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을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농정여건에 부응하는 신규사업(16개)을 적극 발굴 하였다.

2007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

업직불제의 지원면적을 확대하고, 농가경영위험 관리 및 농업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 확대(7개) 및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량확대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였다.

둘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중점지원을 위해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영유아양육비 보육료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위한 농촌유치 프로그램 및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을 신규 지원하였다

셋째,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위생·안전성 강화, 전문인력육성 등 농업체질강화를 위해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확대하였다. 농업 전문인력 및 지식·기술농업을 확충하고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넷째,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촉진을 위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확대하여 포장 및 하역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규격출하 사업은 무배추 포장화 소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농업생산기반조성부문은 재해예방 및 준공위주로 지원하되, 수리시설개 보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시행지구 마무리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2007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12조 1,191억원으로 2006년 보다 15.0% 증가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감	
			(B-A)	%
◇ 예산일반지출(I+II)	87,912	94,410	6,498	7.4
I. 사업비(a)	83,643	89,759	6,116	7.3
○ 농가소득·경영안정	23,405	23,545	140	0.6
○ 농촌개발복지증진	5,760	10,000	4,240	73.6
○ 농업체질강화(농진청포함)	10,212	11,361	1,149	11.3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16,205	17,079	874	5.4
○ 농업생산기반조성	16,334	16,893	559	3.4
○ 농축산경영자금	2,828	-	순감	-
○ 산림	8,899	10,881	1,982	22.3
II. 기본적 경비(b)	4,269	4,651	382	8.9
○ 인건비	3,527	3,854	327	9.3
○ 기본경비	742	797	55	7.4

(농림부 재정팀 행정서기관 이정형)

나. 2007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2007년도 산림예산은 산림의 역할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사업 성과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기본방향에 따라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림재해방지에 대한 투자 확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며, 산림휴양·녹색공간 확대 및 산림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2007년 산림예산은 총계 규모로 1조 5,046억 원으로써 2006년 1조 1,668억 원 대비 30.0%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 3,006억 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규모는 1조 2,040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0.6% 수준이다.

< 산림예산의 수준 >

(단위 : 억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정부예산	32조4,078	75조4,897	127조4,415	167조9,332	175조3,882	200조9,519
산림예산	1,479	3,721	7,343	8,795	9,953	12,040
(%)	3.38	0.49	0.58	0.52	0.57	0.60

자료 : 산림청 기획홍보본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16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71억원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27억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78억원이다.

< 회계별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증 감	
				%
합 계	9,953	12,040	2,087	21.0
◦ 일반회계	3,877	5,164	1,287	33.2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943	0	-943	-100.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00	4,771	1,271	△36.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61	1,827	466	34.2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72	278	6	2.2

부문별로는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257억원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불·병해충·풍수해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4억원,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에 2,091억원,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휴양·녹색공간 조성에 1,682억원, 임업부문 R&D 및 국유재산관리 등에 2,476억원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 부문별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증 감	
				%
합 계	9,953	12,040	2,087	21.0
◦산림 자원 육성	2,309	3,257	948	41.1
◦산림 자원 보호	2,154	2,534	380	17.6
◦산림경영기반육성	1,987	2,091	104	△5.2
◦휴양녹색공간조성	1,224	1,682	458	37.4
◦국유림 경영관리 강화	943	1,028	85	9.0
◦행정정보화 등 기타	1,336	1,448	112	8.4

첫째,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량을 확대하고, 정책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감리비를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재해예방 및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공공성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고용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위해 시범대상지 사전조사 및 사후 이력관리를 위한 DB구축을 추진하였다.

경영림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림을 실시하였는데 원활한 목재수급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수 조림 실시, 치산녹화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를 우량수종으로 갱신, 생활권 주변의 경관 조성을 위해 큰나무 공익조림 추진, 고유의 금강소나무림 육성·보존 및 후계림 육성,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풀베기·덩굴류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지원과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조사원 등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과 산림훼손 예방 및 단속요원·산림보호 강화 사업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과 고용창출을 기하였다.

둘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불·병해충·풍수해 등 산림재해 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진화장비 보강, 산불진화지휘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산불취약지에 내화수림대, 산불방지 임도 및 소화전 설치 추진을 하였고, 산불의 신속진화를 위한 격납고의 확충 및 초대형 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공중진화대·산악구조대를 운영하였다.

또한,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산림재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근원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을 확대하였다.

셋째, 임업인의 소득증대, 산림경영 기반확충 및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고소득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지원과 임산물 생산단지의 지속 지원, 목재이용 가공시설의 지원, 청정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이력제 도입, 임산물의 유통·가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유통정보가 취약한 임업인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및 시장가격 등 유통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특화품목에 대한 전문기술지도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업기술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장기성 융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단기성 자금은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산림사업 종합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환경친화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고 기존의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을 확대하고, 임업기능인 양성과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투자하면서, 임업분야 R&D사업을 강화하였다.

넷째, 휴양·문화 공간확대 등 다양한 산림의 수요에 대처하고,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자연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및 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시숲을 확충하고, 백두대간의 복원 및 보호활동을 강화하였다.

국립수목원의 보전관리와 지방수목원 및 지방산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림에 산림의 유전자원을 보전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백두대간·국유림 연접지역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사유입목을 매수하여 방치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관리토록 하였으며, 산림행정의 정보화 촉진으로 업무의 효율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지원을 강화하면서,

범정부적 황사방지대책 추진으로 몽골 등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추진과 임산물 수출 촉진 및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등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산림청 재정기획팀 주무관 백기종)

다. 2007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7년 수산분야 예산은 2006년보다 623억원(8.0%)이 증가한 8.431억원으로서 수산경영지원, 해양수산연구 등은 감소한 반면, 수산자원 관리 조성 및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어촌어항개발 등은 증가하였다.

첫째,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폭 투자를 확대하고, 여수·태안·울진·북제주 등 4개 지역 바다목장화 사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둘째, 수산물도매시장 및 저장·가공시설 등 유통시설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이력제 대상품목 확대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 양식장 확대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지속 투자 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예산 (A)	2007년 예산 (B)	증△감 (B-A)	%
합 계	7,808	8,431	623	8.0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171	2,765	594	27.4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534	1,294	760	142.3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200	-	△200	순감
- 바다목장 조성	135	151	16	11.9
- 인공어초 및 종묘매입방류 등	1,302	1,320	18	1.4
•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478	646	168	35.1
- 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397	562	165	41.6
- 수산물 안전관리	81	84	3	3.7
• 어촌어항 개발	2,460	2,635	175	7.1
- 어촌어항관광 개발	639	896	257	40.2
-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1,821	1,739	△82	△4.5
• 수산경영 지원	2,095	1,805	△290	△13.8
- 어업인정책자금 이차보전	941	827	△114	△12.1
- 어업정책보험 지원	180	201	21	11.7
- 수협경영 지원 등	974	777	△197	△20.2
• 해양수산연구 등	604	580	△24	△4.0

셋째, 어업인 정책자금 등 수산경영 지원은 연차소요를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 어항건설은 완공 및 효율성 위주로 투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새로운 어촌어항관광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27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38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51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가. 농업협동조합

(1)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농협중앙회는 1945년 해방 후 많은 논란 끝에 1957년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구)농협과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농업은행으로 발족하였으나,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1961년 (구)농협과 농업은행이 3년만에 통합됨으로써 종합농협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농촌의 고리채 폐단을 없애는 데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힘든 농사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되물림 되는 농촌의 현실과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더욱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농협에 대한 지속적인 역할 강화 요구는 지속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사업 강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1997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경분리 문제 등 농협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1999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고 사업부문별 전담대표이사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였고 신경분리문제를 정부가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농협법 부칙 제16조에 명기되었으며, 1999년 농협법에 따라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한국금융연구원으로 하여금 신경분리의 타당성을 연구하게 하고, 연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003년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 내에 농업인 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

된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 등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의 1단계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농협법은 농협중앙회가 신·경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법시행 1년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농림부 장관은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토록 규정하였다.

2004년 개정된 농협법(부칙 제12조)에서 농협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협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 기한,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법 시행('05.7.1)후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 6월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본금 확충, 조합자립 경영 달성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법 틀내에서 3개의 별도 특수법인으로 분리하고, 경제사업 적자 보전과 신용사업 BIS 비율 유지(10%) 등을 전제로 추가로 7.8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15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농협의 경제사업 독자생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산지(일선조합) 및 소비지 유통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6. 1월부터 농림부, 농특위, 학계, 농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15명으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위원회는 농림부 차관과 학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2006. 6월 농협안 제출 전까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현황 분석 등 농협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7월이후 재정부 등 관계부처, 언론, 농협 등 위원회를 23명으로 확대·개편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10차례 회의를 통해 안 수협중앙회 독립사업부제 사례분석, 농협의 교육·지원 및 경제사업 현황분석, 농협에서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등을 논의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 농협, 연구원 등으로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확충, 법인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 및 검토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자본금 규모 및 자본금 확충방안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별로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를 하였으며, 주요 쟁점,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과장급, 농민단체, 연구용역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2)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20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 등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5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 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

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도 35개 조합에 총 551억원(출연 394억원, 대출 15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중인 4개의 조합에 157억원을 3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였고, 31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3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3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83억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6년도에도 11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으며 3개 조합은 정리 중에 있다. 또한 14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적자규모가 18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1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제 조합의 당기순이익 또한 10,14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66억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적자조합은 전년에 비해 17개 조합이 줄어든 14개 조합이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28조 3,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9%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31조 6,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3%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91조 1,6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40% 성장하였다.

(3) 향후 계획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요구는 중앙회가 그 동안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보다는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체로서의 역할을 중점 부각시키면서 농업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나, 열악한 경제사업 부분의 지속적인 적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로 농업인들의 실익증대라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뒤 흐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협이 진정 농업인들의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이 분리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농림부에 구성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중점 논의해온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방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이 정부에 건의되면 일선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건의안에는 농협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02년 국회에 보고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경제사업 독자적 발전방안 강구, 자기자본 확충 등의 전제조건과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한 건의안이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경분리위원회의 정부안이 마련되면 전남북(광주), 경남북(대구), 강원·충청(청주) 등 3개 지역토론회와 중앙토론회(수원) 등 총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선 농민조합원, 농민단체, 조합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지역 농업계 대학교수진을 좌장으로 농민단체, 일선농협조합장, 연구원, 정부, 중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토론자로 선정하여 위원회 건의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일선농업계의 전반적인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3월까지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

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이 편법으로 우선출자금을 조성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 부실조사 대상 153개 전 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조합 중 79개 조합의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 532명에 대하여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또한 소송이 완료된 127억원 중 82억원을 승소하였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73억원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등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기술서기관 박순연, 행정사무관 이정길)

나. 산림조합

(1) 산림조합 경영진단 실시

산림조합의 자율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한 신용사업이 IMF 이후 급격히 변한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2003년 신용사업부문에서 25개 조합에서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조합부실 방지 및 경영정상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WTO/DDA 협상과 각국과의 FTA 추진으로 임업과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산림조합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05년 산림청 예산에 조합진단에 관한 소요비용을 반영하였다.

경영진단은 조합의 부실규모 및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조합의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별 특성을 반영한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경영진단은 중앙회소속 144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경영진단 추진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학계·임업계 등 외부인사로 경영진단위원회(9명)를 구성·운영하였다. 경영진단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등록된 복수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전문성·실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경영진단의 분야는 신용사업과 일반경제사업 부문 등 산림조합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월 동안 추진하였다. 진행과정은 우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표조합을 6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통해 현지실사를 위한 실사기준 등을 만들고, 이어서 144개 조합에 대한 전면 서면조사를 거친 후 현지실사 하였다.

144개 회원산림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실시 결과 29조합에서 △274억원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순자본비율 2%미만의 부실조합이 27개가 발생함에 따라 통폐합 등 구조개선이 불가피하여 「산림조합경영진단위원

회」에서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으로 부실심화를 방지하며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농·수협의 구조개선 사례와 경영진단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2006년초 중앙회와 함께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조기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의원입법(2006.4.6.) 형태로 추진하던 중 정부 관계기관간 업무협의를 통한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정부입법(2006.4.28)으로 전환하도록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3월 20일자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7년 8월 3일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 법률은 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며, 본문 44조항(6장)과 부칙 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청장은 정상경영이 어렵거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한 조합에 대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산림청장은 부실(우려)조합을 지정한 후에는 부실정도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정도에 따라 적기시정 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를 명하여야 하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셋째, 관리기관(중앙회)은 구조개선 대상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되, 부실책임자의 공평한 손실부담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고, 자금지원 시에는 경영개선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그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넷째,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의 직무정

지 및 해임, 계약이전, 6월내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사업을 전부 정지시키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에는 중앙회 임직원 또는 외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등 부실관련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제를 유도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규정 위반자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 7월 중앙회와 공동으로 '산림조합 구조개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실조합 등의 차질 없는 구조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

하위법령과 예산에 반영된 구조개선계획은 부실이 심하여 회생이 어려운 부실조합(순자본비율 $\Delta 15\%$ 미만)은 인수조합에 부실금액만큼 자금을 일시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부실우려조합(순자본비율 2%미만~ $\Delta 15\%$ 이상)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향후 5년동안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조합의 성공적인 구조개선은 조합이 부실을 탈피하여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촌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산촌소득팀 주무관 김대훈)

다. 수산업협동조합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이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1,305억원의 무이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자본잠식규모에 비해 지원액이 과소하여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일선수협이 부실원인 및 규모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경영진단을 추진하여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하고 47개 조합에 대해 2010년까지 자본잠식액을 회복하는 목표하에 인원감축, 고정자산 매각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면서 이의 이행을 전제로 2003년 8월부터 매년 483억원(무이자자금 환산 6,709억원) 및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무수익고정자산 매각손실에 대한 추가지원 자금 14억원(무이자자금 환산 194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년 하반기에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조기확보된 자금 256억을 일선수협에 지원하였다. 또한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합병(2개 '04.5.31) 및 계약이전(1개, '04.10.31)을 통해 2004년 총 922억원(합병 376억원, 계약이전 546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2003년 △155억원 적자에서 2006년 315억원의 흑자를 실현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해왔던 구조조정을 2002년말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인력 985명('00: 6,275명 ⇒ '02: 5,290명), 점포 75개(493개 ⇒ 418개)축소, 부실채권 감축(10.5% ⇒ 3.9%), 고정자산매각(342억원) 등을 완료하였으며, 구조개선법 시행 후에는 적기시정조치 및 MOU를 통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MOU를 해지한 4개조합을 제외한 43개조합의 인원감축 548명('02: 2,495명 ⇒ '06: 1,947명), 부실점포 폐쇄 42개소('02: 425개 ⇒ '05: 383개), 고정자산매각 490억원('03: 114억원, '04: 83억원, '05: 115억원, '06: 178억원), 출자금증대 264억원('02: 948억원 ⇒ '06: 1,212억원)등을 완료함과 아울러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순자본비율 산출 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순자본비율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결과를 감안하여 46개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 요구), 7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적기시정조치로써 상임이사제 도입 및 임직원 체재, 직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시달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협 회원조합 부실의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구를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회원조합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조합(3개) 및 2003년말 기준 경영평가 결과 경영상태가 악화된 3개 조합 등 6개 조합을 시작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총 21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조사를 실시하여 부실발생의 원인을 분석, 이 중 8개 조합 55명에 대해 12건 2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3건의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상임이사제 의 무도입, 조합장의 공명선거 확립, 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협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조합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고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수협의 예금고객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0.12%에서 0.2%로 상향조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부실화된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강력한 독립사업부제 확행을 전제로 1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275억원, 2002년 550억원, 2003년 711억원, 2004년 1,042억원, 2005년 1,247억원, 2006년 1,186억원 등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 추세에 있어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이 확충 및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이 증가되었으며 선진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유통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지시장의 변화와 농산물 수급불안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지의 조직·규모화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유통경로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 농산물의 과잉 공급 기조 등 농산물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최명철)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생산계획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3,491호 및 모니터 요원을 1,79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해 오던 채소수급안정 사업을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계약재배사업 주체를 사업농협중심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

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체 채소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계약재배 사업 물량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농협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 향후 2017년까지 24% 수준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실에 대해서도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 등 과실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계약 출하사업을 처음 도입한 후 2002년에는 단감을, 2003년에는 감귤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사과, 배, 감귤의 사업참여 기준 물량을 기존 200톤에서 300톤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 배분 및 보전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화와 참여확대를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00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행 초년 2개 품목이던 것이 2007년 2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조금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연도 적립한 자조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향후 자조금 단체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제도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김일상)

(2)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확대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표준규격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지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영농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의 조직화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모화·전문화된 일선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을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지정하여 생산단계부터 상품화·유통단계까지 수확후 품질관리,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95개소를 선정하여 계약재배자금,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등의 유통종합자금 및 우수조직 인센티브자금, 전문인력 육성 자금 등 총 3,01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7년도에는 85개소를 선정하여 2,574억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전문조직을 규모화·광역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읍면단위 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규모로 확대하고 브랜드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책임경영, 독립채산, 전문 CEO 운영 등 혁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05년도에 최초로 9개조직을 선정하였으며 '06년의 경우 공모를 통해 현지심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하였다.

2006년도 선정된 6개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3년간 용자 1%의 유통정책자금(661억원), 1년간 무이자인센티브(15개조직 448억원), 홍보 및 브랜드 개발 지원(15개조직 4억원)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4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2007년도에도 4개 신규조직을 포함하여 총 1,3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조직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정책자금(703억원), 무이자인센티브자금(120억원), 마케팅·홍보비용(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마케팅 및 전문조직 품질관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136억원)를 지원하여 인력육성 및 사기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시스템 도입과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를 통해 잘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조직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과일·채소 산지유통센터를 2006년 253개소로 확대하였으며, '07년에도 1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량의 5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 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광하)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농산물을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 직거래를 추진하여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에 대한 직거래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아울러 2004년 소비자 중심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또한, 백화점·할인점 등 민간대형유통업체의 농업인과의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직거래 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거래의 내실화를 위하여 생산자·소비자단체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직거래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직거래 사업에 대한 홍보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지 유통업체와 산지 농업인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산지생산자가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성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는 등 자율적인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김일상)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기존의 도매시장과는 다른 예약 수의거래 방식에 따라 산지와 직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업인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15개소를 개장하였으며, 2008년까지 1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종합유통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종합유통센터를 새로운 선진유통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2006년에는 3조0,43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 도·소매 종합유통시설로 정착되어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지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지 생산자조직을 종합유통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민간슈퍼마켓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구축하도록 매취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전건호)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도매시장 경유 거래물량의 감소 원인을 경직된 거래제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거래제도로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농안법 개정을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06년 12월 국회의결을 거쳐 2007년도에 마무리 하였다.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유통주체간 거래규제완화, 도매시장기능복합화, 도매시장 운영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법인인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매시장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반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신속한 경매를 위해 전자경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도매시장 전자경매비율은 첫해 4%, 2001년 32.8%, 2002년 55.5%, 2003년 64.2%, 2004년 68.5%, 2005년 70.6%, 2006년 74.5%까지 높아지는 등 도매시장의 주된 거래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전자경매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락가격의 실시간 제공 역시 경매절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어 출하자가 안심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종길)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등에게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산지에서 농산물의 균질화·규모화를 통한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 조직이 표준규격으로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 수도권 8개시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배추 포장유통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정착,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출하자의 포장재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까지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위해 농산물 생산자 조직 등을 대상으로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컨베이어, 광폭차량 등의 물류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농산물 물류의 규모화를 위해 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한 광폭차량(냉장·동, 윈바디, 탑차량 포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자 조직이 저비용으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김일상)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43만명 이상의 생산자,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및 농산물 생산·수확후 처리단계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2003년 도입하여 3년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추적을 통하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시범사업 및 실무교육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66천건 실시하였고, 안전성조사 범위를 재배환경과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등)로 확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등에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PDA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중금속기준 확대를 위해 정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금속 기준 설정위원회('04.11)의 결정에 따라 2006년 농산물 중금속(Cd, Pb)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쌀, 배추 등 주요 농산물 10품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데 이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학적 정성·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성조사에 참여하는 농소정협의회를 수차례 운영하였고, 농소정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소비자의 농업 현장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식품안전자문단을 2003년말 구성하여 소비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부 소비안전과 사무관 고경봉)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WTO 체제 출범, FTA 협상진행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95개소의 산림조합 유통조직 직매장을 통해 단기임산물의 유통체인망을 구축하고,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 집하장 17개소를 조성하여 목재수집·운반·가공기능 확대로 산지별 목재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매 유도를 위하여 현재까지 전국 주요 생산지역에 조경수유통센터 4개소, 종묘전시판매장 1개소와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위한 산채 등 단기임산물유통센터 7개소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20	12,428	8	5,220	5	3,780	7	3,428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³m³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산림이 64%로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자급률은 낮은 실정에 있어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도에는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단지화·전문화된 임산물의 유통구조 조성을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산지와 시장의 출하 조절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자금 등 표준출하자금(2007년 9억원) 및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매자금(2007년 499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매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72개소(2007년 80억원) 및 홍수 출하기 임산물의 적기 수매를 위한 단기임산물 수집자금(2007년 26억원)을 지원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표준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표준출하규격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흐름을 반영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2005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2006년 3월에 양양 송이를 제1호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장흥 표고, 산청 꽃감, 정안 밤 등 13개 품목을 등록 완료하고 영덕 송이, 대봉 꽃감, 구례 산수유, 양구 곰취 4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명품 임산물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

구 분	등 록 완 료		등 록 추진중	
	2006년	2007년		
임 산 물 지 리 적 표시등록	제1호 양양 송이 제2호 장흥 표고버섯 제3호 산청 곶감 제4호 정안 밤	제5호 울릉도 삼나무 제6호 울릉도 미역취 제7호 울릉도 참고비 제8호 울릉도 부지깥이	제9호 경산 대추 제10호 봉화 송이 제11호 청양 구기자 제12호 상주 곶감 제13호 창선 고사리	영덕 송이, 대봉 곶감, 구례 산수유, 양구 곶취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하여 2006년도 부터 표고, 대추 품목을 추가하여 산지 생산현황,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2007년 3억원) 하고 있다.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임업인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2007년도 현재 602개 임가에 홈페이지를 완료하였고, 2010년까지 1,000개 임가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여주유통센터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fo.or.kr)을 통한 임산물 가격·유통·생산기술 정보의 전파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 임업인 홈페이지구축 현황 >

(단위 : 임가, 백만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업인 홈페이지구축	602	975	422	705	90	135	90	135

한편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개량사업 등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장뇌 등 수입임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유통시장 정화활동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4년부터 산림조합 계통 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임산물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안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청 산촌소득팀 임업사무관 박영환)

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물은 강한 변질성, 다양한 품목과 크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유통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신선도 유지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어획 후 최종 소비까지 효과적인 유통구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의 왜곡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할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할인 매장의 확대, 생산자와 유통관계자 또는 소비자간 직거래 확대 등으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여 소비지 및 산지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해 2001년 5월부터 가락, 노량진, 구리 등 수도권 3개 도매시장에서 패류 11개 품목에 대해 실질경매제를 정착시켰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선어부류까지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되고 생산 어민의 직출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지수산시장인 위판장을 위판업무의 보관, 포장, 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 등과 연계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에 신규사업으로 목포 Sea-Food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08년에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2개소 건립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생활 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유통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의 직거래 사업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수산시장”을 운영하는 등 유통체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표준규격 어상자 구입지원 대금 1,14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산물표준거래단위 및 표준규격을 제정·시행하였다

넷째, 수산물 물류기반 확보를 위해 1995~2008년중 2,090억원을 투입하여 부산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2011년까지 국제적인 수산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2006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7년 기본설계에 착수하였다. 또한 매년 신규 또는 노후화된 산시시장(위판장) 2~3개소를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가.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1) 농업분야

(가)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등

쌀 재협상 이후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FTA협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수행할 인력, 농산물품질관리 및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농축산물 국경검역인력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 153명을 증원하였다.

- 본부 : 자유무역협정2과 신설·운영인력,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실무인력 등 15명(4급1, 5급8, 6급4, 7급2, 직급상향 5급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관리·대민서비스 일선기관 실무인력,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24명(5급 10, 6급14, 직급상향 6급2), 10출장소 분리증설
- 농업연수원 : 청사시설관리 및 방호인력 1명(7급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위생감시과·동물보호과·위험평가과 신설·운영 인력, 검역탐지견센터 운영인력,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인천공항 검역인력,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인력, 조류인플루엔자·브루세라·수퍼박테리아 연구 인력 86명(4급3, 5급11, 6급22, 7급26, 별정3, 연구관1, 연구사20)
- 국립식물검역소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목재포장재 검역인력, 인천공항 CIQ 인력 21명(5급1, 6급5, 7급7, 8급8, 직급상향 5급5)
- 종자관리소 :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인력, 보급종 및 품종보호 관리인력 6명(6급3, 연구사3) 등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9368호, 2006. 3. 3, 대통령령

제19418호, 2006. 3. 29),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17호, 2006. 3. 8, 농림부령 제1520호, 2006. 3. 29)>

(나)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

예산·기금 배분 및 집행점검기능 강화, 효율적인 홍보기획 및 지원체계를 구축, 맞춤형 농정 총괄·조정 및 직접지불제 총괄업무를 수행할 과단위 기구 증설, 조직의 탄력성이 큰 참모조직은 “과”에서 “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 할 예정이다.

첫째, Top-down제 도입에 따라 예산·기금 배분 및 집행점검기능 강화

둘째, 효율적인 홍보기획 및 지원체계를 구축

셋째, 맞춤형 농정 총괄·조정, 농가등록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 농가소득정책, 직접지불제 총괄업무

넷째, 조직의 탄력성이 큰 참모조직은 “과”에서 “팀”으로 변경

다섯째, 한미 FTA 협상을 전담 조직 신설

여섯째, 혁신리더쉽 강화를 위하여 혁신인사기획관실 개편

일곱째, 식량국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등

여덟째,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7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농촌정주지원단·정주지원과·도농교류과 신설 등 2006년 수시직제 반영분야, 농지은행제도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품질 및 안전성·농축산물검역검사·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대민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07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농촌관광·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농촌정주지원단·정주지원과·도농교류과 신설 및 실무인력 등), 법령 제개정 및 장비도입 분야(농지은행제도

- 동물보호법 · 공익수의사제도 실무인력 · 통합정보화팀 신설 및 실무인력), 친환경농업 · 품질 및 안정성 분야(자연순환농업팀 신설 및 실무인력 · 육류 이력추적시스템 · 검역제도 관리 · 축산물위생 관리 등), 행정수요증가 및 실무인력(종자생명산업과 및 북한농업협력팀 신설 및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 및 안정성분야(원산지 단속 · LMO관리 · GAP 관리 인력 등), 친환경농업분야(친환경인증 인력), 시험 · 연구 분야(정밀분석 · 사료분석 인력), 출장소 분리 증설 등
- 농업연수원 : 행정 및 청사방호 인력, 교육과정개발 전문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품질 및 안정성 분야(동물약품관리과 · 축산물위해관리과 신설 및 실무인력 등), 검역 · 검사 분야(동물검역부 신설 · 탐지견관리과 신설 및 실무인력 · CIQ 2교대 근무인력), 시험 · 연구 분야(조류인플루엔자과 · 부루세라과 신설 및 실무인력, 연구인력 보강 등)
- 국립식물검역소 : 검역 · 검사 분야(우편식물검역담당과 신설 및 실무인력 · 주한미군 반입식물 및 CIQ 검역인력 등), 시험 · 연구 분야(중부격리재배관리소 확대 등)
- 국립종자관리소 : 품질 및 안정성 분야(보급종 생산 · 공급인력, 품종보호 심사인력, 등록관리인력, 민간육종 활성화인력, LMO관리 인력 등)

(라) 농림부 2007년 직제개편 추진 계획

농림부의 비전, 미션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등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동안의 업무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실 · 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변경 · 조정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농촌·식품산업 등 핵심기능이 부각되도록 부 명칭 변경 검토

둘째, 농정변화에 대응한 실·국 명칭변경 및 편제조정

셋째, 실·국별 기능·정원 조정을 통하여 식품산업, 소득작목 개발 등 신성장 아이템 분야 기능 강화, 직불제, 재해보험, 부담경감 등 소득안정 지원기능 강화 및 일원화, 학자금 지원, 도우미 지원 등 복지 관련 업무 일원화, FTA, DDA 협상 본격화에 대비한 대책 수립기능 보강, 성과관리, 평가, 정부혁신 등 지원기능 조정 등

넷째,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농업보완대책을 위하여 과 신설 및 인력증원

다섯째,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증원,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정부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전담 조직신설 및 인력증원

(마) 행정변화에 대응한 2008년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시설장비도입, 법 제개정, 지시, 대책, 협약, 주요정책 등 필요분야를 중심으로 2008년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법령 제개정 분야(새만금사업관리단, 기획팀 등 신설, 친환경축산정책, 바이오산업 실무인력 등), 지시, 대책 등 분야(국제농업국 조직 확대, 한우 강화대책 등 기구 신설 및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법령 제개정 분야(맞춤형농정팀, 농업경영체등록제, 우수농산물·이력추적관리, 친환경업무 인증업무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주요정책 분야(품질안전부, 원산지정보팀 등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 농업연수원 : 행정 및 청사방호 인력, 교육과정개발 전문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설장비 도입 분야(인천공항CIQ, 무안국제공항, 탐지견 인력), 법령 제개정 분야(실험동물과, 축산물위해기준과, 축산물 위생

관리 인력 증원 등), 주요정책 분야(중부지원 신설, 조류인플루엔자과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 국립식물검역소 : 시설장비 도입 분야(우편식물검역과 신설 및 실무인력, 도라산·부산신항무안국제공항출장소 신설, 인천공항CIQ 검역인력 등), 법령 제개정 분야(LMO 국경검역 인력증원, 대 대만 수출검역 지원 인력증원) 등
- 국립종자관리소 : 시설장비 도입 분야(강원지소 신설에 따른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품종보호 제도운영 인력 등)

(농림부 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서기관 김규억)

(2) 산림분야

산림행정조직은 산림청(4본부 1단 27팀)과 10개 소속기관이 있다.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4개부 및 4개 연구소), 국립수목원, 산림인력개발원, 산림항공관리본부(4개과 및 7개 산림항공관리소)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3개팀 및 34개소의 휴양림) 및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92명(산림청 231, 소속기관 1,361)이다.

2007년에는 2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다. 2007년 2월 13일 변화하는 산림행정 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지원·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자원정책본부에 국제협력팀을 국제통상협력팀으로, 등산정책팀을 등산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지보전단의 산지복구팀, 자원정책본부에 해외자원팀, 산림항공관리본부의 항공안전과를 신설 하였으며

2007년 7월 18일 국립수목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구기획팀을 신설 하고, 산림청 본청에 산촌소득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1명,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환경 및 산림경영·목질바이오계 연구인력 기능 보강 4명, 국립자연휴양림에 대 국민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 5명을 보강하였다.

2006년부터 휴양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기관장에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경영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 채용하였다.

(산림청 혁신인사기획팀 임업사무관 정민호)

(3) 수산분야

자원회복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TAC, 자율관리 어업, 자원조성사업을 주관하는 자원관리와 수산자원회복팀을 통합하여 자원회복과('07.8)를 신설하여 어업자원국내 수산자원회복 기능을 총괄 추진토록 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내수면 관련 업무의 확대와 낚시관련 법률의 제정추진으로 새로운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유어내수면팀을 신설하여 미래 수산행정 수요의 원활한 처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중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업무기능을 해양환경영향평가, 자원회복, 바다목장사업 등 신규 또는 강화되는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책홍보기능과 연구결과의 경제분석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원에 정책홍보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 수산연구소의 양식연구팀은 바다목장, 자원조성 등의 기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증식연구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그동안 본부 각 실·국의 개별부서에서 부속업무로써 수행해오던 해양수산통계업무를 통계와 정책수립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고자 정책홍보관리실 밑에 전담부서인 통계기획팀을 신설('07.12)하여 통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혁신인사기획관실)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1) 농업분야

2007년도 현재 농림부 소관 규제는 276건이다. 2007년도 규제정비방향은 경쟁 촉진에 저해되거나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 하며,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이양사무를 발굴·이양을 통한 분권화 촉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규제정비 과제발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축산위생·유통분야 등의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안정성 강화 및 품질관리 향상 등을 원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규제정비 대상과제로 51건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이를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선정 검토 중에 있는 정비대상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경제적 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 17건, 사회적 불편을 주는 규제 11건, 행정적 규제 5건, 그밖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가 18건이다.

정비대상과제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식물을 수입할 경우 모든 병해충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수입을 금지해오던 것을 국제식물협약 등에서 과학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이미 국내에서 경제적인 피해가 미미하다고 인정된 병해충에 대해서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식품위생법령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설기준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2개의 법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 및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도와 중복되고 있는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년도 규제정비과제는 정비대상과제를 정부입법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사전에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자체규제정비심의위원회에 정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정비내용의 객관성 및 충실도를 강화하고, 입법지연 등으로 정비가 늦어질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등과 협조하여 의원입법으로 대체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부 행정법무팀 서기관 황인용)

(2) 산림분야

산림청은 참여정부 이후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산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산림의 보호·보전을 위한 규제일변도의 소극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경제계나 이해관계자의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실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덩어리 규제개혁 등을 통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발굴·정비함은 물론, 산림행정 수요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2007년도 규제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규제폐지 1건(송이버섯 사용제한 고시), 규제개선 10건(사방사업 수익자 부담금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완화 등), 행정서비스 개선 6건(밤 재해보험 적용, 임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이력제 실시 등) 등 총 17건의 규제를 정비하였고, 규제개혁을 수요자·현장중심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 옴부즈만의 구성을 2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하여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노력을 한층 강화 하였다.

또한, 산지관리법령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신고), 채석허가(신고) 등 산지의 보전·관리분야의 덩어리규제는 규제완화 및 합리화를 통해 대국민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고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촉진하여 산림의 산업화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2007년까지 3차례 ‘규제순응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규제의 강도가 높거나 내용이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규제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규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산림분야 규제가 공급자 위주의 단순나열식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규제를 경제·사회·행정적 규제 등 성격적 분류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109건의 규제를 66건으로 통합하여 등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체적인 규제체계나 프로세스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규제의 총량관리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방향제시 등 규제의 질적 관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놓았다.

향후 산림분야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규제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하는 높은 품질의 규제를 개발하고, 입법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균형된 행정체제 및 사회운영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시장경쟁원리와 정부규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대안의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행정법무팀 임업사무관 우현택)

(3) 수산분야

2007년 수산분야의 규제개혁은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정비로 규제개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규제건수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법의 제정 및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에 따른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에 규제개선사항 수요조사, 규제개혁 워크숍, 규제집행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끊임없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강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타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조건으로 하는 규제 리모델링제를 시행하여 규제증가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서 시범 작성을 통하여 비용·편익 분석 및 규제대안 검토 등 규제타당성 판단의 기초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도 해양수산부 규제정비 추진계획 총 47건 중 수산분야 규제정비 추진계획은 총 10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협동양식어장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낚시행위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허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 촉진 및 양식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을 대체 건조·개조할 경우 기존어선의 톤수와 같거나 그 이하의 어선만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톤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적용되도록 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학졸업자 뿐 아니라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인재 확보의 문호를 넓혔고, 생산·가공시설 등의 조사·점검 시 피 조사기관에 합동조사권 부여 및 조사주기 설정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업자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

●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63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90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04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18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132
6. 친환경농업의 육성	141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152
8. 지역농업클러스터시범사업 지속추진	175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가. 영농규모화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2%,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0,426ha 4,341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3,856ha 2,856억원, 농지임대차가 6,537ha 1,458억원, 농지교환분합이 33ha 27억원을 집행하였다.

2006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6 계획(A)		2006 실적(B)		집행율 (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10,227	434,146	10,426	434,112	100
농지매매	3,933	285,564	3,856	285,564	100
임대차	6,244	145,857	6,537	145,857	100
교환분합	50	2,725	33	2,691	99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쌀 전업농수, 2006년 사업신청액, 전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 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 확대가 촉진되었다. 전체 벼 재배농가 903천호 중 8.9%(80.3천호)의 비중을 차지하는 쌀 전업농이 전국 벼 재배면적(955천ha)의 32%를 담당하여 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쌀 전업농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3ha이상 생산 농가가 48천호로 이중 쌀 전업농이 39천호(81%)를 차지하였다.

2007년 영농규모화사업은 지원규모를 8,392ha, 3,400억원으로 일정규모 농가(2~6ha미만)에 집중지원, 쌀전업농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사후관리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등 사업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게 2007년에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의 일부 지원방식 등을 부내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를 거쳐, 개편하였으며,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농지를 논 중심에서 밭까지 확대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논 30천원/3.3㎡, 밭 35천원)에 포함된 10% 자부담을 폐지(인상효과 11%)하며, 농가당 매매지원 상한면적을 20ha에서 10ha로 축소하여 경쟁 가능한 지원규모로 조정하였다. 또한 쌀 전업농 선정·관리를 시·군에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촌공사로 일원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지와 농업사무관 이영식)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여 벼를 재배하고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연령이 63세이상 69세이하인 고령농가가 소유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며, 임대하는 경우는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시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70세이상 72세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공히 ha당 2,977천원을 1회에 걸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지급상한은 재정범위를 감안하여 2ha까지로 되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3,709ha 14,391백만원으로 이 중 매매이양이 566ha 3,963백만원, 임대이양이 3,143ha 9,389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72.7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373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189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49.6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49.1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1.0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2006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6 계획(A)		2006 실적(B)		집행율 (B-A)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4,818	17,491	3,709	14,391	82
사업비	4,818	16,452	3,709	13,352	81
운영비	-	1,039	-	1,039	10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2007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지원규모를 2,000ha, 11,263백만원으로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적정 사업물량 편성, 지급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대상 사후관리 추진 등을 통해 사업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경영이양직불제 개선방안('07.6)을 비준안 발효 전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개선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농지는 진흥지역 내 논에서 진흥지역 내 밭을 포함한 농지로 확대하고, 임대이양 지급단가¹⁾도 크게 상향 조정하며, 대상연령은 63~69세에서 65~70세로 상향조정(지급기한은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부 소득지원과 행정사무관 홍만의)

다.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

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규모화 및 계열화를 통한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판매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작목반·영농조합을 계열화함으로써 일선조합이 실질적인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고, 일선조합은 다시 광역의 연합조직에 계열화하여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작목반·영농조합과 같은 기초생산자조직은 생산에 있어서 정보교환 등 생산활동에 치중하고, 수확후 관리, 소비지 출하 등을 일선조합이 수행하도록 하며, 광역의 연합조직은 유통정보, 신상품개발, 브랜드화, 판촉 등 마케팅 활동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조직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1) 임대이양 단가를 현행 ha당 2,977천원, 1회 지급하던 것을 ha당 연 3,000천원을 최장 10년간 지급(5~10배 증가)

이와 함께 생산자가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중심의 공동출하사업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013년까지 200개소의 산지유통전문조직과 80개소의 공동마케팅조직을 선정('07년 현재 전문조직 276, 공동마케팅조직 19)하여 육성하고 유통정보의 수집·분산,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등 품목별 지도·지원의 중심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연합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유통혁신과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을 담당하는 품목별 전국협의체 결성을 촉진(2007년 31개 연합조직)함과 아울러, 해당품목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연합조직에 자조금 조성을 위해 2006년 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65억원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자율에 의한 수급조절능력이 배양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광하)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7년 종합자금지원은 2004년 통합한 신규후계농자금을 2007년 분리함으로써 1999년 시범사업 이후 총 25개 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지원규모 10,261억원(농특자금 1,539억원, 농협자금 8,722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수시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공급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까지실적	2004실적	2005실적	2006실적	2007계획
합 계	1,493,753	753,568	823,228	956,658	1,026,100
농특자금	602,650	117,079	150,196	175,217	153,898
농협자금	891,103	636,489	673,142	781,441	872,202

2003년에는 3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관광농원 개발, 농촌민박마을 조성, 자가배합 사료제조 시설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였으며, 2004년에는 2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산지일반가공육성, 전통식품개발,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객토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통합하였다. 2005년에는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1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을 통합, 2006년 농기계보관창고사업 통합 그리고 2007년에는 후계농업인육성자금을 제외하여 총 25개 농업분야 융자자금을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중금리의 하락추세와 어려운 농업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어 지원하였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는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중 농업종합자금제도의 통합이 바람직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실화율을 낮추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도 남아 있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의 사전 감지,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컨설팅사업과 연계 등 사업성공위주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농업사무관 박정훈)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젊고 능력있는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일정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현재 후계농업인 사업은 35세미만자를 지원하는 창업농제도와 45세 미만자를 지원하는 신규후계농업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에 창업농 1,044명, 신규후계농 499명을, 2007년에는 창업농 1,034명, 신규후계농업인 473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는 특·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1인당 2천만원~2억원의 사업비가 차등지원된다.

특히, 2003년까지는 창업농에게 영농정착단계에서 연리 4%의 장기정책자금 융자와 함께 창업농 교육을 지원하던 것을, 2004년 정예인력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영농정착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자금지원조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우선, 영농정착단계에서는 잠재농업인력의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농업인턴제와 대학생창업연수제를 도입하였다.

농업인턴제란 44세 미만의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해 선도농가에서의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도농가에게 월 6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 지급하는 보수의 50%내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2006년, 2007년 각각 100명씩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창업연수제란 농과대학에 재학중인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이론, 실습 및 체험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입하여 2006년에는 15개 대학, 200명을 대상으로 2007년에는 15개 대학,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학생 1인당 3백만을 연수기관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농정착단계에서는 후계농업인 자금의 금리를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금지원 한도도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창업농에 대한 교육도 기존의 공통교육, 경영기술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세부교육내용에 따라 공통이론, 공통전문 및 경영기술교육으로 개편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정착후에는 창업농의 영농초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창업농후견인제를 도입하여 창업농에 대한 전담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농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된지 5년 이상된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 확보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농림부 경영인력과 주무관 김수진)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인 제도는 1994년 농업생산 외에 가공·유통 기능까지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법인의 육성 근거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역할이 컸다.

이러한 농업법인이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4년 제1차 농업경영체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총 17개 추진과제 중 14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이어 2006년에는 제2차 농업경영체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1차 활성화방안에서는 농업소득세를 2008년도까지 면제하고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농업법인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 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을 확대(1/2 → 3/4)하였다. 이어 2차 활성화방안에서는 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전문투자펀드를 조성('06년 100억원, '07년 200억원)하고 농업법인세 면제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농업법인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의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법인경영체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농업법인이 세제혜택, 농지소유 허용 등 많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선량한 농업법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군수가 주기적으로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장기 휴업 또는 휴면 법인은 해산을 유도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농업법인이 창업보육 혜택을 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05, '06 각 1개소, '07 4개소)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제도에 농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07.2)하여 선도 농업법인이 인증 받고 정책지원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농업법인의 담보 및 회계투명성 부족, 소극적 대출 경향으로 정책자금을 배정받아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협위주에서 우리·전북·제주은행으로 확대하고('08년부터 시행예정), 농업회계기준 정착과 농업법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법인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nno-biz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5억원→ 30)하였다.

또한, 농업법인에 농업전문투자펀드 등 투자방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나 BT등 고수익분야로 편중되거나 민간부문의 투자 참여가 미흡하므로 2011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2006년에는 1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2008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전문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을 농·축산업과 식품, 유통, 농촌지역개발 등을 포함한 농업분야와 기타 농업외분야로 나누어 농업분야에 투자가 더 많이 집중(60%)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농산물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 경영주의 경영역량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기업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농가조직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농업분야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라) 농업법인의 경영·기술·정보화 기반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화 기반이 부족하고, 농업법인 성장에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이 중요한 요소이나 상품 개발 등 사업화 기술 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기법, 특허 등 컨설팅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다.('07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또한, 농업법인의 연구개발 참여비중을 확대(2006: 총사업비의 6% → 2010 : 20%)하며, 과제선정 평가위원단에 농업법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협력하여 농업법인의 특허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농업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체조직 기능 증진 효과, 영양학적 유용성 등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2006.12월)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말에서 3년 연장하고, 2009년 12월까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비과세하되 농업외 소득은 14% 분리 과세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2006년 12월말 도래되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비닐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화훼 종자류(종구·종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도록 하였다.

특히, 1차 대책 수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문제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농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부 경영인력과 주무관 이경미)

(3) 농업교육 체계 개편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농업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농업의 핵심역량이 노동, 토지, 자본 중심에서 지식, 정보,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적자원 중심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농촌 지도기관, 농과계 대학,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농정과 연계하여 농업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품목별 신기술 보급, 농가 경영능력 제고, 농업인 조직화·브랜드화 등 교육목표를 구체화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의 품질 향상 및 돈되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수요자 중심 농업교육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지자체의 교육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농업교육협력체의 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참여 확대 및 조정역할도 강화하였으며 농업교육정보시스템 확충 및 교육모니터링 평가 강화를 통해 교육정보 수집부터 평가까지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자조금이 조성된 23개 품목단체 및 비자조금 6개 단체에 대해 각 품목별 고품질 생산기술, 안전성관리, 가공 및 생산 마케팅, 농가조직화 등 기술경영 혁신역량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특성 수요를 반영하여 93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진하였다

농업교육 경험이 있는 11개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이 개방 등 시장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35개 과정의 경영·리더쉽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농업인단체의 교육운영상 자율성·신축성을 확대하되,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 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불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집행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지역농업의 발전 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향상 교육,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조직화 교육을 2006년 6개도 4개 시·군에서 2007년에는 전국 9개도, 3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별 유사 중복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별·분야별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단위 통합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 2006년 전문연수기관을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역할 부여를 하였으나, 연수전문기관이 역량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하여, 선진농업기술 및 농촌개발 등 「테마별 기획 연수방식」으로 개선하고, 전문연수기관도 2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 하였다. 2006년 현장 체험교육 참여 농고 10개교를 2007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지역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에 대한 네트워크도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교육부-농림부-교육청간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미래 농업·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젊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특성화 농고의 선정, 특성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교원 국내외 현장 연수, 졸업생의 창업·취업·진학 등 진로 확대에 필요한 예산 등 각종 지원을 맡게 되며, 교육청은 특성화 농고를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농식품전문가로 교장 공모 및 산학겸임교사 활용 확대, 전국단위 우수학생 모집 등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교육인적자원은 농림부와 교육청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졸업 후 농업을 희망하는 농과대 2학년생을 대상으로 3년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농과대영농정착교육과정을 2006년 3개 대학에서 2007년 7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농과대 2학년생부터 졸업시까지 부전공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 준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단계별 최적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 귀농교육을 운영하였다. 귀농정보 탐색 그룹인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온라인 귀농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격적 귀농 준비 그룹 대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중 또는 수료후 영농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생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e-tutor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자문 지원을 제공하였다

농업교육기관의 모든 정보와 농업인의 교육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림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교육기관의 정보를 농진청, 농협 등 모든 농업교육기관의 정보를 통합·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였다. 2007년 교육과정을 교육 목표그룹 및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 농업교육분류제를 시범 실시하고, 현장중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고 컨설팅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2006년 122억원에서 2007년 13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2008년부터 농업교육 모델의 체계적 정립 및 본격 확산과 농업교육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영수준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등급분류제」 실시하고, 농업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경영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교육이수실적과 연계한 「농업인 자격제」를 도입하고, 농업 교육 우수기관 인증제도도 도입하여 대학, 농업인·품목단체, 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 부여 할 계획이다.

(농림부 경영인력과 주무관 문원탁)

(4)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설·원예, 축산분야에 대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1,009	1,080
사업비(백만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8,640	8,640
국 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4,400	4,400

2006년도에 전격적인 제도개편 이후 2007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먼저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컨설팅 사업과의 중복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기된 규모이하 농가 3농가 이상이 모여 컨설팅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지원하던 사업을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농가경영컨설팅에서 담당하도록 농업경영컨설팅지도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컨설팅 지원단가를 시·군에서 자율 결정토록 함에 따라 정가로 계약되어 컨설팅 질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어 지원단가를 정액으로 설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표준화 하였다.

* 개별농가 : 8백만원, 법인 : 10백만원,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RPC : 30백만원 이내

농가 및 컨설팅업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우처 쿠폰제를 시행하고 있다.

- * 시·군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쿠폰을 지급하면 농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희망업체를 선택하고 쿠폰과 자부담(계약금)을 업체에게 지급
- * 업체는 농가로부터 받은 쿠폰(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시·군에 컨설팅 서비스 대가 요구

아울러, 사전 교육을 통한 컨설팅 효과를 높이고 농업정책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제도를 사전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특히, 컨설팅을 농림부 정책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RPC는 농림부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현행 대로 시·도(시·군)에서 선정토록 하였다.

- ① 사전교육 이수농가 ② 경영회생 지원농가 ③ 2006 우수경영체 선정농가 ④ 퇴·액비 사용농가 ⑤ 지역농업클러스터 농가

또한, 컨설팅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진입이 용이하도록 2년마다 실시하던 컨설팅업체 인증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농림부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5) 농업벤처 육성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 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2001년부터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 (117억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2007년 농안기금 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4호 조합)을 결성, 농업분야벤처기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아이템에 대한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도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선정된 4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를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 전남대학교에 이어 2007년에도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총 4개소의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하여 농업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였다

(농림부 경영인력과 주무관 이경미)

(6)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가)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품목단체별로 시행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역발전의 혁신주체로서 소수정예 여성농업인 CEO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추진한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07년에는 ‘제2기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는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체험단을 구성하고, 품목 또는 분

야별로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연수과정을 농업인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연수원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전문강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의 심화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기획력 및 리더십의 재학습을 통해 관련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나)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05.1)을 마련하고, 20만호의 정예인력 육성방안을 구체화 한 바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우선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 등의 후계인력 육성사업 시행 시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토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선정 시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부여한 우선순위를 상향하는 방안(11위 → 3위)을 검토할 것이며, 부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신청시 주 사업 품목이 다를 경우 각각 지원 가능토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고, 부부창업농·부부후계농 우선 선발 및 우대지원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최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화훼 등 밭작물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기구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 개발되어 여성이 운전·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취급하기 쉬운 작고 가벼운 농기계를 개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생산지원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을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 농촌개발 리더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화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관광 분야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 참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농업연수원에 ‘농촌지역개발 여성리더’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농촌체험교사를 양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마) 출산농가 도우미제도 확대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모의 모성보호를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도입한 생산적인 복지제도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기간 연장 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및 내실화 유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내용 측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추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 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7년도에는 지원대상에 만 6세 취학유예아동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도 신규로 포함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방비를 포함하여 536억원의 예산으로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5세 10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게도 육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의 보육시설 등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2007년에는 법정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지원액의 35%(5세 5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하여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 밖에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 여성농업인정책 2007년 시행계획 수립

여성농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2006년도에 수립한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정책 200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다.

‘여성농업인정책 2007년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첫 시행년도인 2006년도의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였고 2007년 여성농업인정책의 로드맵을 담아 추진하고 있다.

(자)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4년 농업인력육성정책, 2005년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데 이어 2006년부터는 모든 농림사업을 잠정적인 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2006년은 농업정보서비스 지원사업을 포함한 1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고, 2007년에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을 자체평가 사업으로 지정하여 평가할 계획이고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을 자체 심층평가로 선정하여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여성정책과 사무관 신우식)

바. 농지은행제도

쌀 소비감소,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에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임대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등이 있으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①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부, 농지소유자,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정부는 별도 예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농지소유자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 및 잦은 임차인 물색의 번거로움을 해소와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등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안정적 영농과 낮은 임차료로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동 사업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 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대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사전 철저한 준비 및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당초 목표인 2,500ha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총 7,979건(3,820ha)을 수탁하여 6,906건(3,343ha)의 계약을 완료하여 농가당 평균 0.5ha 임대로 규모확대에 기여하였다.

2007년도에는 4,000ha의 수탁 실적을 목표로 하면서 8년이상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후 1년동안 자경한 농지에 한해 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투기 우려를 막을 계획이다.

②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환매권도 보장하고, 경영회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파산직전에 있는 농가의 회생을 돕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2006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신청자 378농가(942억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183농가(재해 20농가, 연체 163농가)를 선정하여 422억원(311ha)을 지원하였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자금 지원으로 경영위기농가들이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 수준 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감소를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6%) 대신 낮은 임차료(1%) 지급으로 농가부담을 감소하게 하여 불가피하게 파산해야 했던 농가들이 재기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200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6 계획(A)	2006 실적(B)	집행율 (B/A)
	금 액	금 액	
농지매입사업	42,200	42,200	100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20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당초 5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신청 실적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5천만원 지원기준에서 부채액 5천만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 선정도 농지은행

본부에서 도본부로 이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지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사.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육 및 육성자금 확대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임업기능인 영립단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 조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임업노동력의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1) 독립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우리나라 전체산림 6,389천ha 중 69%에 해당하는 4,403천ha가 사유림으로서 소유 규모가 1인당 2.2ha로서 매우 영세하고,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유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하는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에게 지역사회 임업을 선도하는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수의 조림·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비와, 임도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시설 사업비,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장기수의 조림 및 육림을 위한 임야매입비, 기타 산림경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 등 전문임업인 선발은 2006년도에는 본인사망 또는 경영포기 등으로 독립가 7명 및 임업후계자 18명을 취소하고, 독립가 23명 및 임업후계자 259명을 선정(선발)하였으며, 신지식임업인 5명을 추가 선정으로 독립가 387명, 임업후계자 1,805명, 신지식임업인 50명을 합하여 총 2,242명으로 확대(262명)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선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150명 이상 확대하여 2,400명이 넘을 것이다.

또한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이 임업경영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6도에는 60억원을 연리 1.5%~4%의 저리로 15~35년에 걸쳐 장기로 융자지원 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같은 조건으로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임업경영 능력향상과 의욕고취를 위하여 임업경영에 대한 교육과 선진임업국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에 임업후계자 118명에 대하여 산림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20명을 선발하여 일본임업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2007년도에 임업후계자 118명에 대하여 산림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20명을 선발하여 일본임업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2) 기능인 영입단 육성

우리나라 산림의 현황은 수령 40년 미만의 숲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유령 임분이 많은 임상으로 아직도 숲 가꾸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며,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감소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사업에 필요한 임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 영림단을 조직하고 교육을 통한 기술능력을 배양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기술적 산림사업 실행을 도모하고 있다.

임업노동력 양성을 위해 2006년도에는 44개 영림단(619명)을 신설하여 총 524개 영림단(국유림138개단, 민유림386개단)에 6,052명의 임업인력을 운영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영림단을 신규로 35개단(민유림 30개단/360명, 국유림 5개단/60명)을 조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림단원들의 기술능력 증진을 위하여 영림단의 구성원 중 60%이상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 등 임업 관련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임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2,2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0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경영지원팀 임업사무관 김시준, 숲가꾸기팀 임업사무관 이용권)

아.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1981년부터 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 총 14,538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하여 2,65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 하였으며, 2007년에는 345명을 선정하여 1인당 40백만원 범위내에서 총 120억원을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2) 전업경영인 육성지원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경영인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전문경영인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까지 2,401명의 전업경영인을 선정하여 1,2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102명에 51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어업경영체로 육성하였다.

(3) 선도경영인 육성 지원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어가, 수산계 학생,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총 53개소를 선정하여 4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에도 9명에 9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981 ~ 2006		2007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7,448	412,400	16,992	394,400	456	18,000
일반후계자	14,883	277,063	14,538	265,063	345	12,000
전업경영인	2,503	130,012	2,401	124,912	102	5,100
선도경영인	62	5,325	53	4,425	9	900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6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2006년말 현재 1,052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영어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생산기반 정비

(1) 우량농지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개 및 배수 기능 겸용이거나 흙수로로 되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필지규모를 3,000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는 분리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 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164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세 재원으로 추진, 2006년 봄마무리까지 101천ha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2006년 가을에 착수한 4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가을에는 4.6천ha를 착수하여 2008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쌀 산업 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농지 위주로 시행하기 위해 2003년에 당초 개발목표 200천ha를 164천ha로 축소 조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6년까지	2007년계획	2008년이후
◦ 사업량(천ha)	164	101	4	59
◦ 사업비(억원)	46,886	26,009	1,066	19,811

※ 마무리 기준, 20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농림부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2)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국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 밭작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 716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110천ha(15%)를 정비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6년까지 16,948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66%인 73천ha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에는 1,094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투자하여 4천ha를 정비할 계획이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6년까지	2007년계획	2008년이후
◦ 사업량(천ha)	110	73	4	33
◦ 사업비(억원)	25,794	16,948	1,094	7,752

(농림부 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 편

의를 도모하고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 35천km를 대상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산물 생산지, 유통시설간 농로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17,933억원을 투자하여 목표의 50%인 17.5천km를 확장 또는 포장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1,406억원을 투입하여 1.3천km를 확장 또는 포장할 예정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반시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개선과 도시인의 농촌 접근성 제고로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2006년까지	2007년계획	2008년이후
◦ 사업량(천km)	35	17.5	1.3	16.2
◦ 사업비(억원)	37,071	17,933	1,406	17,732

(농림부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4) 수리시설 개보수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2,965개소의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6,622개소로 51%에 달하고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3,320개소 중 85%인 2,836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용배수로의 경우도 간지선 43천km중 49%인 21천km가 흠수로로 되어 있어 누수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8,769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방조제의 93%가 설치된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예방을 위한 개보수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관리방조제 206지구, 지방관리방조제 3,284 지구 등 전국 3,490지구의 방조제, 배수갑문, 부대시설 대상으로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5,622개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117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1,117개 지구에 총 45,87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7년에는 수리시설 106개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11개 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81개 지구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개보수 대상		2006 까지		2007 계획		2008 이후	
	대 상	%	개 소	%	개 소	%	개 소	%
○ 사 업 물 량	12,259	100	6,856	55.9	198	1.6	5,205	42.5
- 농촌수리시설	8,769	100	5,622	64.1	106	1.2	3,041	34.7
-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117	56.8	11	5.3	78	37.9
-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1,117	34.0	81	2.5	2,086	63.5
사 업 비	127,265	100	45,877	36.0	4,704	3.7	76,684	60.3

※ 방조제는 반복 개보수계획 반영

(농림부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5)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235천ha로서 이중 지표배수개선 대상면적은 188천 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삼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은 47천ha로서 수령
 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2006년까지 우선 시급한 지표배수개선 위주로 추진하여 대상면적 188천ha 중
 134천ha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에는 119개 지구에 2,103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20개지구 4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73%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대 상		2006년 까지		2007년 계획		2008년 이후	
		%		%		%		%
◦사업량	235	100	137	58.3	4	1.7	94	
- 지표배수	188	100	134	71.3	4	2.1	50	26.6
- 지하배수	47	100	3	6.4	-	-	44	93.6
◦사업비 (지표배수)	43,252	100	26,936	62.3	2,103	4.9	14,213	52.8

(농림부 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6)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모든 농사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
 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2005년까지 총논면적 1,105천ha중 867천ha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수리답
 으로 조성되었으나, 수리답이라도 웬만한 가뭄(10년빈도)에 견딜 수 있는 논면적
 은 484ha(총논면적대비 43.8%)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까지 전체논 목표면
 적 1,100천ha중 900천ha 82%를 수리답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다.

2006년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 5.7천ha를 준공하였으며, 2007년에는 5.3천ha
 를 준공하여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착수를 억제

하고 시행중 지구의 조기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총논면적	개발대상면적	2005까지	2006실적	2007계획	2008이후
1,105천ha	1,100	867	5.7	5.3	223

자료 : 200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농림부

(농림부 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7)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규모화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거리 단축에 의한 교통환경개선·종합관광권 형성 등 지역경제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지구는 새만금을 비롯한 7개지구, 122천ha로 2006년까지 53%(38,136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3,550억원(국고 1,100억원, 농지관리기금 2,450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율을 58%로 제고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구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2006년까지	2007년계획	2008년이후	
계(7지구)	121,560	72,440	38,136	3,550	30,754	
금 강(Ⅱ)	43,000	7,259	4,259	520	2,480	1989~2008
미 호 천(Ⅱ)	4,430	2,916	2,370	120	426	1989~2010
홍 보	8,100	3,762	2,785	250	727	1991~2010
영산강(Ⅲ-1)	13,160	7,124	4,099	251	2,774	1985~2009
영산강(Ⅲ-2)	7,840	4,452	2,417	300	1,735	1989~2012
영 산 강(Ⅳ)	16,730	7,204	820	210	6,174	2001~2008
새만금	28,300	39,723	21,386	1,899	16,438	1991~2011

(농림부 기반정비과 시설사무관 박중훈)

나. 농업의 기계화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가) 추진배경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 촉진시책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해소,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유통 등 공급문제, 농기계 산업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기계화촉진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 21세기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의 기본 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농업기계화사업은 벼농사 일관 기계화, 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으나,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 발작물용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및 안전관리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향후 추진할 기본계획의 주요목표를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관리로 비용절감, 농업인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및 인프라 구축, 지자체 기계화사업 지원으로 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농기계 시험평가 제도 개선, 공급제도 개선 및 생산자금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나)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정책자금의 효율성제고와 농업인의 적정한 농기계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1,000만원이상의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고 2006년부터 1,000만원미만의 농기계는 정책자금 이차보전자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행정구역 중심의 5단계로 되어 있는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를 A/S능력 중심의 대·중·소형 3등급으로 조정하여 A/S능력 향상을 유도하였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03년부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 중심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을 2006년 12개소에서 2007년에는 2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0개소로 확대하고, 사업단가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박상민)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2007년에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제도의 기본을 유지(지원대상자, 지원대상 농기계, 공급자의 기준, 신기술농기계와 발작물·축산전용 농기계에 대한 우대지원 등)하면서, 쌀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90%까지 우대 지원하여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발작물의 기계화를 유도하였다.

2007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계획은 총사업비 7,341억원(융자 4,139, 차부담 2,202)으로 38.2천대분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기계 적기 공급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완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박상민)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가)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2007년에는 126개 업소 농기계대리점등을 대상으로 168억원의 수리용부품 확

보 자금을 지원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A/S실태 종합평가제를 계속 추진하여 사후봉사 실태가 부실한 제조업체와 사후봉사업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사후봉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B/S(사전서비스)실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주관하에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지역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수리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사후봉사업체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요원 139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사를 660명 양성할 계획이다.

(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을 증진을 위해 일반농가 보관창고 설치비를 70%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수요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다) 중고농기계 유통활성화 촉진

중고농기계 거래시장은 중고농기계 적정판매가격 산정이나 품질보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20개소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중고농기계의 품질보증제도를 중고트랙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중고농기계 거래로 인한 농업인 피해방지와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를 경과한 중고농기계에 대하여도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토록 하였으며, 융자지원액도 기종별·연도별 기준금액을 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07년부터 내용연수와 실사용

연수를 감안하여 지원하도록 보완하였다.

(농림부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박상민, 농업사무관 백영현)

(4) 농기계 생산지원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신기술농기계공급 촉진과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를 위하여 2007년에는 40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중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기계생산 원자재구입 비축 지원에 31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에 81억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비축 자금은 연리 3%, 용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며, 시설농업기자재지원은 연리 3%,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다.

(농림부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백영현)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총 2,596.600kl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의 공급 한도량을 배정받아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지역조합별로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2,480천kl의 면세석유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2006년 면세액은 1조 3,119억원이며, 2007년 면세액 추정은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인 면세내역은 부가가치세 10%, 교통세는 유종별 리터당 휘발유 505원, 경유 358원, 특별소비세는 등유 134원, 중유 15원, LPG 40원이고, 교육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5%이며, 등유는 특별소비세의 15%이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32.5%이며, 판매부과금은 등유에 한하여 리터당 23원이다.

또한,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되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림부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백영현)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정부는 1991년부터 쌀 주산지에서 벼를 일관처리(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함으로써 수확후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쌀 품위향상 및 산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된 RPC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1년까지 328개소(농협200, 민간128)가 설치한후 2002년부터 쌀 가공시설 과잉문제가 대두되어 신규설치 지원은 중단되었다.

한편, RPC의 수확기 농가벼 산물처리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건조·저장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는 건조·저장시설(Drying Storage Center)을 설치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전국에 799개소를 지원하였다.

특히, 2006년도에는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환원하고, 사업량 및 예산도 2005년 50개소에서 2006년 110개소, 24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1999년이후 동결되었던 지원단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일반시설 4.5→5.5억원, 통합 7→9억원, 저온저장시설 2.5→3억원)하였고, 민간사업자의 보조율을 30%에서 40%로 10%p인상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에 기여하였다.

2007년에도 건조·저장시설 110개소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며, 국고 258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화된 통합 RPC 시설지원(10개소, 45억원) 및 고품질 쌀 브랜드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저온저장시설도(10개소, 15억원) 확충할 계획이다.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 사업량	22	25	64	81	90	85	76	81	44	71	50	110	799
- 국고보조	38	36	87	118	164	190	145	157	79	126	93	249	1,482

(농림부 식량유통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 반 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 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있다.

2007년에는 내재해시설 기준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비닐하우스의 구조를 보강하며 우수규격·자재를 보급하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구축과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게 된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농림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과종수확 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 채소특작과 사무관 박봉수)

(3) 축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섬유질 및 자가배합사료 제조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LPC)을 1994~2001년까지 전국에 총 7개소를 건설·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도축장에서 지육으로 유통되는 낙후된 유통체계를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되었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이 실현되었다. 또한, HACCP 제도 운영으로 도축장 등 축산물 생산시설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었다.

※ LPC 건설비 : 총 156,550백만원(용자 89,612, 자부담 등 66,938)

※ 축산물 생산시설(도축장·축산물가공업체 등) 시설자금 예산 :

(2005) 32,288백만원 → (2006) 24,450 → (2007) 18,450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김대균)

라.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1)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

광 등의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5,623억원을 투자,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을 포함하여 2006년까지 전국 152개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내의 어업생산기반시설 사업 등에 5,2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24개 권역내에 358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2008년부터 2단계 72개 권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낙후어촌의 정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되 도시민의 어촌정주지원방안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별			2005까지	2006	2007	2008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업량	완 료	135	17	-	80
		계 속	17	-	24	16
	사 업 비		87,885	38,646	35,750	317,250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식품산업은 농업 후방 관련 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가공 및 외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식품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발전시책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정비 등 본격적인 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업체에 대한 수매자금으로 2007년 1,01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 주류제조면허 추천·명인 지정업체, 일반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07년에는 농업종합자금으로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식품업체의 위생시설 향상을 위해 2007년 150억원과 외식 및 전처리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가 위축되고 식품 소비침체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농산물가공업체도 부도 등 일부 경영부실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영세·한계업체 222개소 퇴출로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지원에서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마케팅에 대한 컨

선텩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판매·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는 우리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준비로 현재 전통한식에 대한 조리법 표준화 등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부 식품산업과 사무관 전한영)

나. 종자산업의 육성

19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과 21세기 주요산업으로 생물산업의 부상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신품종육성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2007년말 현재 150여 업체이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종육종기술 수준이 낮고 경영규모 등이 영세한 편이므로 이들 종자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 중심으로 품종육성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보다 유리한 지원조건(금리 4% → 3%)인 농업종합자금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1995~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
지원금액	15,057	2,380	2,965	2,280	1,935	1,983	870 (종합자금제 전환)

무, 배추, 고추 등의 세계적인 품종육종 기술을 활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6년 수출실적은 20,010천불로 1997년 대비 67.8%증가하였다.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품종육성자의 신품종육성의욕을 고취하고자 품종보호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중이며, 품종보호제도 시행당시 27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2007년 현재 189개 작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2009년까지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02.1)하였으며, 앞으로 국내 신품종의 국외보호와 품종육성자에게 외국의 품종 육성관련 정보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07.8)하였으며, 보존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위해 농업유전자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지숙)

다. 종축산업의 육성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한 우											
-18개월체중(kg,♂)	500.5	505.0	507.3	509.6	512.0	522.1	532.2	542.2	564.5	571	
-1등급출현율(%)	18.4	15.3	18.8	24.8	29.8	35.2	33.3	35.9	47.9	44.5	
○ 젖 소											
산유량 (kg/ 305일)	일반농가	5,882	5,972	6,135	6,539	6,749	7,017	7,117	7,286	7,417	7,584
	검정농가 (초산우)	7,171 (6,752)	7,252 (6,694)	7,629 (7,032)	8,086 (7,445)	8,364 (7,688)	8,761 (7,962)	8,899 (8,032)	8,935 (8,019)	9,014 (8,142)	9,271 (8,362)
○ 돼 지(요크셔,♂)											
-일당증체량(g)	913	929	982	973	945	1,018	1,058	1,065	1,060	1,027	
○ 닭											
-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284	281	299	279	285	297	307	320	320	312	
- 육용계 체중 (6주,g)	2,416	1,948	2,195	2,300	2,127	2,285	2,431	2,544	2,650	2,530	

2006년에 주요 가축 중심으로 추진한 가축개량 시책을 살펴보면, 한우개량 시책은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의 도입이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된 암소 50두 내외(목표 100두 이상)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호씩 총 40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000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여 검정한다. 이 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하여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육종농가는 2005년 12개소(농가 10, 도센터 2), 2006년 12개소(농가11, 도센터 1), 2007년 10개소(농가 10)로 총 34개 육종농가를 선정 추진하였다.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장기적으로 적정 두수인 60천두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한다.

2006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실제 참여한 농가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14,717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관리대상 등록우 중 기록관리가 되는 78,886두와 이 등록우에 생산된 송아지 60,611두에 대하여 4,73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밖에 2006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38두와 보증씨수소 20두를 새로이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41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1,802천두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을 받는 낙농가 3,822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194,315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중 검정성적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193,223두에 대한 검정비 총 2,079백만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2두 선발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6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젖소 정액 381천두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2006년도에 유우군 검정농가의 두당 평균 산유량이 일반 낙농가 보다 1,687kg 증가하여 두당 22.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개량의 성과를 보면 요크셔 수퇘지의 경우 검정소 검정에 의한 일당증체량은 1997년 913g에서 2006년 1,027g으로 12.5%나 증가하였다.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1997년 2.36에서 2005년 2.33로 1.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1997년 284 대비 2006년 312로 9.8% 향상되었으며, 육용계의 경우 평균체중(6주 기준)이 1997년 2,416g 대비 2006년 2,530g으로 4.7% 늘어났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종축을 수입하여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종돈 40천두에 대한 능력검정사업을 하여 돼지개량을 촉진하였다.

닭 개량을 위해 종계 40천수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소요 검정비를 축산 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검정성적은 양계농가들에게 제공하여 양계농가들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는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 증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개량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육질 중심의 개량체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과정에서 수소 위주로만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암소 유전능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으나 앞으로는 암소의 유전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단계 브랜드 발전대책으로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고능력 암소 보급 및 확보와 브랜드경영체에 맞는 보증종모우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우개량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젖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율을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하에 6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보조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7년 1월 종축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 보급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돼지개량의 경우 현재 종돈검정소(경기 이천)의 검정시설이 재래식이고 노후화 되어 효율적인 검정 및 가축방역을 위해 현대화시설로 검정소를 신축(지원액 13억원, 완공일 2007년 6월) 하였다. 또한 우량 종돈을 선발·이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종돈 수출

을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현지 세미나 개최 및 바이어 초청을 통해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닭 개량은 종계 대부분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계농가에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화된 닭경제능력검정소 신축을 위해 2008년부터 4년간 25억원을 지원하여 첨단시설의 닭경제능력검정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중돈·중계·중오리업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서재호)

라. 사료산업의 육성

(1) 2006년도 실적

(가) 사료 수급

2006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1,271천톤으로 전년(20,283천톤) 보다 4.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7,049천톤, 조사료가 4,222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5,639천톤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하였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용 8.5%, 양계용 1.5%, 양돈용 0.1%씩 증가한 반면, 젖소용은 3.0%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한육우, 닭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젖소의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증가되었다. 특히, 말·오리 사육마리수의 증가로 기타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29.2% 증가하였다.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4	2005 (A)	2006 (B)	증감율 (B/A)
합 계	17,116	23,302	19,289	19,871	20,283	21,271	4.9
농 후 사료	11,173	15,700	15,897	15,787	16,152	17,049	5.6
- 배 합 사 료	10,529	14,856	15,105	14,941	15,278	15,639	2.3
- 농가자급사료	644	844	792	846	874	1,356	55.1
조 사 료	6,003	7,763	3,392	4,084	4,131	4,222	2.2
- 사료작물 및 목초류	2,832	2,498	992	1,153	1,298	1,326	2.2
- 산야초, 볏짚등	3,171	5,265	2,400	2,931	2,833	2,896	2.2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4년 7월 이후 옥수수 가격 및 환율 하락 등으로 2006년 6월까지 배합사료 가격이 인하되었으나, 11월부터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다소 인상되었다.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A)	2006 (B)	증감율 (B/A)
합 계	10,529	14,856	15,105	15,436	14,941	15,278	15,693	1.5
양 계 용	3,274	3,766	3,867	3,907	3,836	4,203	4,267	1.5
양 돈 용	3,551	4,725	5,215	5,663	5,419	5,170	5,175	0.1
젖 소 용	1,790	2,905	1,891	1,774	1,632	1,587	1,539	△3.0
한육우용	1,667	3,681	3,340	2,926	3,045	3,293	3,574	8.5
기 타	247	589	792	1,179	1,009	881	1,138	29.2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자급도 향상방안을 모색 중으로, 산지 초지개발과 청예 및 담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6년에 신규로 32h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나) 사료 산업 지원

사료의 품질·안전성 및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06년 용자 876억원을 사료제조업체 등에 지원하였으며, 사료 관련 공무원, 생산자단체, 사료업체 종사자 등에게 사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등 정책·제도 관련 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사료의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료공장 HACCP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35개소를 인증하였으며, 2006년 57개소로 확대하였다. 이는 전체 인증대상 배합사료공장 96개소의 59% 수준이다.

국내 사료공장 종사자들은 사료공장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욕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자금(용자) 지원시 HACCP 인증 사료공장을 우대하는 점도 보다 원활한 추진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2) 2007년도 계획

(가) 사료 수급

가축용 사료 수요량은 국내 가축의 사육동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바, 젖소는 사육두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다른 가축은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 또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사료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하반기 이후 바이오 연료용 사료곡물 수요량 급증 등의 영향으로 국제 사료곡물가격이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료 원료의 수급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료원료의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원료 구매에 필요한 용자 규모를 확충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상승폭이 높은 수입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세율 인하와 대상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사료업계에서는 사료원료 구매방식을 개선하여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수입 원료의 종류 및 수입국을 다변화하며, 가능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필요한 원료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사료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사료 생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이 축산농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사료 산업 지원

2007년에는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구체화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되, 안전성 관련 제도는 보완함으로써 사료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료의 품질·안전성 및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용자 지원,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지속하는 한편, 사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료공장 HACCP 인증 업체수도 2006년 57개소에서 2007년 65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증대상을 현행 배합사료공장에서 섬유질사료 가공 공장까지 확대·적용되도록 인증 매뉴얼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권동태)

마.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1) 동물보호법 개정

현행 동물보호법은 '88올림픽 전후로 동물보호와 관련한 동물보호단체 등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1991년 제정하였으나 학대행위 금지 등 동물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반감한 상태였다.

2003년 12월 한국동물복지협회 등 6개 동물보호단체와 법 제정 방향 협의를 거쳐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개정하기로 의견이 접근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는 학대행위의 내용 구체화, 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우리부에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수의사협회 등 관계단체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 부처·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 후 2006년 9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 이외에 2006년 11월까지 5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됨에 따라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5건을 일부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여 2006년 11월 29일 농해수위에서 의결처리 하였다. 대안은 정부안에서 빠졌던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가 도입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위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벌금을 최고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였다.

법사위에서는 동물학대행위 중 불확정 개념인 고통을 주는 행위, 굶주림과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 소유자에게나 시장이나 군수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한 후 2006년 12월 21일 의결하고 본회는 2006년 12월 22에 의결되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보받은 전부개정안을 2007년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26일 공포하였고 2008년 1월 27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의 등록제 도입(안 제5조),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안 제6조),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안 제7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안 제14조),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안 제19조),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2)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농림부, 검역원, 축산연구원이 T/F팀을 구성하여 2007년도 말까지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의원별 입법안의 기본취지와 의원별 지적사항 등을 기초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과정 및 법안발의단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내용은 기타 동물의 정의,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민간단체 정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설 확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 임무, 위촉 및 직무범위 등이 포함된다.

시행규칙은 동물의 등록방법 및 등록사항 등,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 동반시 조치사항, 동물학대 행위 중 수의학적 처치 등 정당한 사유,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절차,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고시·규정·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 마련(삭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8년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위하여 동물보호 홍보, 교육을 위한 예산(8억원)과 인력(2명)을 확보 할 예정이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서기관 김문갑)

바.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수산물의 소비가 웰빙 추세에 따라 2005년 4,169천톤에서 2006년 4,568천톤으로 (399천톤 증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도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생산량은 156만톤 수준에서 소폭 감소(1만톤) 추세이며,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품질기준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품질인증제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고 가공산업 활성화 및 고품질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활어회 중심의 회문화 개선을 위한 싱싱회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해 수산식품의 기준강화 및 품질 향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음식문화의 국제화 추세 등으로 가공품에 대한 소비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산물가공품 생산에 있어서도 소비자 요구 및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편리화·다양화·고급화 전략과 함께 국민보건 위생에 적합한 가공품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도는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감천항 가공단지 지원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 선별 지원(17개소 61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4개소 30억원), 젓갈타운조성(1개소 8억원) 및 굴 패각제거업시설 현대화(25개소, 15억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싱싱회 가공시설 활성화 및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판매장 15개소를 개설, 지원(9억원)하여 싱싱회 가공공장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싱싱회 공급체제를 구축하여 싱싱회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품목

에 건제품, 냉동품, 햇감용 등에서 활어 등을 추가하고 인증품목 수를 112개에서 136개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국의 명성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만족과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최초로 연내에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2006년말 기준)

구 분	계	해조류	절임식품	조미가공	건포류	기 타
공장수 (개소)	2,994	528	522	369	235	1,340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 장 수(개소)	3,484	3,388	3,008	3,870	2,937	2,994
생 산 량(천톤)	1,547	1,444	1358	1,529	1,559	1,547
평균생산량(톤)	444	426	451	495	530	517

아울러,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등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 요

농림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와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농림업과 관련한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농산업기술개발, 핵심전략기술개발, 현장적용기술개발의 3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운용해 왔다. 2006년말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연구기획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서 공모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정부 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민간 자유응모형)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7년부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유형	기획과제(지정공모형)	일반과제(자유응모형)
개발대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 등 주요 핵심기술 * BT실용화, 식품가공, 식품 안전성 확보, 품질고급화 등 ◦ 농림기술로드맵(ATRM)을 통해 도출된 중요도가 높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화기술 * 부가가치 제고 첨단신기술, 신제품 육성기술 등

(2) 연구개발 추진현황

2006년말까지 총 3,902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3,138개 과제로 이중 602개 과제는 산업체 및 농가에 이전되었고, 1,104개 과제는 산업체에 이전 추진 중에 있으며, 1,432개 과제는 교육지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64.8%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1860건, 국내외 논문발표 7,074편 게재, 유상기술이전 168건을 실시하는 등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다.

< 완료과제 연구성과 활용현황 >

(단위 : 건, %)

사업구분	합 계	산업체활용	농가활용	교육지도	정책활용	활용추진중
농 산 업	115	40	-	15	1	59
핵심전략	83	16	-	31	11	25
현장적용	2,940	158	388	1,203	171	1,020
합 계	3,138	214	388	1,249	183	1,104

※ ① '06. 12. 31. 기준임

< 연구개발 기술·산업적 성과 >

특허(건)		논문게재(건)		기술실시계약건수	
출 원	등 록	국 내	국 외	유상이전	무상이전
1,800	1,200	5,644	1,430	168	67
(156)	(165)	(433)	(127)	(27)	(9)

※ ()는 '06년도에 발생한 성과임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한 최근의 우수 기술개발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체 기술이전 우수과제 내역 >

(단위:백만원)

연구성과	제 품 설 명 (또는 과제명)	연구기관 (생산업체)	연구비 (기술료)	경제적효과 (매출액 등)
천년약속	버섯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 개발	(주)천년약속	280 (30)	○ 2004년 4억 ○ 2005년 50억 ○ 2006년 450억
씻어나온 쌀	알칼리 이온수로 씻은 뒤 급속 건조시킨 쌀로서 쌀벌레나 곰팡이발생을 방지	한국식품연구원 (주)라이스텍	169 (50.7)	○ 2004년 90억 ○ 2005년 120억 ○ 2006년 150억
희토비료	희토광물(Rare Earth) 이용 농용 신소재 개발	(유)동성엔씨티	270 (32)	○ 2005년 68억 ○ 2006년 56억
호도 가공제품	호도의 고품질 상품화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한국식품연구원 (대양영농조합법인)	135 (전액 감면)	○ 2004년 20억 ○ 2005년 32억 ○ 2006년 36억
레스베라트롤 고품유 포도	수확 후 생체대사 제어기법을 이용한 레스베라트롤 고품유 포도 생산기계 개발	한국식품연구원 (주)휴시스	300 (30)	○ 2005년 0.5억 ○ 2006년 5억

(단위 : 백만원)

연구성과 (제품 및 기술명)	제 품 설 명 (또는 제명)	연구기관 (생산업체)	연구비 (기술료)	경제적효과 (매출액 등)
저수지 자동 수위계측기	농업저수지 자동 수위계측기 개발연구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아이에스텍주)	200 (42)	○ 2006년 31개소 설치 → 설치비 15억 절감 ○ 2011년까지 1,500개소 보급 예정
베리메이트	고질적 토양전염성 병해인 딸기 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미생물살균제의 개발과 상용화	바이오 쉘드	240 (37)	○ 2006년 첫 출시 이후 (주)영일케미컬과 독점 납품계약 체결 (4천2백만원)
샐러드용 소스 개발	양상추, 양배추의 최소가공 및 샐러드용 소스 개발	한국식품연구원 (베지코리아영농조합법인)	134 (무상)	○ 2006년까지 10억
활엽수용 24월 용기 개발	고품질 용기모 생산 시업기술 개발	산림과학원 (신일사이언스)	240 (29)	○ 2006년까지 4억원 ○ 2007년 5억(예상)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농업사무관 노영호)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 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업을 21세기 종합해양 과학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1990년) 및 농특세(1994년)를 재원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수산부문 기술개발사업을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년에는 학계·연구기관·산업계·행정기관 등에서 수요 조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서 평가선정한 지정과제와 함께 자유공모과제를 모집하여, 실용성이 있고 산업화가 가능하며 수산기술개발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 과제현황

2006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은 “어선연료비절감을 위한 저급유사용시스템 표준화 등에 관한 연구” 등 총 73개 과제(신규사업 19과제, 계속사업 54과제)를 선정하여 5,650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2006년말까지 총 482개 과제에 대하여 72,729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409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73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가 완료된 409개 과제 중 39개 과제가 산업체와 기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전이 되었고, 국제특허 11건, 국내특허 149건을 등록하는 등 연구 성과가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

□ 수행과제 및 사업비 지원 현황('06.12.31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종 료		수 행 중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합 계		482	72,729	409	67,059	73	5,650
농특회계	수산기술개발	375	61,613	302	55,963	73	5,650
일반회계	수산정책연구	107	11,116	107	11,116		

※ 수산정책연구는 2006년부터 출연금(303목)에서 용역비(206목)으로 전환하여 해당부서에서 수행

□ 성과현황('06.12.31기준)

(단위 : 건/천원)

구 분	기술실험약		특허등록		논 문	
	건 수	협약액	국 외	국 내	SCI	일 반
계	39	1,931,957	11	149	90	952
수산기술개발	31	1,459,202	11	135	88	807
수산정책연구	8	472,755	-	14	2	145

(해양수산부 해양개발팀)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1) 농업분야

농림부에서는 제1차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업·농촌의 정보화 수준이 도시 및 타 산업 부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대응이 늦을 경우,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로 소득과 생활·문화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농업·농촌 정보화 5개년 계획(2007~2011)을 지난해 12월 수립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에는 농촌의 u-Life 현실화로 풍요롭고 편리한 농촌에서의 삶을 보장하고, 소비자 지향의 경쟁력 있는 고소득 u-Biz 농업으로의 재도약, 지능기반의 농촌정보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보격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객중심의 차세대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최적의 컨버전스화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5개년 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각 사업별 정보화촉진계획에 담아 수정·보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농촌정보화를 더욱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농림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도·농간 정보통신기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까지 초고속 통신망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약 99%가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다. 2007년말까지는 50가구 미만 지역과 위성을 희망하는 농어가 등 농어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박경아)

(나)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교육내용 및 교재를 기초·중급·전문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집중화·차별화하고,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 중 농업인이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기초·중급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하위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 22개 농업계대학을 통해 분야별 농업용 SW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공모과정) 개발을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강화하였다. 농업정보119요원 및 정보화선도자 등 교육 강사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보완·강화하고 교육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재택·반복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추가 개발 및 사용자 확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Blended Learning)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농촌현장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버스교육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충분한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농업정보119 서비스는 만족도조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방문교육 및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전국 9개도 90여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화선도자 및 원격지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방문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향후, 정보화교육은 정보 활용수준과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정보활용 모델을 발굴하여 실생활·영농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교육생의 이력·콘텐츠·강사·장비 등의 공유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종합제공-정보화수준 자가진단(ICT)-교육수강 추천의 사이클을 고도화·지능화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교재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북(Book)으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교육홍보 동영상CD 및 온라인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 농업인 정보화교육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1998~2004	2005	2006	2007(P)
총 계	568,625	397,017	61,229	58,058	56,850
기초교육(컴퓨터·인터넷활용)	154,866	138,167	7,144	7,047	5,055
중급교육(농업정보활용)	69,903	54,537	6,607	5,264	3,495
경영·회계 S/W(중기)	6,041	-	1,766	2,140	2,625
분야별 전문교육	18,757	16,111	1,056	274	375
농업정보 119서비스	101,462	69,388	12,074	10,095	10,000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10,278	8,708	570	512	500
정보화선도자	116,706	27,563	23,943	29,751	34,800
자체교육(농협, 기술센터)	46,666	38,597	8,069	2,975	-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11,186	-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	-

자료 : 농림부 정책평가통계관실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다)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i) 2006년 이행실적

농업인이나 소비자에게 출하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한층 강화된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을 이용,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유통가격정보는 물론 생활·문화·교육·의료·농촌관광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영농활동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음 그린넷(green.daum.net)을 통해서 30개 농림유관기관(137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농업 관련 정보를 연계, 농업인, 도시민, 학생 등이 여러기관의 농업·농촌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농촌정보화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등 도·농교류 활성화와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우리의 주 농산물 수출입 상대국인 중국의 각 성 도·소매가격정보를 농업인에게 수집·제공하고자 중국 농업부와 유통가격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 방지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7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농산물의 생산관리, 자재구매 관리, 판매·정산관리 등을 함께 있어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컨설팅을 실시, 농업경영체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구축한 1,706농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홈페이지 18농가를 선정하고 우수 사례집 제작배부 및 중앙일간지(4개소) 광고 등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다.

(ii) 2007년 추진계획

도·농간 교류 활성화, 농산물 소비촉진,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 그린 다음넷(green.daum.net),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를 통해 농림정보, 신지식, 건강, 농촌체험관광, 친환경농산물, 음식마당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제공하고 있다.

농업·농촌정보화 촉진과 농업인의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해 콘텐츠 생산 건수를 2006년 9,900건에서 2007년에는 12,000건으로 늘리고 농업기술, 농촌어메니티, 지역정보 등을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콘텐츠를 TV윈도우 기반에 맞추어 변환 또는 재구성하거나 신규 제작하여 제공하고 농촌의 자연·문화적 자원의 동영상 등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30개 농림관련기관 137개 홈페이지의 농림지식정보를 농림지식검색시스

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 발굴하여 40개 기관(150개 홈페이지)까지 확대·연계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홈페이지 농가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고객관리와 마케팅 등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성 있는 우수자료 보유농가에는 콘텐츠 개선비도 지원 할 계획이다.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입상된 우수 경영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농업인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정보화촉진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동안 농림사업관리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청·대상자선정·자금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어, 사업대상자가 중복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사후관리 또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13년까지 투자되는 119조원의 농림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업무처리방식을 On-line화하여 시군·시도·농림부의 사업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집행의 투명화를 통한 농림행정을 혁신코자 고안한 시스템이다.

2004년도에 농업·농촌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AgriX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구축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결과 일선 시도·시군담당자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5

년도에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10개 농림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어 2006년도에는 소브루셀라 검사시스템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등 축산분야 10개 사업을 구축하였고, 2007년에는 농가유형별 분석 등 맞춤형농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및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등 10여개 농림사업을 구축중에 있다.

AgriX의 구축으로 반복·중복처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거되어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이력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져 농정의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문광규)

(2) 임업분야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정보화로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자원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998년부터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동 시스템을 확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생물종지식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실적은 1단계(1998)는 기반구축단계로서 C/S환경의 관리시스템 및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개발하였고, 2단계(1999)는 활용단계로서 웹환경의 인트라넷 정보망 개발 및 보전기관, 식물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다.

3단계(2000~2001)는 DATA 구축단계로 국립수목원 등 식물보유기관(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식물표본관(15개소)별 표본정보의 DB를 구축하였고, 식물 식재위치를 GIS와 연계하여 식물식재지에 대한 결과분석이 가능하도록 GIS응용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단계(2002~2003)는 국가생물종지식DB 구축단계로 12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곤충표본정보 DB를 구축하였고, 동기간에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 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식물종은 국제생물다양성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의 식물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5단계(2004)는 기존에 구축한 식물·곤충 종정보 및 표본정보의 DB 표준화와 각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미비된 곤충종정보와 자연생태동영상 등 생물정보 DB를 추가 구축하고 도감정보를 재정비하였다.

6단계(2005)는 국가생물종지식DB 구축을 13개 대학 및 2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표본 및 균류도감 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기구축된 지식정보화 사업 중 수목

원 보유식물의 종 정보 및 이미지 정보의 보완과 식물명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적용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7단계(2006)는 기 구축된 생물자원 표본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종합생물자원 정보포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양의 표본에 대한 DB구축 확대를 위하여 16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 및 곤충 표본 등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DB 영문화와 영문웹사이트를 개설하여 905천점의 데이터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네트워크와 연계하였다.

8단계(2007)에는 기 구축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피하고자 수목원 및 식물원 보유식물정보시스템과 종자정보시스템 등의 응용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식물도감정보, 수목원 및 식물원 보유식물정보, 종자정보 등의 DB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

국가생물자원정보 사업을 통하여 기초과학분야인 식물, 곤충에 대한 분류체계의 정착과 생물종정보에 대한 활용가치를 확산, 국립수목원의 정보화를 통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열악한 전국 수목원, 식물원, 대학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주무관 김판중)

(3) 수산분야

(가) 어업정보화 촉진

어업인 정보격차 해소 및 인프라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어촌디지털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지방청,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2006년까지 총 81,000명의 어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나 농촌에 비하여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촌지역을 위해 어촌정보사랑방운영사업을 2006년까지 493개소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어업인정보화 교육은 그동안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다로 21 홈페이지를 어업인 교육정보 포털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단문자서비스(SMS)확대, 어업인 교육장 환경 개선 등 어업부문을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나)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추진

수산물은 복잡다기한 유통절차를 거쳐 소비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산물 유통정보 제공기반의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유통주체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종사자와 소비자들이 쉽게 수산물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정부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유통주체 부담금 등 5,300백만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정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산지수협 등 73개소에 대한 위판정보 및 조합업무전산화를 하였으며, 11개 수산부류도매시장에 대한 경락정보 DB화, 3개 도매시장에 대한 무선응찰방식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97개 일선수협 중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25개 조합의 유통정보화를 추진하여 동 5개년 사업의 마무리를 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위해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을 추진하여 200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총 500여개 어가를 입점시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15억원을 투입하여 유통정보시스템 구조를 개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입통계DB를 구축하여 수산물유통정보를 유통종사자, 어업인 및 소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가. 수출진흥대책

(1) 농림분야 시책 개요

농식품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WTO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표준화 등 유통시스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웃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과 거대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농식품 수출동향을 보면 고유가 및 환율하락, 안전성 비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점진적으로 수출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수출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향상과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의 성과라고 평가되며 중장기적인 수출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년도의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1997	2004	2005	2006	증감률(%)
(전체 농림축산물)	1,759.2	2,085.0	2,221.5	2,304.4	3.7
◦ 신 선 농 림 축 산 물	615.7	549.7	608.2	535.5	△12.0
- 김 치	39.7	102.7	93.0	70.3	△24.4
- 돼 지 고 기	242.3	27.3	34.3	23.9	△30.3
- 채 소	38.4	127.0	138.5	133.6	△3.5
- 화 훼	5.3	48.5	52.1	40.4	△22.5
◦ 가 공 농 림 축 산 물	1,143.5	1,535.3	1,613.3	1,768.9	9.6

(2)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및 공급기반구축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첫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1997년의 28개 단지에서 2007년말 현재 170개 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출컨설팅도 2004년 93회에서 2006년 307회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WTO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2004년 256억원에서 2006년에는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자금융자도 2006년에는 3,34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관련 경영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넷째, 국내외 수출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7개국 10개 해외 aT센터와 21개국 44명의 모니터로부터 입수되는 수출관련정보를 인터넷정보망인 KATI 와 FAX신문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바이어의 발굴, 현지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개발 등의 기회로 활용해오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수출농산물공동대표브랜드(Whimori) 사업을 추진하고 종래의 라디오와 빌보드 위주의 단편적인 홍보에서 현지TV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JUSCO등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특관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식품의 홍보 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농산물 수출은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 규제 및 수입검역 강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의 시장경쟁 심화 등 수출애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 회복, 2002년 한일 월드컵 및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인지도 제고, 건강식품으로의 김치에 대한 관심 증가,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지원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7,521	35,300	36,164	35,415	39,655	41,617	41,630	42,618
□ 농산물해외시장개척	8,440	9,345	9,559	9,994	10,773	12,735	12,748	13,736
◦ 국제농산물박람회	3,011	3,108	3,542	4,098	3,953	4,105	4,105	4,213
◦ 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	853	1,025	879	1,100	1,045	1,300	2,961	1,745
◦ 현지유통업체직수출	346	697	947	1,000	1,430	1,200	1,433	2,470
◦ 수출홍보사업	3,429	3,458	3,250	2,755	3,195	4,780	2,858	3,837
◦ 해외시장정보사업	801	1,057	941	1,041	1,150	1,350	1,391	1,471
□ 농축산물 판매촉진	19,081	25,955	26,605	25,421	28,882	28,882	28,882	28,882
(수출자금용자)	(2,030억원)	(2,133억원)	(4,691억원)	(4,765억원)	(4,226억원)	(3,324억원)	(3,353억원)	(3,370억원)

* 2005년 이후의 수출자금 용자는 수산물이 제외된 수치임.

2007년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2,036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과실·화훼·김치 등의 신선농산물 등은 증가하였으나 채소·축산물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 %)

구 분	2000	2001	2003	2004	2005(A)	2006(B)	증감률 (B/A)
농 립 축 산 물 합 계	1,531.9	1,579.9	1,859.8	2,085.0	2,221.5	2,304.4	3.7
◦ 신선농림축산물	550.0	521.0	507.5	549.7	608.2	535.5	△12.0
◦ 가공농림축산물	981.9	1,058.9	1,352.3	1,535.3	1,613.3	1,768.9	9.6

(농림부 식품진흥과 사무관 변상문)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WTO 체제의 출범 이전인 90년대 중반까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17억\$ 내외의 수출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 수출 효자산업의 역할을 해 왔으나 1997년도 7월 1일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된 이후부터는 수출실적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부터 무역수지적자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매년 12억\$ 내외로 수출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는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 수산물 소비의 증가 등 국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유가 및 환율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의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산물 수출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첫째, 수산물 수출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WTO 및 FTA 협정 등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을 기회로 삼아 수산물 수출 진흥을 통한 잘사는 수산업·

어촌을 실현하고자 2016년까지 수산물 수출 20억\$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수산물 수출 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Import Quota) 제도에 대하여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김,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셋째,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우리 수산물 우수성과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수입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촉진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넷째,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우수 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출상품 카탈로그(KOREA EXPORT SEAFOOD)를 제작·배부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신문, 공항광고, 기내잡지, 박람회 가이드북 등)를 활용한 직간접 광고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체계적으로 수산물 해외시장 동향 등을 수집하여 정책고객 및 수출업체 등에게 매일 제공하였고,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수출 주력품목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수출정보 교환 및 수출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품목별 수출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나. 수입관리 대책

(1) 농림분야

(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

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지정기관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밤, 대추 등 6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등 40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기관배정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여건 변화로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도 증량품목은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보조사료, 사료용근채류 등과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원료농산물인 대두, 팥 등 15개 품목이다.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i) 할당관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용 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2007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밀, 근채류 등으로 상반기 13개 품목, 하반기 1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있다.

(ii) 조정관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007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당면, 찌쌀, 메주 등 6개 품목이며, 바나나의 조정관세는 폐지하고, 메주(18% → 16), 합판 등 목재품(12% → 11)은 축소 적용하였다.

(iii)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경부령)을 개정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품목(물량기준 29개, 가격기준 6개)을 지정하고 2007년 11월말 현재 녹두, 팥, 낙화생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iv)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수입개방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조치(TSG)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예외적인 세이프가드조치도 발동할 수 있다.

(다) 농축산물 밀수근절대책 추진

국내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반입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 아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깨, 콩나물콩 등 25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세청과 협조하여 기준신고가격을 정하고 이 보다 낮게 신고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단속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요원(400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휴대농산물의 면세 한도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으며(80kg → 50), 2002년 1월부터 품목별 반입한도량 5kg(жат 1kg, 한약재 3kg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농림부 농업협상과 서기관 김재철)

(2) 수산분야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저가의 외국산 수산물 특히 중국산 수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산어업인 보호 및 수산업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첫째, 2007년에는 냉동민어, 활농어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가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우젓, 활돔, 활뱀장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증가중량세(선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WTO/DDA 및 FTA협상 등에서 무세화 또는 관세의 대폭적 인하가 논의 중이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조정관세 철폐,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등 조정관세 유지에 어려

움이 있으나 국내 수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정부와의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일정범위를 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제도를 2007년 6월부터 도입·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TRQ 적용 물량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1년 4월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04년 12월 「한·중 활어위생약정」을 체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활어는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고, 위생안전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활어에 대해서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니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2005.9.15 체결) 및 「한·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2006.6.27 체결)을 체결하여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어류질병 감염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붕어, 잉어 등 낚시터에 방류하는 어종에 대하여도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통관전에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률을 제정하였으며, '08년부터는 식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동물 질병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섯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함은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당국가·해당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곱째, 2005년부터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수산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이력추적제를 도입하여 김(조미김), 넙치(싱싱회), 굴(생굴) 등 10개 품목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여덟째, 수산물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수산물과 차별화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소비자의 수산식품위생안전 등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품질위생팀)

6. 친환경농업의 육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 1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1~'05), 2006년 2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06~'10)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산림환경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그간의 친환경농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중을 10% 수준까지 올리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 2월에는 친환경농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키토산·목초액·천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실천농가의 자재구입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량증가 등의 여건변화에 맞게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공포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종류 축소(4종류→3종류), 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간 신설(5년)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2007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을 16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용 학습교재를 제작하여 서울 등 대도시 초등학생 14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모델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확대를 위해 2005년 9월에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하였으며, 2006년 6월에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마련하였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서기관 조백희)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24천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개발·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농약절감형 재배 기술지도, 천적이용 기술 등의 보급과 함께 생물농약 등 독성이 낮은 농약을 개발·보급 중이다.

작물별로 농약사용량 추세를 보면 벼농사는 농약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으나 시설원에 작물의 경우 농약사용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방문진)

(2)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합성농약 사용량이 많은 원예작물 재배에 천적방제를 정착시켜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약살포 노동력 절감 및 농약피해 방지 등을 통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에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천적방제는 2013년까지 시설원예작물 전체 재배면적의 20%수준인 20천ha를 지원하고 정책과급효과를 통한 농가자체방제를 포함하여 50%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5년에는 원예작물 중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4개품목 639ha에 대하여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에는 대상품목을 7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면적도 1,000ha로 늘려 국고보조금 38억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1,000ha 면적을 대상으로 천적해충방제비 38억원을 국고로 지원 하였으며 향후 2008년에는 천적방제 대상 작목에 참외와 수박을 추가하고 방제면적도 2,000ha, 국고 45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천적방제 체제가 정착될 경우 그동안 수출과정에서 농약잔류기준 초과로 반품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조정래)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하는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도 120만톤 420억원, 2007년 135만톤 473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주문형 배합비료, 축분퇴비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의 노력으로 화학비료 총사용량은 화학비료 정부보조

폐지 당시인 2005년에 722천톤이었으나 2006년에는 친환경농업 확대 등으로 인해 사용량이 478천톤으로 감소하였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장명철)

(4)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하여 자원화(퇴비·액비)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비료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고,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이 검증된 퇴·액비 생산을 위해 농가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가 스스로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분리 등 악취저감 조치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액비유통센터(51개소, 2006년)를 지정하여 액비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고, 경종농가가 편리하게 액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2006, 560개소 → 2007계획, 650개소) 하였다.

또한, 2005년 9월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하여 2006년 6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을 수립하였다.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분류하여 축산농가·경종농가의 퇴·액비 생산·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6년 9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 및 관리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법에는 가축분뇨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하여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전문가의 평가 및 검증없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시공함에 따라 가동중단, 불량퇴비 생산 등의 시행착오가 일부 발생하였다. 2006년부터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설치시 전문가가 평가검증 토록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켰고, 농가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 의욕 고취 등을 위한 기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농업사무관 하옥원)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2006년말 현재 2,505천대로서 이 중 약 0.5%인 12천대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30%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이다. 2007년에도 2006년도 규모로 폐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봄가을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의 적기 영농실현 및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봉사시 시장·군수 책임하에 무단방치된 폐농기계를 집중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 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농약빈병과 폐비닐은 2005년의 경우 각각 54백만개, 265천여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는데 환경부 산하 환경자원공사를 통하여 수거해오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각각 76%, 66%수준이며, 폐비닐수거율이 낮아 이로인해 농촌환경이 오염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과 11월을 중점 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2004년부터 페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85천톤, 2005년 85천톤 수거에 대해 각각 26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6년도 100천톤과 2007년도 100천톤 수거에 대해 각각 3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조정래)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토록 개선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2005년에는 국고 397억원, 637천톤을 공급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고 422억원, 토양개량제 644천톤을 공급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국고 401억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제 547천톤을 공급하였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조정래)

(2)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추이를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된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을 수질측정망으로 선정하여 매년 2회~4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마다 전국 저수지 18천개소에 대한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은 1990년에 30지점, 1998년에 200지점, 1999년에 350지점, 2000년에 450지점, 2001~2006년에는 500지점을 선정·운영하는 등 수질측정망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수질조사 결과는 환경부, 시도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저수지 주변 청소, 주민홍보 등을 통한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농업용수 수질기준 : IV등급, COD 8mg/L)을 초과하는 시설 중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2003년에 전남 무안군 감둔저수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준공하였으며, 2004~2006년까지는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부터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를 추진하여 2007년도에는 충남 홍성군 홍동저수지와 경북 의성군 개천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8년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지구 기본조사와 1지구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상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호소내 수질개선 대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환경부, 한국농촌공사,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9년 상반기까지 호소 관리(농림부·농촌공사)와 상류 오염원 관리(환경

부지자체)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구별 수질오염 발생 분석 및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 주변의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에서 10농가 10ha이상의 집단화된 단지를 중심으로 토착미생물 배양증식 및 유기자원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퇴비제조시설,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06년말까지 820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07년에는 총사업비 200원을 투입하여 59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3년까지 읍·면당 1개소를 목표로 총 1,5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윤승우)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광역화된 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시·군단위 환경민감지역 등을 대상으로 축산과 경종이 연계하는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3년까지 시·군당 1,000ha정도의 단지를 총 50개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에 3개지역, 2007년에 6개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480억 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추진결과 등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5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사업추진 모형개발을 완료하였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윤승우)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1999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을 대상으로 매년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5천ha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10천ha을 대상으로 30억원, 2004년에는 13천ha에 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21천ha을 대상으로 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35천ha을 대상으로 14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43천ha을 대상으로 17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논외의 경우에는 밭과는 달리 2005년까지는 논농업직접지불금에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논과 밭으로 분리된 직불사업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하고 논에 지급하는 단가도 인상하였다. 즉, 논 저농약의 경우 ha당 217천원을 신규 지급하고, 논 무농약은 150천원에서 307천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며, 논 유기의 경우에는 270천원에서 392천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였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상집)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

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구매자금 지원, 품질관리강화 등 판매지원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을 2006년 8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2007년에는 16억원으로 확대조성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학교급식확대 등을 추진하여 나아갈 계획이며, 서울 등 대도시 초등학생 14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1999년부터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이외에 산지유통활성화자금 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총 285억원을 계약, 구매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2006년에는 73개시·군에서 429억원을 지원(3,650여개 학교)하였고, 2007년에는 103개시·군에서 638억원을 지원(5,310여 학교)하여 꾸준히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 구매자금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서기관 성신상)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가.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1) 농림분야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이후 가격지지정책보다 소득보전효과가 크고 시장 왜곡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2003년 쌀 생산조정제(시범사업), 2004년 폐업지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시범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직불제 예산은 21,466억원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 10.3% 증가하였다. 2007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경사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지역을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전 도서로 확대하고 일반 지역은 현행 지원조건(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이상)을 유지하고, 경관보전 직불제는 대상면적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영역 다양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종과 축산을 연계 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 및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진흥지역 논 → 진흥지역 논과 밭)하고, 대상연령, 지급기간(최장 8년→최장 10년), 지급단가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가격차 보전 직불제의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차 보전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직불제 신규 도입 및 기존사업 개편을 통해 2013년까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소득 중 10% 수준을 직불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직불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피해보전 직불제 등 WTO 규정상 감축대상 직불제는 지원대상 농가수를 줄여(취미농 배제, 구조개선 촉진 등)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고 DDA 협상에 의한 보조금 한도 축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개선 지원,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 등 품목별 가격차 보전 방식의 직불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밭농업, 과수, 축산을 포괄하는 농가단위 소득차 보전 방식의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WTO 허용보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농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은퇴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 개편안(6.28일 한미 FTA 대책으로 발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영수)

(2) 수산분야

(가) 수산보전제 도입 추진

2001년부터 시작된 WTO/FTA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산업의 경영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보조금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장개방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증 가능한 허용성 보조금을 수산보

전제 형태로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보전제는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을 지향하고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반대급부 없는 직불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어장환경개선, 구조조정, 어업인어촌 복지 증대 등을 목적으로 수산보전제를 도입할 것이다

우선 2008년부터 어업 조건 등이 불리한 취약지역 어촌계 등을 지원하는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와 고밀도 스티로폼 부자 사용을 지원하는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지원 보전제” 등 사업 수행이 용이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2개 사업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는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와 “친환경기자재(부표) 사용 지원 보전제”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한편, 2008년부터 보전제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범사업 실시 등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보전제 확대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는 도입 가능한 유형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수산보전제 확대 도입을 위한 Action Plan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사업, 생분해성 어구지원 등 수산보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수산보전제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

나. 농산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① 2006년 이행실적

주5일 근무제 실시, 교통망 확충, 노령연금의 정착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기 시작했으

며, 농촌체험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 관광같은 대안관광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이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시책을 추진하였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사가는 활력이 넘치는 체험·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행사를 통한 농업·농촌 가치홍보 등으로 설정하였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2~2006년까지 190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84개 마을을 신규조성 하였다. 농촌체험마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촌1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 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69개마을) 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에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농산어촌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관련부처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동기화(입문)과정, 리더십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등 21개 과정을 개설하여 2,258명을 교육하였다.

아울러 농촌주민 스스로 아름답게 가꾼 마을을 평가하는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6회째 개최하였으며, 도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내고향 잠재 자원 개발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농촌마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3㎡이하의 주말주택 및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도농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07.11.22 국회통과)하였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산어촌체험박람회,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촌문화 체험기 공모, 도농생활체험캠프,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1사1촌 운동은 농협과 전경련 등 민간주도로 기업·단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범국민운동이다. 2006년 12월말 현재 14,498건의 1사1촌 자매결연 체결로 농산물직거래 686억원, 일손돕기 272억원, 농촌체험 및 기증 221억원 등 총 1,400억원 수준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져 도농간 교류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림부를 중심으로 농협, 한국농촌공사, 전경련, 기업체, 마을대표,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여 1사1촌 운동이 범국민적 민간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비전 등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전략 및 참여 주체별 역할에 따라 활용 가능한 1사1촌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농협중앙회장, 전경련회장 공동대표)를 사단법인으로 허가(2006.3)하여 1사1촌 운동의 핵심 조직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2006.2)을 개원하여 마을지도자, 기업·단체임직원, 도시 주부 및 청소년 11천명 대상으로 농촌가치와 도농교류활성화 필요성 등을 교육시켰다.

② 2007년 향후 계획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2007년 84개 마을(총 274)에서 2008년에는 90개 마을(총 364)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07년 3,400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할 것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2009도농교류페스티벌('09년도 개최예정),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전개,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도농교류 정부포상, 그린포럼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부터 농협과 기업·단체 등 민간주도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1사1촌운동의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과 교류실태 전수조사, 1사1촌 우수마을 육성과 소득자원 발굴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의 마을지도자 등 5개 교육 과정(2007. 11천명)으로 확대하고 자매결연 단계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연수과정별 차별화된 콘텐츠 적용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사1촌 운동·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이영길, 전영미)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정부는 FTA 등 개방확대로 인한 농업위축→일자리축소→농촌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육성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

어 다양한 농촌자원의 산업화 정책 추진으로 농업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는 데도 어느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2013년까지 지역적으로 고유하거나 특색있는 200개의 향토자원 육성을 목표로 2007년까지 19개('08년 30개)의 향토자원을 지원, 생산(1차산업)외에 가공(2차산업) 및 유통·관광·서비스(3차산업)를 결합(융복합화)시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화품목 브랜드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생산, 유통, 가공분야 등에도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다

향토자원육성 발굴계획

구 분	추진목표(13년)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업량(개)	200	19	30	151

특히, 금년(2007)부터는 농촌지역에 유·무형의 자원 등을 토대로 가공, 유통 및 관광 등 2차, 3차 산업을 접목시켜 농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부로 이관되어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도 높이면서 내실있게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다

신활력사업 지원계획(2005 ~2007)

사업년도	사 업 비(억원)			
	계	국 비	지방비	민자 등
2005 ~ 2007	8,320	5,782	1,333	1,205
2005	2,675	2,000	379	296
2006	2,770	1,900	451	419
2007	2,875	1,882	503	490

현재 농촌지역에는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관련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간에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득자

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산업지원 정책을 분리, 연차적으로 유사한 관련사업 정비해 나가되 산업지원정책은 시행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자체가 사업목표를 명확히 제시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목표, 추진방식 등이 유사한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특화품목사업 등에 대해 3개년(2008~2010) 동안 달성할 계량화된 사업목표(성과목표), 사업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군의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실질적 성과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박희수, 김병준, 최호중)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2007년에는 28개소에 314억원을 투자하여 6개소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2008년에는 47개소에 428억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FTA 등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군별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면적을 확대하였다. 앞으로 조성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기존 단지 활성화지원, 현지 농어민 고용확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구 분	추진목표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업량(개소)	400	328	47(10)	62
사업비(국고, 억원)	10,006	6,933	428	2,645

주 : ()는 완공지구

(농림부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박희수)

(4)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외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1990 ~ 19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 신안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5년까지 7개 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 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2005년에는 다양한 해양생태와 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어 발전 잠재력이 있는 풍부한 어촌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5.31)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62호, 12.1)을 제정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전국 24개소 어촌관광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23개소/49억원)를 완료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의 사업 착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업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 체험 중심의 21세기형 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 76개마을에 497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에는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마을 등 11개소에 8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소, 진입도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주도로 운영하게 하여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활기 있는 선진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을 어촌사랑의 원년으로 정하고 100사 100촌 자매결연 행사를 계기로 2006년까지 400사 400촌 자매결연을 맺고, 2007년은 500사 500촌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협에 어촌지원 T/F팀을 설치 본격적으로 운영, 자매결연 홈페이지 구축, 우수 추진사례 발굴,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자매결연 업·단체를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아파트 부녀회, 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5) 농산물가공·특산품 생산의 활성화

2005년말 현재 농산물가공업체 534개소, 특산단지 600개소가 운영중이며 가공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05년에 6,607억원을 기록하여 IMF직후인 1998년의 5,723억원에 비해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가공산업과 특산품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보다는 기존에 운영중인 업체와 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내실화하면서 향토성과 지역지명도를 상품화하기 위해 경영지도,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나갈 예정이다.

(농림부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전한영)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가) 2006년 이행실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까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곶감 등 7개 과수를 대상으로 보험실시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 증대를 위해 폭풍우 인정기준을 최대풍속 14m/sec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0m/sec이상에서 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가을동상해 특약의 보험기간을 11월 5일까지에서 11월 10일까지로 5일 연장하였으며, 단감 낙엽피해 보장기간을 10월말까지 1달간 연장하였다. 더불어, 조정과 인정피해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재해가 없는 농가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수익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폭을 △50%~50%로 확대하는 등 많은 부분에 걸쳐 가입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조기확대를 위해 2006년 4월 농림부, 품목별 전문가, 보험전문가, 재해보험사업자 등으로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작물별 보험화 가능성 검토 및 도입우선순위 결정, 품목별·재해별 기초 통계자료 축적 등 본격적인 보험품목 확대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특별지원 8.4% 별도),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5년 대비 1.03%P 감소한 8.21%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27,419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05년 20,301ha에서 21,466ha로 늘어 가입률 24.5%를 달성하였다.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상품목 ¹⁾		6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6	6	6	7 (뽕은감 추가)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18,549	16,481	23,926	26,335	27,419
	가입면적(ha)	10,994	11,001	17,546	20,301	21,466
	가입률(%)	18.3	15.2	18.2	23.4	24.5
지원규모	순보험료(%)	50	50	50	61.2	58.4
	운영비(%)	70	80	90	100	100
	국고지원액	8,590	16,224	37,803	49,371	50,783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6,913	10,134	3,177	5,877	5,171
	보험금	34,709	50,018	13,599	23,871	21,112
	손해율(%)	433.4	290.8	42.3	43.5	36.6

* 주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나) 2007년 추진계획

①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지속 개선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해오고 있다. 2007년도에도 2006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및 농업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장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07년 주요 개선사항

- 집중호우 인정기준 완화 : (2006)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일 때 재해인정 → (2007)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에도 인정
- 감귤 낙엽률 인정기간 확대 : (2006) 기준착과수~수확기 전 → (2007) 기준착과수~수확기
- 기타
 - 태풍피해시 보상확대를 위해 낙과감수량 보상기준 개선 및 보상확대 (감수량 = 낙과수량 × 105%로 통일)
 - 우박피해시 감수량 보상기준 확대(봄동상해 피해과수원에 대한 우박피해 인정) 등

아울러, 2006년까지 사과·배 품목에만 적용되었던 집중호우, 과수보상 특약을 포도·복숭아 등 7개 품목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2007년 7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 보험 상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50%(특별지원 5.6% 별도),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6년 대비 1.64%P 낮은 6.57%로 인하하여 보험가입률을 2006년 대비 2.0%P 증가한 26.5%로 높일 계획이다.

②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근래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보험품목 확대에 대한 농업인 등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부는 2006년 4월부터 농림부, 농업인, 품목별전문가, 보험전문가, 보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작물의 보험화 가능성 및 연차별 보험품목 확대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에는 지난 2006년 연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보험수요 및 전업화 정도, 생산액 수준 등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 보험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밤·참다래·자두”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상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하는 작물의 경우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가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2006년 7월부터 철원, 평택 등 전국 논벼 주산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상연습 중인 논벼(수도)의 경우 특정위험방식으로 실시해 온 것을 대폭 개선하여 2007년부터는 모든 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A11-risks)으로 변경하고, 밤·참다래·자두의 경우에도 종합위험방식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과수 품목에 치우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을 식량작물·채소작물·특용작물 등 대다수 농작물로 확대하기 위해 품목개발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농업관련 재해보험제도 일원화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으나, 이들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처별·소관과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우리부는 2006년부터 자연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작물·가축·농업시설 관련 재해보험의 관리 일원화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농업사무관 서준한)

(2) 농가부채대책 추진

(가) 추진배경

2001년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함)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나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농업인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기 어렵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FTA·DD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농업경영회생 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총 15차례 회의(실무기획단 포함)를 통해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03년 6월 28일 농가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2003.7.2)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2003년 10월 31일 국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01년에 지원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3.5% 인하하는 내용 및 농업용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7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4년 2월 16일 의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년 3월 5일 공포된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을 2005년 10월 31까지 연장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FTA확산과 WTO농업협상의 진전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부채증가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공표된 농가부채경감법에 따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6조원에 대하여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부채대책 내용

<2006 농가부채경감대책 주요내용>

- ① 2001년 지원했던 상호금융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5년 분할 상환(금리 3%)으로 대환
 - 그 외의 경우는 3년 분할 상환으로 대환하되, 금리는 5%
- ② 재해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2006년 2,000억원, 금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③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 정상상환 인센티브 : 정책자금을 부채대책에 의해 상환연기 하지 아니하고 정상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이자액의 40% 환급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부채대책으로 상환연기한 자금과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당시 상환기일 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
- ④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부채대책 추진

2004년 개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연대보증피해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 확산 및 DDA 농업협상 진전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쌀협상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우남, 김낙성, 유선호의원이 각각 농어업인부채경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05년 11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위”라 한다)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11월 25일 농해위 법률심사소위에서 3개 법안을 폐지하고 농해위 위원회 대안으로 2001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상환연기를 채택하여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농해위 대안으로 상정된 부채경감법은 신속하게 법사위 의결(2005.12.7) 및 국회 본회의(’05.12.8)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2005.12.15)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부채경감법을 2005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2005년 12월 29일 공포하였다.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6조원에 대하여 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를 제고하였으며 정상조기상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부채상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 예산을 2,000억원 반영하여 3년거치 7년분할상환(금리 3%)조건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출기관의 상임 임·직원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여 도덕적 해이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대출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기관 내부직원으로 실무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다. 실무심의회는 기본자격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구비 적정여부 등을 사전심사한 후 경영평가위원회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경영회생자금지원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 지원대상자금 지원범위를 명확화하고 부부 공동경영시 지원대상자수에 배우자분을 포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농업인 90%, 농업법인 85%) 강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보충토록 하는 등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평가하여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에게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 경영체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Work-out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농지의 가압류, 경매처리 등의 처리절차에 대한 제반 지식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에 농업인금융사고센터를 설치하여 연체농가 등에 대한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농지은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농업생산과 관련된 농업인 연체채권에 대하여는 연체이자감면 및 농산물 수확대금으로 연체채권을 자진변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확대금 수령시까지 경매진행을 유예토록 하는 등 농업인이 경영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건, 억원)

대 상 자 금	지원규모	신청 현황		지 원 결정액	지원액 (C)	비율(%)	
	(A)	건수	금액(B)			(B/A)	(C/B)
2006상호금융대체자금	38,437	249,548	37,046	36,257	34,028	96.4	91.9
농업경영회생자금	2,000	735	451	343	361	22.5	80.0
계	40,437	250,283	37,497	36,600	34,389	92.7	91.7

(농림부 협동조합과 서기관 이용섭)

(3)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1998년 이후 대형 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산림피해 규모가 대형화되어 임업인의 경영 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해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학계·임업계 및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 표준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산림재해공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림부의 보험품목 확대 계획과 적극적인 의지로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중에서는 최초로 뽕은 감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었다. 2006년에는 주산지 5개 시·군에서 390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446농가가 가입하여 14.4%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임산물중 소득비중이 높고 보험필요성이 높은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표준수확량과 손해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 연구는 밤 주산단지 중 3개 지역에 대해 관련 Data를 축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년 농림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였으며, 2007년 9월 밤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

뚝은 감 및 밤 재해보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림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대추 등 임업분야의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경영지원팀 행정사무관 심상택)

(4) 수산부문

(가)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WTO-DDA협상, FTA 체결 확산 등에 따라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국제 유류가의 급등으로 어업용 유류가격도 상승하여 어업 경영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영어자금을 공급하고,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등 저리의 수산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2007년도 영어자금은 대 정부 상환분 668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2006년과 같은 규모인 1조 5,050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4,250억 원, 원양어업 분야에 8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자금 중 300억원은 어선조난·홍어·재해·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2007년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에서 5,636억원, 수협중앙회 신용자금에서 4,433억원, 수협 상호금융자금에서 4,981억원을 공급하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의 연체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영어자금 공급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계획)
공급 규모	소 계	14,050	14,050	14,050	15,050	15,050
	재정자금	5,814	5,814	5,636	5,636	5,636
	수협자금	3,844	3,844	3,933	4,433	4,433
	상호금융	4,392	4,392	4,481	4,981	4,981

이러한 안정적인 영어자금공급 이외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각종 수산정책자금을 어업인에게 저리로 공급하고,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면제를 위해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1.3% 증가한 827억원에 달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어가의 금융비용 및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차보전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업인에게 연리 3%로 대출하는 영어자금 공급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525억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리 1.5~5%로 지원하는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282억원, 각종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용으로 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20억원에 이르며, 이들 이차보전금은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을 통해서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가고 있다.

2007년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비율 (C/A)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81,642	82,722	1,080	1.3
· 영어자금이차보전	44,241	52,500	8,259	18.7
· 피해복구이차보전	2,299	2,045	-254	-11.0
· 어가부채경감이차보전	35,102	28,177	-6,925	-19.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나)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2004년에는 정책보험 도입 초년도로써 어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유가인상 등에 따른 출어경비의 증가 등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소형어선의 보험가입율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시행 초년도 발생한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어업정책보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일시조업에 따른 단기가입제도, 당연가입 기준의 재설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10톤미만의 순보험료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사업비의 국고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은 톤급에 따라 4~8% 확대되어 어업인들이 부담액이 경감되었다. 2007년도에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정책보험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그동안 누적된 결손금(439억원)의 국고출연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인력 확충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다)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양식수산물은 19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태풍과 적조 등의 어

업재해가 발생시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수산생물에 대한 복구비는 종묘대금 등으로 지원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수산물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시장경제하에서의 보험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개년에 걸쳐 「양식재해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양식재해보험의 위험률 검증 및 도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수준의 보상체제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재보험제도의 실행에 필요한 “양식수산물 재해 재(Re)보험기금”도 신설하였다.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8.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속추진

시범사업 3년차인 2007년도에는 활발한 사업추진 및 마무리를 독려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본사업 추진방안 수립에 활용하고자 상반기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추진 지속여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본사업 추진방안은 종합평가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역농정의 역량을 강화시켜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을 개발하였다.

<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

	<1단계> 클러스터前단계	<2단계> 클러스터구축단계	<3단계> 클러스터산업화단계
발전단계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 	클러스터 發顯
발전목표	지역농업자원 발굴과 차별화 요소의 극대화	지역농업주체간 네트워킹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산업화 달성과 성과 도출
핵심활동	-특성화 전략 선택 -생산,특화품목,마케팅,농촌 관광 등 농산업전반에서 특화요소의 전략적 선택	-주체간 역할분담 -지역농업 코어(Core)구축, 핵주체 구축 -핵심 인재(人才)육성	-농산업 확장 (1차+2차+3차+@) -본격적인 지역농업 마케팅 실천 -신사업(新事業)도입
지원사업	-품목육성 정책 -마케팅조직육성 정책 -생산유통기반 구축	-클러스터 구축지원 -지역특성화교육 -브랜드육성	-R&D추가 지원 -패키지(Package)지원 (생산→마케팅)
지원체계			

(농림부 농업정책과 사무관 김영수)

●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179
2. 채소·원예산업	187
3. 과수·화훼산업	189
4. 축산업	194
5. 임업	215
6. 수산업	283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가. 양정제도 개편

WTO출범이전에는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WTO농업협정의 국내보조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DDA농업협상 이후에도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DDA·쌀협상으로 식량정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05.7.1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제도를 전환하였다.

한편 기존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어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05.7.1 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쌀 판별능력이 부족한 점과 밥쌀용 소비자 시판 등을 감안, 양곡표시제도 강화 등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였다.

(농림부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선우)

나. 수급전망 및 정책방향

2006년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대북지원(국내산 10만톤), 가공용·주정용 공급확대 등으로 84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쌀협상에 따라 의무수입

물량(TRQ)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까지 증량되고, 그 중 소비자 시판은 2005년 TRQ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증가되는 등 외국쌀의 국내 유통물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5년도가 양정제도 개편 첫해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농업인의 수확기 벼 판매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확기 시장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44천톤 많은 576천톤으로 확대하고 비축물량의 144천톤 추가매입·격리조치, ② 2006년 정부 일반공매 지양 공표, ③ 2004년산 지역농협 재고(92천톤)를 시장으로부터 격리 ④ 공공비축 물량 중 산물벼를 농가 희망에 따라 포대벼로 전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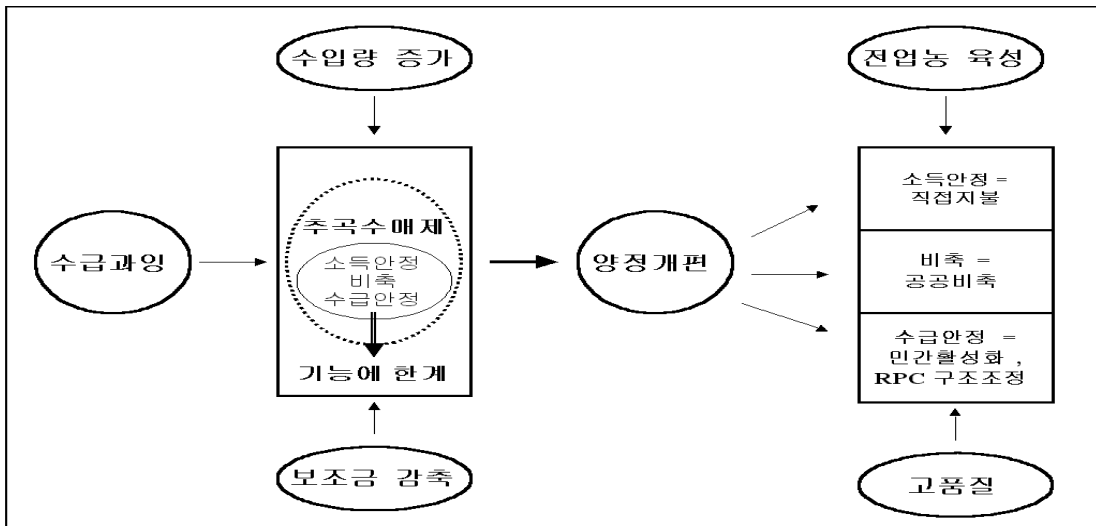
2006년에는 공공비축제의 연착륙을 위해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다. 산물벼 매입방식을 포대벼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정산토록 하였고,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매입가격을 수확기 전국평균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RPC의 산물벼 인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수하되 포기시 정부 인수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급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수급상황을 알려주는 한편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의 조기 확정발표 및 홍보로 농업인들이 수확기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공공비축 매입물량 축소(2006. 504천톤 → 2007. 432천톤)를 감안하여 산물벼 매입물량을 축소하였으며,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톤백 매입사업을 시범 실시(전국 8개소)하고, 출하비 샘플검사를 도입, 검사 대기시간을 감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 받은 10년 동안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쌀이 외국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함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국 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제도 개편

- ◇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으나,
- ◇ **앞으로는**
 - ①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 ②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③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할 수 있도록 양정제도를 개편하였다.
- ◇ 아울러, **전업농의 규모화와 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선우)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국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5년말

까지 총 8,432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 Dry and Storage Center) 689개소를 설치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용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전환하고 사업량을 2005년에 50개소에서 2006년도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단가도 4.5억원에서 5.5억원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율도 30%에서 40%로 변경하는 등 지원조건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우수 RPC 및 구조조정 RPC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05년부터는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RPC에는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기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RPC 경쟁체제 강화, 수탁제 시범실시, 시설확충, 쌀 브랜드 육성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7년도에는 쌀 수탁판매 시범사업을 2년차로 실시하여 수확기 쌀 농가의 판매방식 다양화를 통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규로 8개소에 대해 추진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농림부 식량유통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라.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촉진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율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쌀 품질 향상을 위해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브랜드 수준이며 같은 품종을 같은 지역에 재배할 경우에도 품질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는 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road map을 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와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고품질쌀생산팀 등 6개반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6대 중점 추진과제(적기이앙, 적정포기수 확보, 적정 물관리,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최소병해충방제, 적기수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여 밥

맛이 좋은 고품·운광·삼광벼를 개발하였으며, 고품·운광벼 최고품질의 종자를 증식하여 2006년부터 농가에 조기 보급하였다.

2007년도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대책의 기본 목표는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구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6가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논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토양 유기물의 함량을 증대시켜 토양을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를 120만톤에서 2007년에는 150만톤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는 시용 편의 및 토양 개량효과 제고를 위하여 입상공급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는 전량 입상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질 좋은 쌀 품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품종 육성방향은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숙기별 10개 품종을 2010년까지 개발 추진 중이다. 일반적 고품질 품종 이외에도 가공용 및 기능성 쌀 품종도 폭넓게 개발하여 특성화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에 파종할 수 있는 종자의 양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벼 종자 갱신율은 42%이며 이를 2008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선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넷째로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가지로 대표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농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로 농가와 RPC간의 계약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RPC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균일한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 및 재배법을 표준화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와 포장양곡 표시제 조기정착을 추진 중이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0명의 명예감시위원을 위촉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포장 유통을 확대하고 우수 브랜드 쌀 평가 및 브랜드 통합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쌀을 기호에 맞추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영국)

마. 쌀소비 촉진 전개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은 2001년까지 연이은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미래의 쌀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충격 완화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쌀중심 전통식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쌀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소비촉진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3년

까지 유명축구선수와 방송 아나운서, 문화계의 대표적인 장인 등을 러브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TV-CF 공익광고 등을 방영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한 러브미광고로 젊은층과 주부들에게 우리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러브미로고가 국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러브미 홍보는 2002년 정부업무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대한민국 광고윤리대상 우수상, 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러브미 공익광고와는 별개로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농촌체험캠프 실시 등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는 쌀의 인지도,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사·도에서 51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주요미질 구성요소인 품위·품종혼합율·식미 등 품질을 평가하고 소비자패널에 의한 소비자만족도를 고려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브랜드쌀의 품질향상을 촉진시켰다.

2007년에는 사·도, 곡협, RPC협회 등에서 51개 브랜드를 추천받아 4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품종혼합율 및 소비자만족도는 전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성적이 우수한 12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12개 우수브랜드>

- ① 한눈에반한쌀(최우수/전남) ② 지평선무농약쌀(우수/전북) ③ 봉황쌀(전남)
- ④ 김포금쌀(경기) ⑤ 철원오대완전미(강원) ⑥ 상주풍년쌀골드(경북)
- ⑦ 철새도래지쌀(장려/전북) ⑧ 뜰부기와함께 자란쌀(충남) ⑨ 드림생미(전남)
- ⑩ 생거진천쌀(충북) ⑪ 프리미엄호평(전남) ⑫ 왕건이담넉쌀골드(전남)

또한 가래떡데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가래떡데이행사는 도시거주 초등학생

1,000여명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가래떡 1,111m를 만들면서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를 하였다.

한편, 지역단위로 특색있는 쌀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체 홍보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KBS 추석 특집다큐멘터리 “떡, 벌어진 한마당” 방영과 “6시 내고향 특집 방송” 및 라디오 캠페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농림부 식량유통과 행정사무관 이주영)

2. 채소·원예산업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지역별 생산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높은 우수농가를 발굴, 자료를 축적하여 일반 농가들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 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농림부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조용범)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 채 소

(가) 노지채소

노지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시행 초 무·배추 품목에서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전체 채소생산량 10% 수준의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농협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 향후 2017년 까지 24% 수준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사업 주체를 사업농협중심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3,491호 및 모니터 요원을 1,79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 초년도 2개품목 이던 것을 2007년도에는 2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조금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적립한 자조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조금 품목 및 단체수를 늘려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제도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조용범)

(나) 시설채소

199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38백만불에 불과하던 채소류 수출이 2006년 137백만불로 증가하였다.

기 지원된 시설원예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시설원에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순회 지도로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40여종의 온실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수출물류비 및 수출 구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시설채소류의 생산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 채소에 대해서도 수급안정제도를 도입한 후 2002년에는 토마토, 풋고추를 추가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품목과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06년 시설채소 자금조성규모는 2,222억원이다.

(농림부 채소특작과 사무관 박봉수)

3. 과수·화훼산업

가. 과수산업

과실류는 1990년대 후반까지 총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과잉생산, 소비감소 등으로 정체상태이며, 과수농가 247천호 중 전업 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7.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7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수는 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나 농가간 재배기술 수준의 편차가 커서 품질에 따른 가격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가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산과실의

소비는 과채류 등과의 소비대체로 정체상태인 반면 과실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낮은 밀식사과원조성 등 생산시설 현대화와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2004년부터 한·칠레 FTA체결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과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까지 7년간 조성될 FTA기금 1조2천억원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조직에 집중 지원하고, 고품질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핵심 생산자조직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2006년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557억원(3,478ha)을 지원하였으며, 과수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비 103억원(367ha)를 지원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과실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하여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과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사업비 50억원(6개소)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

쟁력 및 교섭력을 높이고,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산지 유통센터 4개소(211억원)를 설치하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서 재배농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을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3,610ha에 대해 폐업지원금 1,445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폐원하고자하는 경우 나무제거비 등을 지원하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49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도에는 한-미 FTA 체결 및 DDA 등 개방에 대비하여 FTA기금 및 농업농촌 발전대책 투융자계획과 및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보완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경쟁력제고 대책과 유통개선 및 소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367억원을 지원하여 2,939ha에 상당하는 과원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의 생산을 유도하고,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비 83억원을 지원하여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는 한편,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묘목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과수우량묘목 지원사업비 65억원(10개소, 84ha)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산지의 마케팅 능력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07년에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지원해 온 과원폐업지원 사업은 해당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격자에 대해 지원을 해나가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말에 동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개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낮은 과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며 2007년에는 경쟁력이 낮은 과원 등 800ha (85억원)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쟁력 제고 및 유통개선 대책과 병행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과실브랜드 경영체 21개소를 육성해 나가고, 과실류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수급이 불안한 경우 구매지원 및 유통협약 등을 통해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가격불안을 최소화하고, 수급불안이 심화될 경우에는 유통명령을 발령하여 과잉물량의 시장격리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자발적인 수급조절과 시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성된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조금사업비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과수화훼과 사무관 안형덕)

나. 화훼산업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화훼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에서는 화훼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산 신품종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낙후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선진 유통체계 도입 및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통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꽃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화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화훼생산수출단지 사후관리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을 중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 분야

우선, 화훼 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수출업체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파워브랜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훼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국내품종 개발 보급확대를 위해서 국가민간분야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농진청에 품목별 품종개발 보급사업단을 두어 현재 운영중이며 2015년까지 291억원을 투입하여 장미보급률을 현재 1%에서 30%로 국화는 20%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유통 분야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전국 3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최신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장미 절화에 대해 습식유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이를 평가보완하여 습식유통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정부지원을 추진 할 예정이다.

소비 분야

우선,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원예 체험 등 찾아가는 생활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꽃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홍보확대 및 소형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홍보회, ‘꽃의 날’ 행사, 실내외 정원 콘테스트 등 각종 행사 지원 등

과 함께 초등생 등 청소년 대상 꽃 체험교실 확대 등으로 미래 꽃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해 나가고,

꽃 기능성 등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확대 추진을 위해서 케이블 TV, 라디오, 지하철 PDP 등 동영상 광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입 분야 등

수출 경쟁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 전략 품목의 브랜드 경영체 육성으로 재배 단지와 농가를 계열화하고, 수확 후 공동 선별·포장·수송 등 물류 통합을 통한 연중 공급체계 및 물류비 절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할 나가야 할 것이다.

유통공사의 시장개척사업비를 더욱 확대해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재배시설 견학 등 상품 우수성 홍보 및 해외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부 과수화훼과 기술서기관 김대경)

4. 축 산 업

가. 한우산업

UR협상 등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추진하였다.

(1)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현재 137천농가, 895천두가 가입하여, 2007년도 6월 현재 가입암소 사육두수 대비 약 97%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 구축,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부터 거세우에 대해 지급하던 거세장려금제도를 2004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 이상 거세우에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최근 한우 1등급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2006 : 44.5% → 2007.9. : 49.7)하고 있고,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2006년까지만 지급하고 중단되었다.

또한,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축협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 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 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로 품질이 높고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3) 소비홍보 및 산지소값 안정대책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우 자조금을 의무화하고, 거출된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TV광고 제작·방영, 114안내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유통감시단 설치,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산지소값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

기출하 및 송아지 입식자제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 추진하였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박홍식)

나. 낙농산업

우유 수급안정을 위하여 원유 생산 쿼터제를 정착시키고 소비촉진 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1) 사육여건 및 사양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성 증가

생산비가 2005년 468원/kg에서 2006년 479원/kg으로 2.1% 증가되었으나, 사양관리 개선과 젖소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6년 두당 산유량은 8,267kg으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젖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 우유수급안정 추진

원유 생산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우유'의 소비감소로 인해 공급 과잉구조 상태에 있으나, 원유 생산 쿼터제가 정착됨에 따라 원유 수급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은 전국적으로 2,176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08천톤은 원유로 직접 사용(백색시유 1,363, 가공시유 193, 유제품 352)하고 나머지 268천톤을 분유로 가공하여 전년도 보다 잉여량이 17% 감소하였다.

한편, 원유 유통단계의 수유·검사방식을 개선하고, 낙농가에 유질개선을 지도하여 공장 도착시까지 고품질 원유가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위생 성적 및 유질 향상 측면에서 체세포수 1등급의 비율은 50.5%로 2005년도에 비해 6.8% 증가하였고, 세균수 1등급 비율은 95.9%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유지방 비율은 4.03%로 전년에 비해 0.02% 증가하였다

소비자 기호 변화, 미국·EU 등 낙농 선진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유 생산·공급체제 구축, 유통비용의 절감, 사료 자급기반 확충, 낙농경영의 체질 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낙농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유 수급관리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생산자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거래원칙을 확립하여 유통을 합리화하고, 낙농가와 유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2005.7월)하였다. 동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15인)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미나·심포지움·간담회·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쟁점간 이견 폭을 줄여 생산자·유업체·정부 3자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낙농자조금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방영, 낙농체험목장, 3대 가족소풍 등 이벤트 및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교사용 학습 지도서를 개발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국산 유제품 개발과 노후화된 생산시설 자동화 등 유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우유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전국쿼터관리제 단계적 시행, 전국적인 우유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기구(낙농위원회) 설치, 우유의 특성상 계절적 수급편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에 대하여 가공원료유 지원방안 도입, 낙농진흥회 직결전환에 따른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우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유수급관리제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유업체 등 각 이해주체가 서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우유 소비기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2006년도부터 의무화된 낙농자조금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우유 급식사업 대상과 급식인원을 확대하고,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활용하여 우유소비 저변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집유장·유가공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원유의 품질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산원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젖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다. 양돈산업

FTA 등 대외개방 확대, 사료가격 상승, 분뇨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돈 의무 자조금 정착,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향상, 돼지고기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양돈산업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07년 9월 현재 966만두로 작년 동기 937만두에 비해 3.1% 증가하였으나, 양돈 농가수는 전년동기의 11천 농가보다 9.6% 감소한 10천 농가로 규모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산지가격은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3~9월)와 비수기(10~12월)로 구분되어 가격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BSE 발생 및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로 2004년 이후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2007년도는 도축두수와 수입물량 증가로 2006년도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입개방(1997) 이전에는 수매를 통한 수급조절이 가능하였으나 수입개방 이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매 추진이 어려워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양돈자조금과 자율수급조절 사업을 통하여 돼지고기 소비홍보 확대,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돼지고기 수출 추진

구제역(2000, 2002) 및 콜레라(2003, 2004)가(삭제) 발생으로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수출량이 급감한 이후(삭제), 러시아, 필리핀, 태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추진 중이다. 값이 저렴하고 동남아국가에서 선호하는 부산물(스킨, 지방, 간 등) 등을 태국과 필리핀 등에 수출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주요 수출대상국 검역관 및 수입업체 초청 시찰, 부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홍콩·대만 등 돼지고기 수출 승인절차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강민철)

라. 양계산업

2007년 9월 양계 전업규모(3만수이상) 농가는 1,576호로 전체 사육농가 3,627호 대비 43.5% 수준이며 사육두수 점유율은 75%로 다른 축종에 비해 기업화규모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1) 닭고기 수출입동향 및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강화

2006년 닭고기 소비량은 약 42만톤이며 이중 수입량이 7만6천톤으로 자급율은 82%수준으로 2003년 76%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1997년 7월 1일 수입 개방된 이후 매년 관세 감축과 함께 수입물량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는 미국, 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6년말 국내에 AI가 발생하였고 가격상승을 기대한 업체의 병아리 과잉 입식으로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다. 2007년 9월 현재 닭고기 수입량은 4만4천톤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다.

2003년말 국내 AI 발생으로 2004년 닭고기 수출량은 735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5년 3월 대일 수출재개로 2006년은 2,854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출량을 기록하였다. 2006년말 AI가 발생하여 수출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형닭(수출규격) 생산시설 지원, 컨설팅 지원, 해외 닭고기 시장조사,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수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일본식품 박람회 참가, 할인판매 행사 및 대미 닭고기 수출협상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양계산업 안정대책 추진

FTA/DD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는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품질고급화를 도모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육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업체(현재 5개소)를 확대하고, 계란도 브랜드인증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 등급판정 실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의무화, 사육·유통 단계 HACCP 도입 등을 통해 유통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종란과 병아리 거래시 혈통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량종축 유통방지를 위한 종계장·부화장 점검을 통해 우량 종축 공급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국내 양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열악한 기존 사육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2008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가축운반체계 개선을 위해 특장차량 구입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질병예방 등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양계의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종계·종오리 D/B 구축을 통해 수급 예측체계를 확립하고, 풍수해·설해·화재 등에 대한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조정래)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1)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활성화

2001년 축산물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낙후된 국내 축산물 유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유통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 LPC) 건설사업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하여 7개소를 완공하였다.

※ LPC 건설비 : 총 156,550백만원(용자 89,612, 자부담 등 66,938)

LPC 가동에 따라 유통단계 축소, 냉장·부분육 유통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일반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LPC 건설초기에는 막대한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압박, 경영개선 미흡, 설비(Utility) 유지비용 과다 소요, IMF 사태('97.12), 구제역 발생('00.12)에 따른 수출중단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건설자금 금리인하(당초 5% → '02년 4% → '05년 0%), 지육반출금지 등 규제사항

폐지, 건설자금 상환기간 연장조치(당초 5년거치 10년상환 → '03년 7년거치 10년상환) 등 가동율 상승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 도축장 육성을 위하여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하고, HACCP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위생수준이 높은 LPC의 경우 전체 도축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축 가동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 전국 돼지 도축실적(천두) : ('02) 15,338 → ('04) 14,620 → ('06) 13,003

※ LPC 가동율(돼지, %) : ('02) 53 → ('04) 58 → ('06) 73

현재, 정부에서는 도축장 과잉에 따른 동반부실을 우려, 「도축장 구조조정 대책('07.3)」을 수립하여 LPC를 포함한 우수한 도축장을 중점 육성하고 위생이 열악하거나 부실한 도축장은 도축장 통폐합자금 지원 등 제도적·경제적 측면의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다.

※ 소·돼지 도축장(개소) : ('81) 315 → ('91) 171 → ('00) 113 → ('06) 106

※ 전국 도축장 가동율(돼지, %) : ('02) 53 → ('04) 47 → ('06) 45

앞으로도 LPC 등 시설이 우수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재정지원, 제도적 보완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김대균)

(2)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DDA, FTA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06년 2월 “축산물브랜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3년까지 80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여 브랜드 사육비중을 한우는 2006년 32%에서 20년 50%까지, 돼지는 51%에서 70%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주요 추진내용은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37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1,0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현지실사 평가 및 브랜드 경진대회를 통하여 22개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300억원의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9월 7일~9일, 코엑스)하여 우수 브랜드경영체에는 정부차원의 시상과 홍보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기존의 한우·돼지에서 육우·육계를 추가하여 2006년에는 36개 우수 브랜드(한우 15, 돼지 14, 육우 2, 육계 5)를 선정,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브랜드 사업을 지원받은 73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지원 할 계획이다. 브랜드의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947억원)을 브랜드 경영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지원한 경영체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게는 브랜드 경진대회 수상 경영체와 함께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로 지원(2007 : 200억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사양·경영·브랜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민간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를 지정하고 브랜드 경영체에서 생산·경영·재무와 마케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 의모임과 함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4월부터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2007년 인증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로는 차별화된 “우수 축산물 브랜드전시회”를 8.30~9.1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우수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소비자 인식제고 등 다양한 홍보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07년도 전시회에는 입장을 유료화하고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전시회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쾌적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2월에는 정부지원 대상 브랜드경영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기발전을 위한 마케팅 행사, 우수업체 벤치마킹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브랜드 육성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브랜드 사업을 통하여 브랜드 주체가 위생·안전성·품질·방역·환경 등 축산현안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신대식)

(3)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및 사업확대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는 2003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자에게 징수하고 있다. 2005년까지의 등급판정수수료는 소 1,600원/두, 돼지 300원/두, 계란 0.5원/개를 징수하였으나,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재정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2006년부터 수수료단가를 인상(소 2,000원/두, 돼지 400원/두, 계란 1원/개)하였으며, 2007년에는 닭 등급판정이 추가로 시작될 예정으로 수당 1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DDA/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양축농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수수료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 부분육 등급표시 사업은 소·돼지·계란과 같이 등급판정 수수료를 2006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행정사무관 박원태)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국내 부존사료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현재 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6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청보리 등 재배지원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남은 논밭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 초지조성의 어려움으로 기성초지를 보완하거나, 용수원 개발, 목로개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개선하였다.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볏짚의 암모니아 처리 및 생볏짚 곤포사 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으로 볏짚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조사료 생산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교육으로 농가의 조사료 생산·이용효율 확대 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등

반추가축용 섬유질가공사료(조사료 위주)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섬유질 가공사료 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3~1998년까지 131억원, 1999~2006년까지 2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농업사무관 전익성)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축산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

축분뇨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5년말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의 97.8%가 설치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05년에 333억원에서 2006년 341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오수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06.9)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추진중에 있다. 동 법령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액비저장조를 560기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8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과」를 신설함으로써 가축분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설한 시공과 축산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고, 친환경축산 등 여건변화에 맞는 환경친화형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설정·보급할 계획이다.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 기준과 가축단위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퇴액비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농업사무관 하옥원)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체계의 강화

(1)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축 사육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각 단계별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축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축산물 잔류방지를 위해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휴약기간 준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도입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부터 최종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이 적용됨에 따라 행정소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HACCP 지정 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도축장·축산물가공장 외에도 집유장·축산물 보관·운반·판매장에까지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미생물검사 및 수거검사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식용란도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를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는 수거검사 및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통중에 병원성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외국산과의 구별을 위해 우선, 닭, 오리 고기에 포장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7년부터 1일 8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부터 의무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입축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2007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육단계 HACCP 제도 적용을 위해 돼지에 이어 소·닭의 사육단계 HACCP 적용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준도 제정하여 사육단계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육을 위주로 검사하고 있는 잔류물질 검사를 신장 등 내장과 근육으로 확대 적용하고, 규제검사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한층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육중 미생물검사는 도축장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유통단계에도 권장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의 위생수준을 한단계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이기중)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구제역 방역은 매년 재발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와의 공조체제하에 범정부적 차원의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 검역은 공항만 X-ray 검색,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휴대육류 집중검색·검역탐지견 배치강화 및 미신고자 범칙금 처분, 해외 여행객 신발소독, 수입건초 및 나포·피항어선 소독, 외국인 농업연수생 등 관리,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방역은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구제역 예찰 모니터링 검사, 지역 예찰담당관 지정,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방역교육 강화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구제역은 200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돼지열병(콜레라)은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 이후 5개월만인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조기차단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10월 말까지 4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광우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반추동물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광우병 검사체계를 단순 검사두

수에서 2007년부터 OIE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개선하면서 검사 물량도 2004년 2,323건, 2005년 4,154건, 2006년 6,016건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도축되는 소 전두수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4년 3월 20일 경기 양주를 마지막으로 7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총 19건(닭 10, 오리 9)이 발생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모든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지역(3km) 및 경계지역(3~10km)을 설정하여 동 지역내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 및 살처분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민·관·군 합동으로 추진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6년 11월22일 전북 익산에서 다시 재발한 이후 2007년 3월6일 충남 천안을 마지막으로 3개도 5개 시·군에서 총 7건(닭 4, 오리 2, 메추리 1)이 발생하였다. 이 기간동안 각 발생지별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가금류 및 출입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를 하고, 위험지역내 닭·오리 등 살처분 실시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 2007년 6월 18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임을 통보하였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평시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가축방역대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질병별 시기별 발생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방역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브루셀라, 광

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국경검역, 국내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우선 가축사육업 등록,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증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 부여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등 가축방역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폭주 등으로 현장 방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짐에 따라 시도, 시·군 등 일선 방역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방역현장에서 절대 부족한 수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 97개 시·군, 19개 가축위생시험소에 123명의 공익수의사를 배치하였으며, 매년 150명 공익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450명 공익수의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서기관 김태용, 수의사무관 조옥현, 수의사무관 김용상, 농업사무관 하혜경)

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소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이동·도축단계까지 이력을 DB화하여 관리하며, 도축단계 이후는 쇠고기

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시켜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등 이력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동 제도의 작동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 대상 DNA검사용 시료를 채취·보관하고, 유통되는 쇠고기의 표본 샘플과 대조 확인하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력추적제는 유럽에 이어 일본·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DDA·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한우산업 발전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BSE 파동이후 축산물을 중심으로 Traceability를 우선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였다. 과거 소 전산화 실패, 사육농가의 사육규모 영세성, 기록문화 미 정착, 도축·가공·판매시 추가 인건비 소요 등 관리비 증가, 재고관리 어려움, 농가의 세원노출 우려 등 수 많은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 발전과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동 제도의 기대효과로 첫째,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환축의 이력을 추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둘째,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예방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우리나라 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함으로써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1) 그동안의 추진실적

쇠고기 이력추적시제는 2004년 10월 황성한우 등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선

정, 시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시범사업을 자체 평가하여 ①지역 단위 추가, ②소 귀표체계 개편, ③연계사업장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일환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시범사업 추진규모를 확대하여 브랜드경영체 5개소와 참여를 희망하는 3개 지역(과주·김제·김해)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2006년 7월에 참여를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 6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2008년 본사업에 대비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참여 규모를 2006년말 215천두에서 653천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 범위를 한우 위주에서 육우(2개 브랜드경영체)까지 확대하며, 지역단위 참여 형태도 기존 시·군단위에서 도 단위(경기도)와 같이 광역 지자체까지 넓히는 등 사업 추진 다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7년말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규모는 78개 브랜드경영체·지역의 45천여 농가가 참여하고, 약 67만여 두의 소가 전산시스템에 등록, 이력추적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한·육우 총 사육 두수 1/3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이들 참여 대상과 연계한 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 연계사업장은 시범사업 초기 각 10개에서 2007년 말까지 도축장 38, 가공장 31, 판매장 172개소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용이하게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적용되는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산시스템 구축, DNA동일성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참여업체 운영비 및 판매장 홍보용 터치스크린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2) 각종 전시회 등의 행사참여, 언론보도, 기고·소비자 교육 등을 통한 사업홍보

동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 중앙 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

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시연회('05.3), 국제혁신박람회('05.5), 국제축산박람회('05.8), aT센터 창업박람회('06.3), 축산물브랜드전('05.10, '06.9) 등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사례로 선정되어 광화문청사 1층에 마련된 「정부혁신-전자정부 전시관」에 2006년 9월부터 전시중이며, 추진실적·활동에 대한 행자부-정부혁신본부의 엄격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우리부 혁신능력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축산관련 각종 대회 및 행사, 소비자단체 교육 및 전시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전문지, 월간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취지 및 추진상황, 기대효과, 추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 향후 추진계획

2007년말에는 2008년도 본 사업 시행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시행해온 시범사업 전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본 사업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근거법령 시안마련, 기관별 역할분담, 사육·가공·판매단계 세부추진방안 등을 마련하며, DB관리 등 전산운영체계와 사육단계 DNA검사 추진방안 등 본 사업 실시를 위한 총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07년에는 본 사업 시행 근거법률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상기 T/F에서 마련하고, 국회 농해수위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정기국회에 상정, 연내 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정보관리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력제 DB를 농림부 Agrix로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소 귀표 전산관리시스템과

DNA검사결과 DB관리 시스템을 추가하고, 현재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별 순차 입력·검색에서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과정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현재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보입력 및 검색 프로그램을 실제 쇠고기 유통 상황과 부합되게 조정(프로그램 Upgrade)(삭제) 하는 등 전산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이학주)

5. 입 업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1)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조림정책은 그동안 황폐된 국토에 녹화와 경제적 기능증진 위주의 용재생산을 목적으로 단위 면적당 목재생산량이 많은 침엽수 위주의 조림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이 원하는 산림환경에 대한 가치변화로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유지 등 산림기능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국가조림정책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육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최소한 292만ha의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자원조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조성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림사업에 필요한 우량묘목의 생산·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용 우량·건전묘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07년 산림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업무를 추진하였다.

첫째, 우량한 산림용 종자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임분 확충·관리

검증된 산림용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채종원 조성·관리 발전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채종원 수급이 어려운 수종에 대해서는

OECD에서 정하는 채종립 구비조건(OECD/CFRM)에 맞는 채종립을 확대 지정하여 국가에서 채취한 종자를 묘목대행생산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종자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 종자공급원 조성실적 >

구	분	면 적(ha)	개 소 수	비 고
채	종 원	714	212	
채	종 립	286	64	

* 2007.10월 현재

둘째, 법령정비 및 산림용종묘 유통관리체계 구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묘목의 품질·규격, 산림용종묘의 조사·검사규정을 마련하였고, 특히 종자채취에서부터 묘목을 생산·유통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용종자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하여 불량종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셋째, 종묘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2002년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건전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간이온실,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종자저장고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묘목생산기반조성과 함께 지역산업으로서 발전시킴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실적 >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정
관 정	92공	20	20	22	10	10	10	5
간이온실	74동	16	14	17	9	9	9	8
묘포지 토양개량	341ha	-	96	98	62	51	17	34
양묘장비구입	47조	-	-	10	10	16	14	7
종자저온 저장시설	8동	-	-	1	1	-	1	

※ 2007년까지 보조금액(국비) : 754백만원

※ 채종원은 함은 우량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인공포지를 말한다.

※ 채종림이라 함은 채종원에서 부족한 종자채취하기 위해 지정된 우량임분을 말한다.

(2)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山地)와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추진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나라 건설을 목표로 경제림 14천ha 및 생활권 주변에 5천ha의 큰나무, 경관조림 등 다양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산림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숲의 특성에 따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소득경영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경영모델숲을 조성코자 2005년부터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경영모델숲·경제림육성 단지에 산림자원육성과 병행하여 생산·가공·유통 등 연관사업을 집중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산림특화시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용재·소득수종 조림과 생활권 공익조림을 추진하면서 대면적 단일 수종의 획일적 조림방법을 지양하고 조림대상지의 지형, 토질, 지세 등을 고려한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 조성과 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수 조림, 활엽수 밀식조림, 용기묘 조림, 과종조림, 경관조림, 수원함양조림, 금강소나무 육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대 면적 벌채 - 조림하는 방법이 여건 악화됨에 따라 자연 복원력(옴짝)을 이용하여 맹아갱신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1960~197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황폐된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하였던 리기다 소나무림이 벌기령이 지나 노쇠하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만연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벌채하여 국산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리기다소나무림을 친환경적인 갱신방법으로 약용·특용수종 및 산주가 원하는 소득수종으로 다양한 갱신을 추진코자 리기다소나무림 벌채·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림 단지 육성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할 만큼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으나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우리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60%를 차지하는 청년기 산림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우량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주어야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성장이 불량한 산림은 수종갱신을 통해 경제성이 높은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하고, 우량 천연림은 적극적으로 보육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는 우량 활엽수림, 소나무, 참나무 등의 천연림과 인공림 234만ha에 대한 숲 가꾸기를 경제림육성단지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림육성단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전국의 450개 단지 292만ha(국유림 : 105개 단지 58만ha, 민유림 : 345개 단지 234만ha)의 경제림육성단지('05. 9. 26 확정)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여 추진하기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있다.

민유림에 대한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은 2006년에 도별로 1개소를 선정하여 8개 시·군 25개 단지 242천ha를 시범적으로 수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8개도 45개 시·군 138개 단지 1,095천ha에 대한 관리계획은 연말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GIS 수치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기관의 관리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리기관별로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도면의 제작 및 배포를 완료하고, 적지적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산림지도를 제작하여 일선 시·군과 국유림관리소까지 배포함으로써 기후와 토양 등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과학적으로 선정하여 경제림을 육성토록 하였다.

< 경제림육성단지현황 >

(단위:ha)

구 분	계	국 유 림	민 유 림
단 지 수	450개소	105개소	345개소
면 적	292만ha	58만ha	234만ha

< 민유림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계획 >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시·군 수	128	8	45	45	30
단지수(개소)	340	25	138	119	58
면 적(만ha)	234	24	109	72	29

※ 국유림(105단지, 58만ha는 기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관리)

(4)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가) 추진배경과 정책목표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숙아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天然林保育), 천연림개량(天然林改良), 산물수집 등으로 구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낮고 국토자원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기간내에 추진한 숲가꾸기 사업은 총 2,713천ha로 계획(1,560천ha) 대비 174%를 실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숲가꾸기 사업은 기능인영립단,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 숲가꾸기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1,554만명(상시 연평균 1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3년에는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고 전문 기능인에 의한 기술적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모두 346천ha의 산림을 가꾸어 주었다.

사업별	내용	보조연도
풀베기	조림목의 피압방지 등 사후관리	1987
어린나무가꾸기	조림목의 초기생장 촉진	1986
덩굴제거	인력으로 제거(1985년 이전) 글라신액제(1985) 및 디카바액제(1995)를 이용한 약제제거 실시	1982
숙아베기	생산 또는 수익추구 간벌 실시(1980년 이전) 임내정리 및 무육(撫育)차원의 간벌 실시(1980년 이후) 도태간벌, 열식간벌 실행(1985)	1988
천연림보육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에서 참나무림에 대해 최초 실시(1978) 천연림 우량목 무육 개념 도입(1982)	1985
천연림개량	목재생산 목적이 아닌 천연림의 형질 개선을 위한 작업 실시	2004
산물수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물수집 실시(1998 ~ 2002) ※ 2003년부터 재해발생 우려지에 대하여 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물수집사업 실시	1998

그동안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에 시민단체와 함께 숲가꾸기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뿐만 아니라 산림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숲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 훈령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숲의 기능별, 목표생산재별로 차등화된 숲가꾸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 ~ 2006) 〉

(단위 : 천ha)

연 도	실 적		
	계	정책사업	공공근로사업
계	2,372	1,916	456
1998	257	214	43
1999	283	154	129
2000	276	159	117
2001	229	134	95
2002	296	244	52
2003	346	346	-
2004	337	337	-
2005	348	348	-
2006	337	337	-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2002년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능인에 의한 기술적인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적·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100만ha의 숲을 가꾸는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사업에서 탈피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숲가꾸기를 이용한 고용창출에 대한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을 가꾸어 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를 신규 사업(사업명:공공산림가꾸기)으로 추진함으로써 2006년까지 상시 고용인원 4,270명(연인원 1,558천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참여 근로자의 100%를 2주 이상의 기술교육을 통해 임업분야의 전문노동력으로 창출하고자 하였다.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000	154	175	210	227	234
공 익 림	300	38	51	65	72	74
경 제 림	500	76	84	105	115	120
방 재 림	200	40	40	40	40	40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 최근 3년간 일자리 제공 실적 〉

사업명	2004년		2005년		2006년	
	인원(명)	금액(백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계	6,341	119,013	8,651	147,385	10,198	157,970
정책숲가꾸기	6,341	119,013	6,904	124,973	7,675	124,516
공공산림가꾸기	-	-	1,747	22,412	2,523	33,454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일자리는 12개월 환산인원임)

특히, 실업자 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2001년 여성참여율 4.3% → 2007년 5월 현재 여성참여율 22%)과 산림분야의 대졸자의 일자리 제공의 차원으로 업무보조요원을 신설하였다.

(다) 2007년 향후계획

2003년도에 수립한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과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7년은 1,981억원(국고)의 예산으로 20만ha의 숲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 2007년 각 부문별 숲가꾸기 세부 추진계획 〉

구 분	계 획(단위)	비 고
경부고속도로 주변 숲가꾸기	1,084km	서해안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녹색댐 조성 사업		
- 5대강 유역 수원함양림 숲가꾸기	16,520ha	한국 수자원공사와 공동사업
- 기본설계 계획	5개댐	평림, 연초, 구천, 수어, 밀양댐
설계·감리제도 시행	전면시행	50ha이상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3,400명	고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 숲다운 숲 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설계·감리 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2006년 8월 5일부터 50ha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였다. 금년에는 설계·감리 지침 및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의 보완을 통해 숲가꾸기 분야의 품질 혁신과 표준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능별·경영목적별로 숲가꾸기 방법을 차별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나무·참나무를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육성해 나가며 간벌재 등의 수집비 지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8개도별 1개소씩 산물수집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사업장을 규모화하고 임업기계 장비를 활용하여 간벌재를 전량 수집 및 매각을 실시하여 산주에게 소득을 환원하고, 더불어 간벌재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추진 예정이다

〈 2007년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사업량	예산	비 고
계	200	1,981	예산은 국고기준
민 유 립	160	1,455	
국 유 립	40	526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금년은 435억원의 예산으로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2,833명을 상시고용하며, 사업 대상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림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댐·호수 및 주요 강유역 등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주변 산림 등이다.

고용형태는 일일 고용형태로 주 40시간 근무제이며 주차, 월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일일 임금 외에 부대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기술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2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희망자에 한해 최대 6주까지의 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고 있어 향후 숲가꾸기 분야에서 기능인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추진계획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 고용인원(천명)	14	3	3.4	4.8	5.5
○ 사업비(억원)	2,210	336	435	572	720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 고속도로변 숲가꾸기

2005년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에서 2006년에는 경부고속도로 잔여구간 및 영동, 중부, 호남고속도로 1,072km 주변 산림을 가꾸어 숲가꾸기를 통한 경관림 조성을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금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1,084km를 속아주어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고, 최종 수확시에 생산되는 목재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

< 2007년 고속도로변 경관림 조성사업 계획 >

(단위 : ha)

고속도로	대상구간	사업시행
합계	4개노선 1,072km	4개지방청, 7개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시흥구간(341km) 주변 산림	북부청, 중부청, 경기, 충남, 전남
중앙고속도로	부산~춘천구간(288km) 주변 산림	북부, 중부, 강원, 충북, 경북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양평구간(204km) 주변 산림	남부청, 중부청, 충북, 경북, 경남
남해고속도로	순천~부산구간(169km) 주변 산림	서부청, 전남, 경남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부산구간(82km) 주변 산림	경북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

(가) 2006년 이행실적

2006년에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대형산불 없는 한 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12월말 현재 40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평균 543건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산림피해는 254ha로 예년평균 1,843ha 대비 86%가 감소하였다.

기상여건의 불규칙한 변화, 산림내 지피물 등 연소물질 증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산행인구의 증가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산불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일선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노력과 함께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운영, 『산불현장 통합지휘지침』에 의한 지휘체계 일원화, 공중진화 방법 및 절차개선,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등 산불대응 능력의 향상과 산불방지 협정제도를 통한 자원의 활용도 증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06년도 산불현황 >

구 분	5년평균동기 (12.31 까지)	2006년도 (2006.1.1 ~ 12.31)	5년평균대비 증(△)감
발 생 건 수 (건)	543	405	△25%
피 해 면 적 (ha)	1,843	254	△86%
건 당 피 해 면 적 (ha)	3.4	0.6	△82%
건조일수당피해면적 (ha)	17.9	3.3	△82%

금년 산불조심기간에는 시·군, 관리소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4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충 및 전문화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산불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산불진화진입도로 및 소화전 설치 등 산불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불에 대응하는 한편 17개 관련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인 『동해안 산불관리센터』를 가동하여 대형산불 Zero화 및 산불최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2007년 추진계획

2007년에는 시·군, 관리소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천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4천명, 산불감시원 12천명, 공익근무요원 3천명 등 25천명 산불위험시기에 집중 투입하고, 산불관리센터를 3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인력·조직의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산불진화헬기 48대와 시도 임차헬기 41대로 강력한 공중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남 함양에 격납고를 추가 설치하여 산불현장에 산불진화헬기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불현장에 진화용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방지시설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불예방 홍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홍보 매뉴얼을 제작, 산불발생 및 진행상황을 언론 및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며, NGO·시민주도의 산불조심 100만명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산불조심 홍보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7개 산불진화 주관유관부처의 역할을 정한 부처공동예규 및 산불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의 현장적용을 강화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지침에 의한 지휘체계의 일원화로 산불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가) 산림병해충 현황

지구상의 약 60만여 종의 곤충 중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2,500여 종이며, 그 중에서 비교적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푸사리움가 지마름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20여종이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1997까지는 발생속도가 둔화 된 상태였으나 경남 함안, 진주지역으로 확산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확산 되어 2006년 말 현재는 전국 54개 시·군·구에 발생하여 피해면적은 7,871ha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공포('05.9.1)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05.10.24)을 수립·시달하였으며, 2005년 11

월부터 감염목 무단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솔잎혹파리는 1988년 327천ha 발생면적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73천ha까지 감소되었으나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149천ha, 2006년 196천ha로 다시 확산추세로 반전되어 방제예산을 확대하여 집중방제하고 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해안 우량 해송림을 고사시켰으나 꾸준한 항공방제와 나무주사로 회복 추세에 있으며, 1983년 솔껍질깍지벌레로 판명된 이래 1996년(16천ha 발생)을 정점으로 2004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발생량이 45천ha로 크게 증가하여 방제예산을 확대하여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하다.

돌발해충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 증감 폭의 변화가 있으며,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및 고온다습한 기후영향 등으로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잎벌 등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조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해지역 확산이 우려된다.

(나) 2006년 이행실적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에 주력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34천ha, 솔잎혹파리 26천ha 밤나무 해충 등 기타 병해충 124천ha를 포함하여 총 184천ha의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다.

(다) 2007년 추진계획

2006년말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390천ha로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6.0%에 해당되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27천ha, 솔잎혹파리 43천ha, 밤나무 해충 기타 87천ha를 포함한 157천ha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였다.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발 생 면 적	254,190	243,035	315,607	389,955
방 제 면 적	205,010	181,471	170,183	183,634
투 자 액	42,175	33,038	54,539	83,603

(3)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우리나라는 산림 모양의 대부분이 풍화침식이 쉬운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의 경사도가 급하며, 약 1,300~1,500mm가 되는 연평균 강수량의 60%가 여름철인 6~9월에 내리는 자연조건으로 인한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과거 전쟁에 의한 피해와 남벌, 화전 등으로 인해 195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산림면적의 10%인 68만ha가 황폐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를 복구하여 치산녹화가 성공하게 된 이면에 ‘사방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한편, 최근에는 엘니뇨(El Nino)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많은 비구름을 동반한 태풍도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근래의 사방사업 시공은 재해방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주요 계곡과 경사면 등에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예방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사태가 하류의 농경지와 주택,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324개소, 산지사방 70ha, 예방사방 30ha, 야계사방 33km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재해예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2004년 시범실시 3개소에 이어 2006년까지 총 15개소를 시

공하고 올해에도 19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 추진할 사방사업의 종류별 물량은 다음 표와 같다.

< 2006 실적·2007계획 >

연도	산지사방	예방사방	해안방재림 조성	야계사방	사 방 댐	사방댐 준설
2006	107ha	30ha	8.8ha	53km	191개소	297개소
2007	70ha	30ha	10ha	33km	324개소	196개소

※ 산림유역관리사업 (2006) 7개소 (2007) 19개소는 별도임

아울러 2004~2005년 동안 추진한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산사태위험지를 과학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및 사방댐 등 사방사업시행 예정지 선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연계시킨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재해예방업무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4)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가) 수목원조성 및 육성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21세기는 생물유전자원의 양적 및 질적인 확보가 국부의 척도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전·확보·이용 등을 둘러싼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

집·보전·이용 및 자원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을 적극 진흥 및 조성·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에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가 확립되는 등 수목원조성과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6년말 현재 국·공립 22개소, 사립 11개소, 학교수목원 6개소를 비롯하여 총 39개소를 조성·운영 중에 있다.

〈 수목원조성 · 운영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0	27	34	37	39
국 립 수 목 원	1	1	1	1	1
공 립 수 목 원	10	14	18	19	21
사 립 수 목 원	4	6	9	11	11
학 교 수 목 원	5	6	6	6	6

※ 사립수목원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 통계임

또한 2007년에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외 사립수목원 2개소가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식물종 보유 등 규모나 수량 면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인구 50만명당 수목원 1개소를 목표로 총 90여개소의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우리의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식물유전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증식·보존·관리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을 물론 국민의 자연체험 및 식물학습과 정서문화함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목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사료를 영구적으로 보전하여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국 국·공립 수목원 내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분야 역사서적 및 전통 산림문화 등과 관련된 각종 산림사료에 대한 전시시설과 식물·곤충·수석·화석·석엽 등의 표본을 보존하는 표본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관, 각종 산림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영상자료실, 산림사료의 보전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실은 물론 관람객들을 위한 방문자 안내센터 등이 있다.

1987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산림박물관은 2006년말까지 광릉내의 국립산림박물관을 비롯하여 춘천, 공주, 순창, 안동, 진주, 대구, 청원, 오산, 완도 등 총 10개소에 산림박물관이 건립·개관하고 있다.

〈산림박물관건립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산림박물관 건립	4	5	9	10	10

2007년에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산림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공립수목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연학습과 산림역사에 관한 볼거리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 생태숲 조성

지구온난화, 사막화에 따라 산림파괴 등으로 매년 열대우림 생물의 0.5%상당이 멸종되고 있으며, 세계자연연구소(WRI)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전체생물의 약 33%가 멸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종 감소로 자국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유출방지 및 배타적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자생식물자원 보존은 단순히 소극적인 보호측면을

벗어나 자생지조사 및 보존·증식·복원 등 보다 능동적인 보전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희귀·특산식물을 포함한 자생식물 위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경쟁력 있는 숲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인위적·자연적 위협으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나아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복원 기법을 개발하는 등 산림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생태숲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제주도의 한라생태숲을 시작으로 2006년말까지 21개소의 생태숲이 조성 중이며, 수목원조성 사업과 같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희귀·특산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과 멸종위기 식물을 환경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멸종방지 및 감소속도 완화하여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태숲조성 · 운영 현황 〉

(단위 : 개소)

년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생 태 숲 조 성	6	8	11	16	21

2007년에는 부산, 포항, 통영, 산청, 하동 등 5개 시·군에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식물을 현지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으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5) 5대강유역 산림 특별관리로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용수개발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림과 숲가꾸기 사

업을 전국의 댐 유역과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양림 조림은 넓은 면적의 모두베기(개벌)를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식재,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깊게 들어가는 상수리, 굴참 등 참나무류, 자작나무 등 심근성 수종을 조림하고 초본류, 관목류 등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함으로써 녹색댐 기능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사업 추진과 5대강 및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이 양호한 활엽수 중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조림은 ha당 5,000본을 식재하고, 상수리 과종조림은 ha당 5,000상을 과종하는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의 맑은 물 공급기능과 수자원 확대를 위해 5대강유역 수원함양림 종합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사업으로 댐유역 산림을 녹색댐으로 조성하여 수질·수량을 개선하고 토사유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인공댐과 녹색댐의 기능을 상호 보완해 나가는 녹색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한강 등 5대강 유역 16,520ha와 12개댐 유역 16,632ha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원함양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5대강 유역 전역과 전국 38개댐에 대하여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추진 계획 〉

구 분	실행연도 및 댐 이름			
	2005 ~ 2006	2007	2008	2008 ~ 2009 이후
설 계	2005 ~ 2006	2007	2008	2008 ~ 2009 이후
숏가꾸기	2006	2007	2008	2009 이후
38개댐	8개	8개	5개	17개
	안동,임하,소양강, 황성,달방,광동, 부안,보령댐	영천, 안계, 사연, 대암, 선암, 대청, 용담, 섬진강댐	밀양, 평림, 연초, 구천, 수어댐	주암,주암조절지, 합천,남강,운문, 기타 신규댐(12개)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2005년 말 현재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분수림 설정 현황은 14,469건 77,001ha, 2006년 말 현재 국유림대부사용허가분수림 설정 현황은 25건, 9,363ha가 감소한 14,444건 67,638ha인 상황이며, 그에 대한 허가 및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산림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광업·골프장·스키장 등의 용도에 대한 국유림대부사용허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산지전용을 전제로 한 대부사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대부지 등은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이 부실한 경우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3,995건 중 88%에 해당하는 3,516건이 양호판정을 받았고 300건(7.5%)이 경고, 179건(4.5%)이 불량 판정을 받아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취소(13건)된 바 있다.

한편, 국유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용도의 사용허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예컨대 2006년 8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산촌주민이 산촌개발사업이나 약초·

산채·버섯재배 등의 용도로 국유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에서도 가능하도록 그 대상지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실질적인 대부사용허가의 건수 및 면적은 조림대부지와 분수림을 제외하면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경영여건 악화로 방치되고 있는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의 경우 1992년 이후 사유입목을 매수(2006년 9,455ha 매수)하여 국가로 환수하고 있기에 조림대부지 등을 포함했을 경우의 대부·사용허가분수림 통계의 건수 및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의 사유입목 매수목표는 32만³, 5,000ha로 책정된 상태이다.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1,400km(남한 684km)에 이르는 국토의 등줄기이다. 또한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서식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대간 지역의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적 가치를 제고하여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토지 263,427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지역 안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

(단위 : ha)

구 분	계	%	핵심구역	%	완충구역	%
면 적	263,427	100	169,950	65	93,477	35

또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산림자원, 자연환경, 문화자원의 계획적인 보호·관리·이용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2005년도에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설악산권 100km를 조사하였으며, 2007년에는 태백산권 157km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 단절되고 훼손된 백두대간을 일시에 복원·복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및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복원공사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은 2006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 4개소의 복원·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 백두대간지역(보호지역, 연접지역 및 보호지역이 통과하는 읍·면·동지역 포함) 사유토지는 2005년도에 2,393ha, 2006년에는 3,397ha를 매수하였으며, 이중 보호지역내 사유토지는 2005년도에 364ha, 2006년에는 566ha를 매수하였다.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은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으로서 대부분이 개발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여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 백두대간지역 사유토지 매수실적 >

(단위 : ha, 백만원)

연 도 별	합계	보호지역 내			연접 지역	보호지역 포함 읍·면·동	금 액
		계	핵 심	완 총			
계	6,117	1,041	301	740	800	4,276	27,436
2005년	2,393	364	123	241	208	1,821	10,660
2006년	3,397	566	162	404	576	2,255	14,189
2007년 상반기	327	111	16	95	16	200	2,587

주민소득사업은 2005년도에 72억원, 2006년도에 1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107억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육성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벌기령이 지난 임목을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도부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등 백두대간의 생태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민소득사업비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금 액	29,382	7,200	11,485	10,697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1)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임도는 임업의 생산비용 절감 및 기계화를 위한 산림경영기반시설이다. 아울러 산촌의 단기소득과 산촌마을을 연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탐방로·산악레포츠·산책로 등 국민의 보건·휴양목적으로 그 효용이 인정되는 등 임도의 다목적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 내 입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말까지 총 사업비 877,413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총 시 설거리 16,048km, 임도밀도 2.50m/ha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2.50m/ha의 임도밀도는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2m/ha, 독일 44m/ha에 비교 하면 아직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 부족한 임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임도밀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품질” 유지보다는 “물량” 확대에 치중 하였으며, 또한 낮은 시공단비에 따른 안정구조물이 부족한 결과 장마철 집중호 우시 일부 임도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 났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산림상태, 토양특성 등 현지 산림여건에 따라 피해방 지경관유지 등 가능한 공종을 반영하여 설계·시공토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구조개량사업 5개년계획 (2002~2006)을 세워 기존 낮은 단비로 시공되어 안전성과 경관성에 문제가 있 는 임도에 대하여 대대적인 구조개량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2006년말까지 7,339km 의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했으며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간선임도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산림법령을 제·개정하여 “임도 노선 선정기준” 및 “임도의 타당성 평가제도”, “시공감리”를 제도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설치를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

(2) 임업기계화 촉진

(가) 임업기계화 여건과 추진 결과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와 임업생산성 향상, 벌채작업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가 고가이고 지리적 여건, 자원분포 상황, 임도 미비,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임업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력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산림자원의 양적·질적 증가로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임업기계화는 중요한 산림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운영자(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임업기계 보유실태를 보면, 지방산림청이 4,317대(16%), 지방자치단체가 8,242대(31%), 산림조합이 13,669대(53%)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2,125억원을 투입하여 154,80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에 기계장비를 보급하고,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수리할 수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를 2006년까지 7개소(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순천시 산림조합, 평창군 산림조합, 청주·청원 경남산청 산림조합)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산청 산림조합에 설치하였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지방산림청에는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5개소(12,370ha)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민유림 임업기계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청 별로 고성능 임목생산 대형장비를 보유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임업기자재 구입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종을 2001년도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임업용 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업용 임업기계장비 10종에 대한 면세 석유류 2003년도 1,256kl, 2004년도 3,012kl, 2005년도 2,918kl 2006년도 3,210kl 공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4분기까지 2319.3kl (휘발유 2053.4kl, 경유 265.7kl, 윤활유 0.2kl)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나) 임업기계화 향후 계획

앞으로 임업기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수요가 많고 실용성이 높은 임업기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트랙터 윈치, 굴삭기 윈치 등 기존의 트랙터나 굴삭기 등에 부착용으로 장비를 개발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기계톱·예불기 등 수요가 많고 저렴한 장비는 자체 개발 또는 기존 보급장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적용이 가능한 타워야더 등 외국의 고성능 임업기계를 선별하여 시범사업용으로 도입한 후 적용시험을 거쳐 실용성 높은 기종은 벤치마킹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에서 산림작업을 담당하는 임업기능인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에 기계장비 교육을 강화하고 강릉, 양산, 진안 등 3개 훈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림 경영사업을 활성화하여 현장실습 교육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임업기능인영림단과 기계화영림단의 기준을 강화하여 여건이 갖추어진 관리소별로 기계화영림단을 육성하여 산림사업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토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

계장비를 조작할 운영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임업기계화를 앞당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형 임업기계 개발 현황 〉

계	기 계 명
2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연구원(9종) : 밤수집기, 밤박피기, 원목자동천공기, 표고재배기2종, 자동수간주사기, 다목적집재차, 농용운반차리모콘원치, 동력가지치기 ○ 민 간(7종) : 산불진화차, 농림방제차, 동력원치, 크레인상, 하차기,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그래플쏘 ○ 공무원(5종) : 굴삭기소형원치, 세레스원치, 가위형벌목조재기, 굴삭기를 이용한 버켓교체형 집재기, 북부집재기, ○ 임업기계훈련원(2종) : HAM200, 목재칩보일러 ○ 산·학·연(3종) : 굴삭기를 이용한 타워·원목 집재기, 원목운반용 미니포워드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가) 임업기능인 양성 현황 및 실적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약 53%가 Ⅱ~Ⅲ 영급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Ⅰ영급까지 포함하면 약 62% 정도가 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면적에 대해 숲가꾸기 작업을 해 주어야 할 실정에 놓여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임금의 상승과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 및 낙후된 산촌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통한 산촌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1984년부터 국유림에서는 기능인영림단을, 1990년에는 산림조합에서 민유림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다.

기능인영림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10,000명을 양성할 목표로 추진하여

2006년까지 524개단 6,052명을 조직(국유림 138단 1,767명, 민유림 386단 4,285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 진입한 산림사업법인 중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는 208단, 1,248명의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산림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사업과 임업경영을 둘러싼 임업노동력 수요와 양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계획을 현실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임업기능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1997년에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능인영림단 육성과 장비지원, 취업촉진방안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2000년에 동 법을 개정하여 기능인영림단의 자격기준, 교육기간, 훈련기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인영림단 육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 임업기능인 영림단 양성 현황 〉

구 분	목 표	2006까지	연 차 별 양 성 계 획		
			계	2007	2008 ~ 2009
계	10,000명 (850단)	6,052명 (524단)	1,152명 (96단)	384명 (32단)	1,868명 (64)
국 유 릫 영 릫 단	2,743명 (232단)	1,767명 (138단)	72명 (4단)	24명 (2단)	48명 (4단)
민 유 릫 영 릫 단	7,257명 (618단)	4,285명 (386단)	1,080명 (190단)	360명 (30단)	720명 (60단)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직업인으로서 장기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작업물량을 연중 균일하게 배분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 등 직업으로서 정착을 위한 제도 보강과 후생복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임업기능인들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3주 이하의 단기 기능인력 양성에 치중함에 따라 현장의 작업을 감독·관리하고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장 임업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3개월 교육과정인 산림경영관리자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787명을 양성하였다.

〈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 현황 〉

구 분	목 표 (1998 ~ 2007)	2006까지 실 적	연 차 별 양 성 계 획		
			계	2007	2008
산림경영관리자 과정	940명	886명	200명	100명	100명

자료 : 산림청 자원정책본부

(나) 향후계획

앞으로의 기능인 양성은 산촌주민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산림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업기능인 중장기양성계획에 따라 영림단을 연차별로 조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신규로 32개단 384명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조직된 영림단의 조기정착과 기존조직된 영림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비지원비로 41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득의 불안정과 안정적인 고용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등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산림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능인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임업기계의 운전조작 기술 및 점검·정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임업기능인의 기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임업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종목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산림작업 기술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여 임업기능인의 전문 직업의식

을 고취하며, 당해 경진대회에서 임업기능왕으로 선발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임업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업기능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신기술 보급 등으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임금을 체계화하고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산촌에 정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임업의 장기성(40~60년)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산림에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산림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임산물 총생산액 3조 1,568억원 중 단기임산물 생산액이 1조 9,849억원으로서 임산물 총생산액의 63%에 달하는 등 단기소득원개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1	2003	2004	2005	2006
단기임산물 생산액	10,471	15,467	17,081	18,328	19,267	19,849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및 고소득 품목인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한·미 FTA 및 중국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실류의 경쟁력 강화 및 수실류의 재배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실류 작엽로 지원, 노령목 갱신, 밤나무대체작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한 시장개방을 대비한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밤나무 토양개량, 조

경수분재토양개량, 산양삼이력제지원, 친환경 밤생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밤, 표고, 산채류 등 60개의 지역특화품목 단지를 주산단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산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규모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산단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밤	대추	호도	잣	표고	송이	머루	산채	장뇌	수액
주산단지	60	7	4	1	1	22	10	3	10	1	1

한편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지 21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매년 30개소에 대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년까지		2006		2007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산림복합경영	218	12,026	158	8,756	30	1,635	30	1,635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 산채류,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에는 12개 단지에 대하여 산약초 등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소득 전략품목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최근 청정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하여 임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후 포장단계 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및 임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대추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임산물표준재배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GAP인증 대상품목〉

구 분	품 목
계	15개
수 실 류(6)	대추, 감, 밤, 잣, 참다래, 호도
버 섯 류(1)	표고버섯
산나물류(1)	도라지
약 초 류(3)	시호, 작약, 천마
약 용 류(4)	구기자, 산수유, 오갈피, 오미자

아울러 장뇌 등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을 산양삼으로 일원화 하고 청정 산양삼의 생산·유통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청정 먹거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신뢰확보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

국내 생산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임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생산 이력제 도입, 친환경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물 유도를 위한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및 생산자별 고유 브랜드화 추진 등으로 우리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5)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가) 국산재 이용촉진

우리나라 산림은 가꾸어 주어야 할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재자급률은 2006년말 현재 9.2% 수준으로 국내 목재 소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림내 임목축적은 2006년말 현재 526백만 m^3 로서 ha당 평균축적이 82.3 m^3 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 3 m^3 이 증가하는 등 매년 임목축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는 주로 간벌 소경재로서 보드류용, 펄프·칩용, 표고자목용 등 대부분 저급용도로 이용되며, 낙엽송 원목 일부가 건축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도·기계화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품질 및 가격면에서 수입재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선 국산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산업용재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목재업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산재 우선구매 제도를 2002년도에 도입하였고, 국

산재로 만든 책·결상을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연휴양림 등 시설 공사나 내장제품에 간벌재 등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1993년도부터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목재이용가공시설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국산재만을 사용하는 목재유통센터 여주 및 동해사업소를 1997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설치하여 국산재 이용 및 유통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

목재 자급률 향상과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목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목재생산비용을 절감해야 하며, 품질과 가격면에서 수입재보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i) 2006년도 이행실적

국내 목재업계에 보드용, 펄프·칩용, 토탄용으로 1,560천m³의 원목을 공급하는 등 산업용재 공급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재 2,444천m³을 공급하여 목재자급률을 2005년 8.8%에서 9.2%로 향상시켰다. 또한, 국산재 및 숲가꾸기 산물이용 촉진을 위해 국산재이용 가공센터 2개소(강원, 전남)를 신규로 시설하였으며, 국산재로 만든 책·결상을 196개 초등학교에 7,729조를 보급하였다.

또한 벌목업의 산재보험요율을 대폭 인하(42/1,000)하여 벌채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국산재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에 국산재 원료 12천m³의 구입비 및 목재분쇄기의 5종의 시설보완을 지원하였다.

< 2006년 목재수급 실적 >

구 분	목재수급 실적
용도별	제재용 24%, 펄프·칩용 41%, 합판·보드용 23%, 기타 12%
종류별	국내재 9.2%(2,444천m ³), 수입재 90.8%(24,179천m ³)

(ii) 2007년 추진계획

산업용재 공급계획에 의거 2007년에는 합판용, 보드용, 칩용, 토목용으로 1,605천m³을 원목을 목재업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사유림 벌채 여건 개선 및 목재생산 촉진을 위하여 간이 벌채운재로 시설비를 2008년부터 신규 지원코자 추진하고 있다.

수입재로 사용중인 균용탄약상자의 재질을 국산낙엽송 합판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국방규격을 개정('07.6.27)하였으며, 저급용으로 쓰이던 리기다소나무의 토목용재 활용기술을 개발코자 2007년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한 토목용재(옹벽 등)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로 산물 수집단을 운영하여 국산재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국산목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개발 하고, 다양한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007년 목재수급 계획 >

구 분	목재수급 계획
용도별	제재용 23%, 펄프·칩용 42%, 합판·보드용 23%, 기타 12%
종류별	국내재 9.8%(2,677천m ³), 수입재 90.2%(24,523천m ³)

(나) 폐목재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최근 유가상승,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국내실정은 목재자급율이 절대 부족하여 91%를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폐목재로 재생산이 가능한 보드류 산업을 활성화 하여 부족한 목재자급율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폐목재재활용 촉진 기반조성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폐목재는 대부분 분리선별 후 소각 또는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관련법령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국내 보드류 업계 등에서 폐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1) 2006년도 이행실적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폐목재 구입 및 보드류 산업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폐목질 자원의 재활용 기술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03 ~ '06)을 완료 한 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2) 2007년도 추진계획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한 폐목재구입 및 보드류 시설 현대화 자금을 4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폐목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실무작업반 구성, 폐목재 재활용 심포지엄 개최, 폐목재 유통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폐목재 관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병행 실시하는 등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반조성을 금년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1995년 농산어촌현대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산촌개발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3개 산촌마을에는 사전설계비를 지원하였다. 지암리의 경우 1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촌개발비(50억원), 연관사업비(31억) 등 총 81억원을 투자하였고, 충북 영동, 전북 장수, 경남 거창에 대해서는 2년 사업으로 추진(설계 1년, 조성 1년)하였다.

지암리 산촌마을 개발을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 마을이 설계되어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

었고,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6년까지 총 1,985억원을 투자(지방비, 융자포함)하여 138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2007년 현재 66개 마을에 대해 개발 중에 있으며 2008~2017년까지 450개 마을에 총 6,87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촌개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촌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 보급과 산촌마을의 성공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연찬회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설계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산촌을 자연생태적으로 쾌적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본 사업의 정책방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촌종합개발에서 산촌생태마을조성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세부사업별 배준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복합산림경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산림경영 마인드와 지역개발 역량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였고, 사업적지선정을 위해 2008년 사전설계 대상지 36개소에 대한 중앙심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산촌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변화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본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정보화마을사업 등 타부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고, 전국 산촌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기반 확충 등 산림의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이러

한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 시켜줌으로서 지속종합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산림청은 산촌개발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방식이 사업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교육강화를 위한 산촌생태마을리더쉽과정을 신설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주민사업이 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매뉴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기존의 사업체계를 크게 예비선정부문, 사업조성부문, 사후관리부문으로 나누어 수정·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각 단계별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선정제도이다. 2006년 도입한 예비선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인식하여 예비선정제도를 예비활동과 예비선정 두 부분으로 나누어 2008년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예비선정제도의 개편은 마을주민의 사업추진능력을 강화시켜 마을주민주도의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 사업조성부분이다. 사업부분의 핵심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분리하여 사업비를 현실화함으로서 능력 있는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데 있다. 또한, 조성사업기간동안 S/W사업분야의 선 활성화, 운영매니저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시설위주의 조성에서 벗어나 좀 더 효율적인 시설활용이 가능해지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사업시스템으로의 개편과 선 S/W사업시행 후 H/W사업의 실행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부분이다.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이 본 제도에 들어서기까지 사업완료 후 3~5년간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산촌의 여건상 각종 사업시설의 유

지·관리·운영 등을 산촌주민 자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 투자된 시설물의 정상 운영을 통한 주민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및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예산 신규 반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숲에On 정보시스템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주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촌생태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촌생태마을 통합 C.I 디자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시행, 보급할 계획이다.

산촌은 넉넉한 인심, 울창한 산림과 맑은 물, 조용함과 평화로움 등 다양한 유무형의 녹색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처에 대한 동경과 산촌의 생활문화와 자연생태를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산촌 지역에서는 지역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녹색관광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 잠재력이 큰 산촌지역을 더욱 활성화하여 산림경영과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 산림청은 도시와 산촌의 교류 촉진과 산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주민, 국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현장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야외휴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휴양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책을 전개하였다. 산림경관과 임상이 좋은 산림지역

에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도시지역의 산림에는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에 대한 산림교육시설로 숲속수련장 조성을 추진하였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1988년 유명산, 대관령, 신불산폭포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200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07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1990년도에 「산림법」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8월 4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문화·휴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자연휴양림은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가 1995년 208만 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578만명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2001년도 한국갤럽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치산녹화사업 이후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이며, 21세기 산림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1997년 52%에서 2001년에는 63%로 증가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재 방문 의사(88%), 이용만족도(6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운영 현황(2006년말)〉

(단위 : 개소)

구 분	지 정 현 황		운 영 현 황	
	개소 수	면적(ha)	개소 수	면적(ha)
계	222	182,065	107	122,402
국유 자연휴양림	83	154,595	34	104,974
공유 자연휴양림	87	20,348	55	15,541
사유 자연휴양림	52	7,122	18	1,887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49,804	25,724	4,076	4,345	4,808	5,076	5,775
국유 자연휴양림	11,578	5,386	886	1,004	1,117	1,371	1,814
공유 자연휴양림	33,072	17,875	2,744	2,827	3,211	3,094	3,321
개인 자연휴양림	5,154	2,463	446	514	480	611	640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산림욕장의 경우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림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 말까지 총 108개소가 조성 운영 중이며 2007년도에는 전국 14개소에서 조성 중에 있다.

숲속수련장은 대부분 국유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2006년 말까지 총 20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단체숙소와 실내강의실, 야외강의장 등이다.

2006년 말까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과 2007년도 조성계획, 2008년까지 장기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6년까지 운영	2007년 운영계획	2008이후
계	333	233	20	80
자연휴양림	140	104	6	30
산 립 욕 장	150	109	14	27
숲속수련장	43	20	-	23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주 40시간 근무제와 여가문화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산림청은 ‘산림휴양문화진흥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악레포츠, 산악승마휴양림 등 다양한 전문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등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등산로 조성·보전·관리, 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 및 전문화, 도시근교의 산림욕장 확대, 산림휴양시설 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 산림휴식년제 도입 및 산림휴양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녹색수업과 숲해설 확대, 산림휴양문화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강화 등이다.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른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격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유치하고 있는 산림관련 문화 행사는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 교육·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과거 운영되었던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대중과 획일적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대상이 가족, 학생, 소외계층, 장애인 등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는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프로그램,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악스키·오리엔티어링 등의 산악레포츠 대회,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학교 운영, 숲속음악회, 숲과 문학의 만남 행사, 자연과 산림 관련 전시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의 결속과 화합의 장인 ‘산의 날’ 행사는 제6회를 이어오면서 산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KBS 열린음악회, 숲올림픽아드 등을 통해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는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후원하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질의 산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휴양 시스템(www.foreston.go.kr)를 산림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하여 전면적으로 재편하였다. 산림휴양 시스템 ‘숲에On’은 국민에게 맞춤형 산림휴양 정보와 백두대간·100대명산 등의 산악정보, 산촌관광 및 산악레포츠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산림생태학습방」, 노년층을 위한 실버 「숲에On」 등을 통해 눈높이에 산림정보 그리고 각 지역 및 테마별 각종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산림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숲에On’은 국내 뿐 아니라 기 구축된 영문사이트와 PDA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림교육·문화 뿐 아니라 산림휴양 전반에 관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산림청은 2007년까지 연평균 200천명의 일반인과 청소년의 산림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통해 푸른숲 선도원, 숲해설가 육성 등 산림교육·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산림은 단순한 휴양공간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교육·문화의 원년이 될 2006년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위한 숲교육 전문기관인 녹색교육센터를 운영, 숲해설 및 등산안내인에 대한 인증제 실행으로 산림교육·문화 전문가의 자질 향상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을 통하여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산림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등산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2006)」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5명중 4명이 연간

1회 이상 등산을 하고 있으며, 연인원 462백만명이 등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1회 이상 등산한 사람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 등산의 순위는 최근 10년간 1~2위를 유지하고 있어 등산에 대한 국민적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등산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등산로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무관심과 예산부족 등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등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말이나 봄·가을철 등 등산 성수기를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되면서 많은 등산로가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1,735개의 산에 4,290개 노선, 17,598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30%인 4,894km의 등산로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등산로 바닥의 침식이나 바위의 노출 등으로 등산로가 훼손되면 이용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주변 산림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등산객들은 통행이 불편할 경우 등산로 주변으로 통행하여 등산로가 넓어지거나 샛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산림식생의 파괴와 산림내 서식하는 많은 야생동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백두대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등산로를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국유림 지역의 등산로 154km를 정비하였다. 2006년부터는 민유림 등산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92km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고 훼손도 심한 도시 근교 생활권 등산로의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7년부터는 도시생활권 등산로도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총 141km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산로의 체계를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등산로 정비 등 관리 방안 등 마련하고자 “등산로체계구분 및 유형별 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별로 디자인, 표기방법, 표기정보들이 상이한 등산로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등산지원팀의 신설을 계기로 등산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등산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등산지원기본계획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등산부문 계획으로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고 있다.

등산지원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먼저 산림청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요구내용을 파악하고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산기본계획 수립 T/F를 구성·운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및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친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7년 3월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등산지원기본계획의 수립은 급증하는 등산객들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등산로와 주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는 한편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등산·산악레포츠 시설의 양적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산악레포츠 환경의 조성을 위해 등산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건전하고 올바른 등산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사)한국산악회를 통해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청소년, 일반, 공직자 등 5개 과정, 33회에 걸쳐 1,190명을 대상으로 등산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름방학기간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을 실시하여 212명의 학생이 산림생태탐방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등산지식과 백두대간 및 우리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2007년부터는 등산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을 5개 과정, 1,200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도 청옥·두타산권 1개 구간을 추가하여 백두대간 전역 8개 구간에서 한국산악회 전문등산가이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등 지도강사의 인솔하에 전국에서 24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등산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등산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등산문화 및 등산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2006년부터는 등산안내인을 배치하여 등산객 안전관리 및 안내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여름철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100대 명산 등 주요 산을 중심으로 30명의 등산안내인을 배치하여 국민들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등산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등산로 정비사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숲길조사원' 55명을 선발하여 전국 국유림관리소에 배치하여 전국 67개 주요 산에 대한 등산로 현황과 훼손실태를 조사하였다. 2007년에는 사업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숲길조사원의 수도 410명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숲길조사원은 전국 등산로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산의 각종 등산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특히, GPS를 이용하여 등산로 전체노선을 현지 측량하고 중요한 지점의 위치데이터와 사진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다양한 등산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등산관련 컨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숲길조사 결과물을 이용하여 300개 산에 대한 등산지도를 제작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도입

현재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98km²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km²의 묘지가 매년 새로 발생하고 있다. 매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묘제도는 산림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묘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에서 화장을 새로운 장묘방식으로 권장하여 화장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묘지의 새로운 대안이었던 납골당이 대형화·고급화에 따른 폐해와 사치성으로 인해 최근 기존의 묘지 이상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수용하고 자연친화적인 장묘제도의 정책적인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시작하고 있는 장사문화의 한 형태로 산림경영을 하면서 기존 장묘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목장은 2006년 KBS여론조사 결과 화장 희망자 72%중 62%가 수목장 이용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도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림담당 부서인 산림청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인 수목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림 관계법령도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인 수목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5월 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동 법률에는 산림내 조성된 자연장구역을 수목장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장립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수목장립의 설치·운영 권한을 관계전문기관·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반영키로 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사설수목장립의 종류별 면적 등 설치·운영사항과 수목장립 관리는 산림 관련부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 수목장립 조성시 산림관리 기술자 고용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관계 법령 정비 추진상황을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제4호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녹색자금으로 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05년 8월 4일 제정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개선하여 임업용 및 공익용 산지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07년 7월 13일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8년 5월 26일 까지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 등 새로운 장묘문화인 수목장림을 원활히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묘지 관련 재단법인에서 수목장림에 대한 조성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운영 경험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목장림을 성급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수목장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나타나 오히려 산림의 파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2008년까지 국유림내에 모델 수목장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일반 국민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친화적으로 수목장림이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올바른 수목장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시 수목장림 조성 계획 등 반영은 물론 GPS 등을 이용한 수목장림 관리 방안 및 DB체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목장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장묘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가)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i) 도시숲 현황

도시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다른 자연 요소들보다 크고 다양하다. 도시숲은

자연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해주어 교육적 효과는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도시에서 특히 부각될 수 있는 숲의 기능은 도시내 열섬현상 완화, 미기후 조절, 각종 공해와 오염물질 저감효과, 도시 녹색 환경 조성으로 인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장소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이 생활권내에서 접하며 다양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광역시인 경우는 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평균 6㎡에 불과하여 런던(27㎡/인), 뉴욕(23㎡/인), 파리(13㎡/인) 등 선진국의 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민의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도시주변 산림을 찾는 방문객의 수는 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내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신규로 가로수, 도시숲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존재하며 특히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도심내 숲을 조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토지매입비가 필요치 않은 국·공유지나 학교, 가로변 등을 중심으로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ii) 도시숲의 기능 및 구성요소

도시숲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체험·레크레이션·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되는 공원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경관림, 바람·소음·대기오염 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방풍·방음림,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림으로 구분한다.

〈 도시숲 현황(2005년말) 〉

(단위 : ha)

시·도	지역면적	도시지역 면적	도시림면적	생활권도시 림면적	1인당도시림 면적(m ² /인)	1인당생활권 도시림면적 (m ² /인)
합계	9,964,615	5,268,354	2,737,958	29,400	611.02	6.56
특광역시	534,674	422,773	175,210	11,948	79.35	5.41
서울	60,540	60,540	14,272	4,968	14.53	5.06
부산	76,443	63,655	26,115	2,513	74.48	7.17
대구	88,446	56,560	21,622	1,382	89.19	5.70
인천	99,412	82,979	30,270	890	122.00	3.59
광주	50,141	50,141	19,479	591	137.39	4.17
대전	53,978	53,978	28,110	748	194.83	5.18
울산	105,714	54,920	35,342	857	357.71	8.67
도	9,429,940	4,845,581	2,562,747	17,453	1,127.54	7.68
경기	1,013,085	756,983	336,255	6,522	328.04	6.36
강원	1,661,346	744,307	516,459	1,252	4,077.07	9.88
충북	743,144	310,407	173,556	442	1,471.88	3.75
충남	860,052	515,411	211,732	623	1,372.94	4.04
전북	805,462	361,144	139,677	1,910	883.03	12.08
전남	1,207,346	383,425	205,777	1,109	1,533.02	8.26
경북	1,902,596	1,070,680	640,576	1,871	2,821.55	8.24
경남	1,052,082	515,397	261,494	2,999	946.04	10.85
제주	184,827	187,827	77,222	725	1,451.84	13.62

그러나, 그동안 도시지역의 숲은 생육환경악화, 대기오염, 무분별한 사용·관리 등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대다수 도시숲은 콘크리트 건물들 속에서 공원과 도시숲이 고립·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하여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숲의 녹색네트워크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이처럼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숲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시내부와 도시외곽의 산림을 선적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를 통해 연결하고, 도심지 내부에는 도시숲, 산림공원, 학교숲 등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과 유기적 상호연결성을 가지게 하여 순환형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ii) 도시숲의 기능 및 구성요소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국유지 중 방치되어 있거나 임분 상태가 불량한 지역 혹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숲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도시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독립적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하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자연형태에 가까운 숲으로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거점 녹지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도시내·외곽에 방치된 국유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산림공원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며 산림공원은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테마형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국유지 도시숲은 2003년 12개소, 2004년 6개소, 2005년 6개소, 2006년 3개소를 조성하였고 2007년도에는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공유지 도시숲은 매년 사업량이 대폭 증가하여 2005년 70개소, 2006년 9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지방자체단체와 국민의 관심도가 커져 지난해보다 사업규모가 2배 가 많은 177개소(404억원)를 조성 중에 있다. 도시민의 녹색공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숲 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공유지 도시숲(산림공원) 조성 현황(2007)〉

○ 국유지

지방산림청	소 재 지	면적(ha)	사업비(천원)
계		8.6	630,000
북부(수원)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47	3.0	210,000
중부(부여)	홍성군 홍성면 남장리 111-9	0.6	270,000
서부(함양)	진주시 망경동 산29-3	5.0	150,000

○ 공유지

시도별	개 소	면 적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지 방 비
계	177	218.5	67,455,000	33,728,000	33,727,000
서 울	20	13.1	6,454,000	3,227,000	3,227,000
대 구	8	7.0	3,600,000	1,800,000	1,800,000

시 도 별	개 소	면 적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지 방 비
인 천	1	0.3	180,000	90,000	90,000
광 주	3	5.7	8,200,000	4,100,000	4,100,000
울 산	14	6.9	7,646,000	3,823,000	3,823,000
경 기	7	12.3	2,598,000	1,299,000	1,299,000
강 원	22	13.0	2,095,000	1,048,000	1,047,000
충 북	16	25.9	6,028,000	3,014,000	3,014,000
충 남	5	33.0	3,900,000	1,950,000	1,950,000
전 북	29	31.1	11,278,000	5,639,000	5,639,000
전 남	23	23.0	4,652,000	2,326,000	2,326,000
경 북	21	41.8	9,768,000	4,884,000	4,884,000
제 주	8	5.4	1,056,000	528,000	528,000

〈국유지 도시숲 조성 5개년 계획〉

(단위 : ha, 백만원)

연 도 별	개 소	사 업 량	사 업 비
계	45개소	322.7	9,450
2007	5개소	29.5	1,050
2008	10개소	30.3	2,100
2009	10개소	60.3	2,100
2010	10개소	116.5	2,100
2011	10개소	86.1	2,100

(iv)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8월 발표하였다.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

색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표로 하는 「도시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현재 6.56㎡인 1인당 생활권도시림을 2017년까지 10㎡로 하여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을 실현함을 최종 비전으로 하고 있다.

〈5대 전략 및 20대 중점과제〉

전 략	과 제
추진체계의 정비	·도시림 관련 계획체계 정비 ·전국 도시림 실태조사 실시 ·도시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기반의 구축	·도시림 지속성 지수 개발 ·녹색 총량제 도입 ·도시계획과 도시림 관리의 연계강화
녹색의 양과 질 향상	·녹색 네트워크 추진 ·가로수 조성·관리 ·선형 공간의 녹지화 ·도시림 조성확대 ·학교숲 조성확대 ·도시림 건강성 증진 및 산림공원 조성 ·마을숲 등 생활림의 조성·정비 ·산림경관의 보존과 조성·정비 ·도시림 시범사업 추진 ·도시림의 조성·관리 기술개발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법·제도 개선	·관련법 제·개정 추진 ·도시림 예산체계 개편

(나) 가로수 조성·관리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도시내 녹색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형녹지이다. 가로수는 경관개선, 고립된 도시내 숲을 연결하여 동물이동통로 및 생물서식 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심지내 높은 지가로 인한 녹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로수 관리업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의 부속물로써 관할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이관 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02.1.2. 산림청 예규499호)’에 의거 관리하였다. 그러나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적 충돌이나 혼란으로 잦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여 좀 더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06년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제정·고시(2006.8.8, 산림청 고시 제2006-58)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5년 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도시의 선형녹지축으로써의 녹지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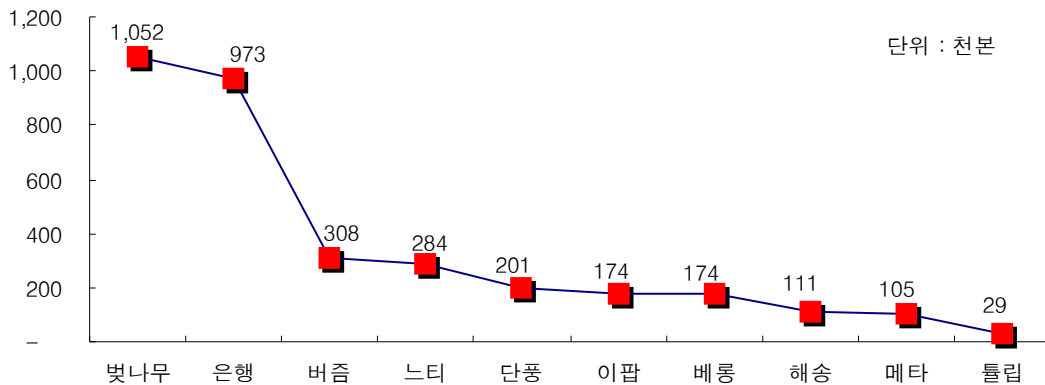
〈 최근 4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연장거리(km)	4,154	1,064	885	1,203	1,002
본 수(천본)	751	142	166	190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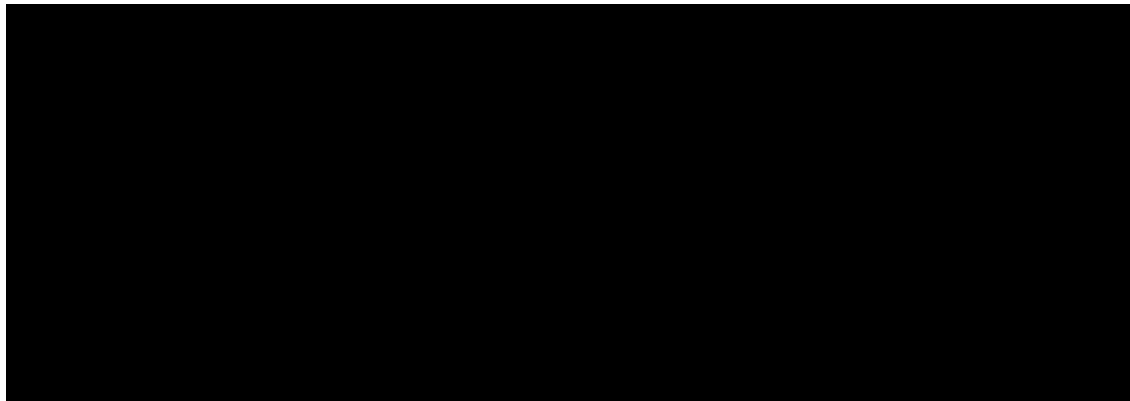
전국의 가로수는 2006년말 현재 4,317천본(29,880km)으로서 2005년 대비 253천본(1,002km)이 증가하였으며, 수종별로는 벚나무 24.4%, 은행나무 22.5%, 버즘나무 7.1%, 느티나무 6.6% 등이며, 경기도가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으

며 경기, 경남, 전남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조성은 2003년 이후 매년 약 1,000km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이팝나무와 배롱나무의 식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가로수 수종별 현황(2006년말 현재)〉



〈가로수 시도별 현황(2006년말 현재)〉



산림청에서는 녹색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를 확대 조성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정보화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병해충방제 등 소극적인 관리에 치중하였던 가로수 관리를 토양개량, 비료주기, 양분주사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8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가로수 정보를 표준화, 통합화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가로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가로수 조성 사진〉



(다) 학교숲 조성

(1) 학교숲의 역할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 등 교육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초·중·고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숲은 도시내 녹지조성 공간의 부족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녹지공간 조성의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 삭막한 운동장과 회색 콘크리트로 둘러진 환경을 푸른 숲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내 녹색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학교숲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쉽게 접하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숲 조성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단순 조경공사적 개념을 벗어나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이 설계단계부터 숲의 운영 관리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며 특히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십운동으로서 선진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학교숲 조성 현황 〉

연도별	시범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496	269	117	95	15
1999	10	6	3	1	-
2000	20	9	4	7	-
2001	24	11	7	4	2
2002	15	12	2	-	1
2003	127	66	31	27	3
2004	105	52	25	26	2
2005	79	45	18	14	2
2006	116	68	27	16	5

(2) 학교숲 조성절차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하여 신청접수하며, ‘학교숲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범학교는 연 1천만원씩 3년간 총 3천여만원의 학교숲 조성비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의 학교숲 조성·관리 기술을 지원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학교숲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숲 지원예산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조성함으로써 주변 학교로 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시행 초기부터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 학교숲 조성 전경 〉



(3) 시민참여

산림청에서는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학교숲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 발견과 성과 공유를 통해 학교숲 운동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 및 학교숲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생명의 숲’과 ‘유한 김벌리’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매년 학교숲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학교숲 조성과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숲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차기 국제 무역 및 통상질서를 결정하는 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실질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여 회원국각국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목표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농업협상(단기임산물)은 UR협상 타결 당시 UR 이행종료 후 자동으로 재협상

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비농산물(목재류, 석재류 등) DDA선언에 의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DDA 협상은 2004년 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에 2005년에는 2004년 8월에 합의한 협상 기본골격/framework)에 의거 세부원칙(modality)을 정하기 위한 분야별 쟁점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타결을 시도했으나 농업협상은 농산물 수출·수입국간의 대립, 비농산물협상은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 인도·브라질 등 개도국(ABI)간의 입장차에 의해 합의에 실패하고 2006년말 협상시한을 넘겼다.

WTO 주요국은 2007.1월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7월에서는 농업 및 비농산물(NAMA) 협상의장 초안이 회람되어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산물 협상은 HS 10단위로 354개 품목이며, 농업협상 대상품목은 5류~24류에 해당하는 단기소득임산물 108개 품목, 비농산물협상(NAMA) 대상품목은 25류~94류에 해당하는 목재류·석재류 246개 품목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다.

WTO/DDA 협상에서 농업협상(단기소득임산물)에서는 관세감축 구간 폭, 관세상한 설정, 민감품목 인정, 국내보조 및 수출 보조분야 등이, 비농산물협상(목재·석재류)에서는 관세감축공식, 분야별 무세화 논의(임산물 무세화), 미양허 품목(합판·섬유판·PB 등) 처리문제, 비관세장벽(NTBs) 해소 문제 등이 주요 협상쟁점이다.

임산물 통상협상에서 우리 청은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상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임업인, 학계, 관련단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기초로 대내적인 관계부처의 협조와 일본·대만 등 공조국가 등과 긴밀히 협력으로 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2) 해외조림 확대

장기·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1993년부터 해외조림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국에 9개 업체가 진출하여 128천ha를 조림하였다.

해외조림 투자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에게 조림 및 육림 사업비를 2006년까지 548억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2006년도에는 신규 해외조림 확대를 위해 사전조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조림한 지역에서 아카시아, 유칼리투스 등 속성수의 생산이 2000년부터 시작되어 국내로 도입되고 있으며 2006년까지 펄프용 칩 270천BDT이 국내로 도입되었다.

2006년 8월 1일 「한·인니 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인도네시아에 조림지 50만ha 확보가 가능해졌고 2006년도부터 해외조림조사비 지원과 융자금리 인하(3%→1.5%) 등으로 해외조림 투자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투자에 산림조합중앙회, 무림페이퍼 등 국내 1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 조림지 선정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조림사업을 착수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권 및 바이오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에 국내 기업의 사업 문의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인 바이오에너지 자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에 수립하여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적으로 산림분야에서의 주된 의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이다. SFM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각국의 특수성에 맞게 능력배양, 정책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유엔산림포럼(UN Forum on Forests, UNFF)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산하 정부간 산림패널(IPF)과 정부간 산림포럼(IFF)에서 논의된 국제산림협약(IAF) 및 SFM 이행을 위한 IPF/IFF의 270여개 실행권고안의 이행 등을 종합하여 계속 논의하기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는 유엔산림포럼(UNFF)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2.13 ~ 24 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산림포럼(UN Forum of Forests, UNFF)에서는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간 UNFF는 무분별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심각성 및 산림이 주는 사회경제적 혜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통한 보호림/경영림 증대 및 산림분야 발전을 통한 산림에 의존하는 빈곤계층 감소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새천년 개발 목표-MDGs 등) 달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UN 체계 내에서의 산림분야를 총괄하는 공식기구 설립 논의를 위한 국제무대의 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여 왔다. 향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국제법적 규정(자발적 이행지침)에 맞추어 관련 국내법 정비, 정책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한 국내 SFM 이행노력 및 동남아시아에 우리의 우수산림복구 기술 전수 등을 통한 대외 SFM 이행노력을 통한 위상강화 필요성이 있다.

○ 2011년 ‘세계 산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orests)’ 지정

유엔산림포럼은 제7차 전체회의에서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orests)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세계 산림의 해’가 빈곤문제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UNFF 비구속적 산림협정(NLBI) 채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하려는 미국, EU 등과 느슨한 적용을 주장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간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비구속적 산림협정(Non-Legally Binding Instrument) 채택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등에 관해 비록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이행을 전제하고 있으나, 동 협정에 의한 자발적 국가보고서 제출과 2011년부터 다시 구속력있는 산림협정 논의의 재개가 예상된다. 따라서 SFM 적용 산림경영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SFM 기준과 지표를 적용하여 산림의 지구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국가정책과 목표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ITTA)

우리나라는 1985년 6월 25일에 가입했으며, 1995년 6월에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1994)을 비준하였다. 현재 세계 4위의 열대목재소비국으로 매년 약 23만\$ 규모의 의무분담금과 5만\$ 규모의 자발적 기여금을 부담하며 소비국 총 투표수 1000표 중 80표를 보유하고 있다. 첫 협정(ITTA-83)은 1983년 최초로 채택되어 1985년 4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두 번째 협정(ITTA-94)은 1994년 채택되어 1997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제42차 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가 2007년 5월 7일 - 12일 (6일간)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ITTA 1994의 후속협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Thematic Program의 운영방향과 방침에 관해 회기 간에 운영된 한 비공식 작업단(Inter-sessional Informal Working Group) 논의결과를 보고 받았다. 많은 회원국들은

Thematic Program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투명한 사업심사 및 평가절차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역할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한 재원에 대한 기여금 확보 다양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케냐 나이로비에서 2005년 10월 17일~28일 동안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COP-7)에서 특히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고, 특히 EU 국가들은 금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차기 사무국장 인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대표단은 직원과견 관련 합의의향서(LoI)를 체결하여 동 국제기구의 아시아지역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게 됨으로써 우리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선진산림기술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아프리카 및 개도국으로부터 양자면담 요청을 받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및 성과를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차기총회 유치의사를 표명하여 아프리카지역 및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마지막 날 스페인이 EU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2007년 9년 3일 ~ 14일 스페인에서 제8차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사막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산림청은 중국과 몽골에서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아울러 금년부터 시작된 몽골그린벨트 조립사업은 2016년까지 9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UNCCD가 참여하는 동북아산림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역내 황사와 사막화방지 방안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기후변화는 환경, 천연자원, 경제활동, 인간건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대기상의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을 통해 관찰되어 왔으며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189개 회원국이 가입한 당 협약(UNFCCC)은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고, 당사국총회는 연 1회 그리고 부속회의는 연 2회 개최가 일반적이다.

산림청에서는 지진해일, 지진, 태풍 등 일련의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동북아 사막화방지사업, 개도국 양묘사업 지원 등 산림분야에서 지구환경 보전에 많은 기여하여 왔다. 특히, 2005년 11월 28일 ~ 12월 9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준수 및 향후 기후변화 체계(Post-2012)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으며, 산림분야에 대하여는 개도국 산림전용(Deforestation)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향후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논의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국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산림악화 감축을 포함시키는 협상 전략을 추진 하되 같은 입장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4) 남북한 산림협력

그동안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지원은 평화의 숲, 동북아 산림포럼, 새천년생명운동 등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여 추진해 왔으며, 주로 묘목 제공,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제공 등 현물위주 지원이었다. 그리고 당국자간의 북한 산림복구 협력은 2004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를 합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 양측이 합의단계에 와 있으며, 2007년 5월~7월에는 북한의 공식 요청에 따라 평양 지역의 솔나방,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4월에 북한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연합한 「겨레의 숲」이 설립되어 민간단체의 북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겨레의 숲」에서 북한 산림복구사업을 규모있게 추진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북한 산림녹화와 병해충 방제사업에 남과 북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함에 따라 산림분야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사업을 한반도 국토관리차원에서 농림업 생산기반 복구, 산림환경 및 생태자원 복원, 상호 보완적인 남북 임업협력체계 건설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은 체계화, 규모화하고, 당국자간 협력사업도 기존 합의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북한 산림복구 조립사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6. 수산업

가. 연근해어업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 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고유가, 선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 시장개방에 따른 저가 수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99년 9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1999~2002년까지 총 1,308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영향이 없는 어선은 “일반감척사업”으로 1994~2005년까지 근해안 강망 등 2,642척을 감척하였고, 2006년에 연안어선 1,558척을 감척하였다.

앞으로 연안어선은 전체 어선의 10%인 6,300여척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감척하고, 근해어선은 전체 어선의 30%인 1,000여척 2007년부터 2010년까지 WTO/ FTA에 대비해 감척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UN해양법 발효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가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2006년까지 7,258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92천ha를 시설하였고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06년까지 871백만마리를 방류하였다. 또한,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 15개 국·도립 배양장에서 신품종 종묘생산기술 및 방류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배양장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을 위해 2005년 12월 수립한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따라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 등 4개 품종에 대해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06년에 안강망, 통발,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에는 403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5천ha를 시설하고, 국·도립 배양장에서 지역특산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정부도 약 140천만마리를 매입하여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 조기, 홍어 등 3개 품종에 대한 수산자원회복 권고안을 어업인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근해통발어업에 대해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의 남획 및 어업갈등을 조장하는 불법어업의 척결을 위해 2004년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2,467척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매입, 폐선조치 하였다. 2007년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신규 진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의 금지구역 침범 등 허가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3국간 수산자원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3국간 수산고위급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자원회복과)

(3) 친환경어선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2006년에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영세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소형 노후어선, VHF무선설비 및 기관대체 등에 22억원을 투입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7.75톤(2척)을 대체 건조하고 어선과 일반선박간 통신수단 구축을 위해 316대 설치와 연료과다 소모형 저효율 기관 5,864마력 대체 및 노후된 어선 16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기계에 35대를 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고로 지원하였다.

2007년도부터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배치된다는 국회('05예결위)지적이 있어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을 중단하고, 어선용기계공급사업과 VHF무선설비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어선기관대체 7천마력(9억원), 장비·설비개량 27척(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사기술과)

나. 해면양식어업

2006년에는 어류, 김 등 안정생산을 요하는 품목이나 재해상습지역에 대한 어장개발의 금지와 관리가 부실한 어장의 재개발 금지 조치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연안 내만의 양식장이 어장오염·노후화 및 빈번한 질병발생과 태풍, 적조, 이상조류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해수증가두리양식 시험어업을 3개소로 확대 실시하였다.

양식기반시설 확충분야에 2006년 14억원에 이어 2007년에 26억원을 투자하여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 및 질병예방백신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및 질병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양식장의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조성중인 양식단지조성

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이나, 최근의 양식업계의 경영악화에 따라 일부 용자사업 및 단지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산 활어 수입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특별영어자금 115억원, 중간종묘 매입방류 160톤(7억원) 등 총 12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종묘방류사업 확대를 위해 불교계(원로협의회)의 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양식어장정화 부문에 총 104억원을 투입, 부산 등 10개 시도의 양식어장 11천ha 청소, 경남 한산-거제해역, 진동만 등 특별관리어장 5천ha를 정화하였다.

양식재해예방을 위해 2006년 8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23일간 남해안 일부 지역에 걸쳐 발생한 유해성 적조방재를 위하여 민·관·군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최근 10년간 평균피해금액(40억원) 대비 최저(73백만원) 수준으로 적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해피해복구를 위한 총 267억원을 양식시설 및 생계비 지원 등에 투입하여 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2007년에는 양식장 개발,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공급, 배합사료직불제, 해면양식시설에 총 1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양식어장 구조재편 추진을 위해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어류, 김, 전복 등 9개품종의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금지하는 동시에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된 김·어류양식어장을 동일품종으로 재개발시 기존 면적의 5~20%를 축소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에 101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 101억원을 지원 하는 등 고효율 저오염 배합사료 개발 등을 통하여 생사료 공급관행을 배합사료 위주의 공급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양식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질병D/B구축, 이동병원 등 어병방역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다. 내수면양식어업

우리나라 내수면양식어업은 1980년대에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았으나, 1990년도 중반이후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상수원 관련 수면에서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현행 양식장 대부분이 재래식 양식방법인 지수식으로 시설대비 생산량이 낮고 수질환경에 대한 국가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내수면 양식시설의 확충으로 어업경영비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값싼 담수어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품종도 다양화됨에 따라 국내산 동종 어류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수면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원 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환경친화적 양식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까지 153개 양식장에 2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13개소에 총 3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뱀장어, 송어 등 주요 육상양식어종의 생산량 증가로 전반적인 양식어업 생산량이 회복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에는 사업비를 6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효율이 낮은 재래식 양식장을 효율이 높은 고밀도 순환여과식으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순 활어로 유통되는 것을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활어가격의 안정화를 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내수면어종 가공사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년간 송어훈제가공공장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통해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라.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조치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연안국 EEZ내 어획쿼타 감축,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양정책자금을 2007년에 2,280억원(영어자금 800, 원양어업경영자금 1,480)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요 수산자원을 보유한 페루, 브라질 등과도 새로운 어업협정 또는 수산협력약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연안국가를 대상으로 현지투자합작 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통한 새로운 어장개발을 추진하여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하여, 1998년~1999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6척, 2000년~2003년에는 콩치 봉수망 10척, 오징어채낚기어선은 2002년~2004년 기간중 24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노후원양어선의 신조대체 계획에 따라 수산발전기금 사업으로 2004년에 115억원을 투입하여 참치선망어선 1척(2천톤급)을 건조 완료('06. 2월)하였으며, 2006년 및 2007년에 걸쳐 사업비 149억원을 확보하여 노후 참치어선 1척의 신조대체(2천톤급)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293
2. 교육여건 개선 309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311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313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1) 2006년 이행실적

최근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 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소권역(3~5개 법정리)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권역당 3~5년간 총 7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내에서 권역의 크기, 가구수,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 유사정책사업 지원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 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 총 1,411억원(국고 1,155, 지방비 256)을 투입하여 56개 권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고, 20개 권역은 2007년도 사업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권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현장에서 자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마을개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사업참여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발전방안을 토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2) 2007년 향후 계획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계자간 능동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계획수립 시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 권역별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 등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에는 총 898억원(국고 731, 지방비 167)을 투자하여 56개 권역의 계속 시행과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40개 권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한 후 착공하고 2008년 사업착수를 위하여 40개 권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및 소도읍과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200개면을 개발할 계획이며, 우선 2008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개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5년에 착공하여 1단계(1~3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36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권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한준희)

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도시나 읍지역 등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마을기반정비(마을내·마을간 도로정비, 상·하수도 시설, 교량, 주차장 등)부문, 농촌경관(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 조성 등), 문화복지(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부문, 환경보전(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부문으로 크게 구분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206개 면지역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61개 오지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

개발면 53개면 및 무인/무면사무소면 10개면을 제외한 782개면과 광역시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추진기간 및 지원액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23,910억원을 투자하여 797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에 면당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1990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각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부에서 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2006년도 8월 관계장관의 업무이관에 합의함에 따라 2007년부터는 농림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361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계획을 수립, 총 9,204억원을 투자하여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및 교통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분야에 총 3,382건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1) 2006년 이행실적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2006년도에 300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 2,01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 641km, 상·하수도 122개소, 주차장 등 교통시설 16개소, 교량 33개소, 하천정비 90km, 마을회관 등 복지회관 71개소, 공원 및 휴게소 35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켰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통해 2006년도에 261개오지면 1,547억원을 투자하여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 222건,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교통 인프라 199건, 문화복지시설 65건 등 총 486건을 추진하였다.

(2) 2007년 추진계획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통해 2007년도에 300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 2,40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간 및 마을내 도로 720km, 상·하수도 119개소, 주차장 등 교통시설 31개소, 교량 68개소, 하천정비 460km, 마을회관 등 복지회관 78개소, 공원 및 휴게소 56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도에는 220개면에 161,983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245건, 생활환경 및 교통시설 199건, 문화 및 복지시설 분야 44건 총 488건을 선정하여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2007년도에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의 통합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등 두 사업간 상이한 지원기준을 통일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로 통합하고 통합추진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의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 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3) 어촌분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 기조에 따라 수산정책도 증산지향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어촌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어가수는 총인구대비 1990년 1.2%에서 2006년 0.4%로 줄어들었고 어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대비 1997년 74%수준에서 2006년 72.6%로 떨어지고

어촌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산기반시설위주로 지원되어오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촌의 정주생활환경개선시설과 어촌의 어업외 소득증대 제고를 위해 관광기반시설에도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촌의 다양한 관광 잠재자원 중 특성화가 가능한 개발유형을 설정하여 도시민과 지역민이 교류하는 생산·여가지역으로 조성하고자 경관·휴양형, 민속문화형, 해양스포츠형, 특산물생산형, 바다생태형, 유통가공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72개 권역에 3,250억원을 투입하여 집중개발 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인구의 증대를 통한 어촌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8년 시범적으로 바다휴양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지자체에서 실시설계와 동시에 도시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다. 전원마을조성사업

(1) 2006 이행실적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7.2%를 크게 상회하는 18.7%를 나타내고 있으며, 86개 군 중에서 57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06년 7월 농림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은퇴후 농촌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은퇴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농림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한국농촌공사가 공동으로 20개 시·군이 22개의 전원마을조성계획을 전시한 「2006전원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나흘간의 행사기간 중 총 43,870명이 관람하여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높은 수요를 실감하였다. 대통령께서는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주민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전원마을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민 유치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그 중 핵심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원 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보조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는 지원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건축비에 대해서는 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농업인 3%, 비농업인 4%) 융자지원도하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총 300지구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04년도에 2지구 시범착수 후 2005년도까지 총 30지구를 착수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총 325억원의 예산을 투입(국고 260억원, 지방비 65억원)하여 신

규모 축소된 25지구를 포함하여 55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사업이 초기단계로서 아직까지 사업추진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200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농림부와 농촌공사 공동으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작업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농촌공사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2007년부터 전원마을조성 관련 업무부서를 통합·확대한 「전원마을조성팀(1급)」을 신설·운영키로 하였다.

(2) 2007 추진계획

2007년도에는 총 289억원(국고 231억원, 지방비 58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도 신규착수 15지구를 포함하여 70지구에 대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는 전원마을조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6년도 말에 마련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를 현행 10~20억원을 10~3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마을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경관형성 및 마을공동체 형성 등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건축을 담보하고 부동산 투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은 마을기반시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일괄하여 수립하고, 50호 이상 규모의 마을조성시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토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신청시 일정수준 이상의 토지확보 및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신청요건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등 사업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 있음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원마을조성 신축주택은 농촌주택 보유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

레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농촌주택 구입시 가격 70백만원을 15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이 계획수립단계인 1·2년차에 소요액 이상으로 편성되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사업추진 진도를 감안한 실소요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박종민)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 2006 이행실적

농림부에서는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 시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441억원을 지원하여 267개소를 개발함으로써, 2006년까지 5,364개소를 완공, 1,113천명에게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2) 2007 추진계획

2004년까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94~'04)사업으로 4,751개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20호 이상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2014년까지 3,000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제2단계('05~'14)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자연마을 총 7,751개소의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27억원을 투자하여 252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업량(개소)	7,751	5,364	252	2,135
사업비(억원)	12,951	8,881	427	3,643

(농림부 정주지원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마.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확충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말 37.7% 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특히 면단위 이하 산재된 자연마을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다수 있어 농어촌에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	급수인구	보 급 율(%)	
전 국		49,268천명	44,671천명	90.7	
도시	대도시(광역)	23,079	22,832	98.9	98.3
	중소도시(시)	17,061	16,641	97.5	
농촌	읍부지역	3,909	3,231	82.6	56.9
	면부지역	5,219	1,967	37.7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05)

또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15,161억원, 도서지역에 3,930억원, 총 1조 9,091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2단계 사업('05~'14)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바.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행정자치부에서는 읍지역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간 전국 194개 소도읍에 총 12조원(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국비와 민자 8조)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원년인 2003년에는 인천 강화읍 등 14개읍에 962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453억, 민자등 209억)을, 2004년에는 울산 온양읍 등 36개읍에 2,976억원(국비 600억, 지방비 1,237억, 민자등 1,139억), 2005년에는 부산 장안읍 등 43개읍에 3,245억(국비 874억, 지방비 1,330억, 민자등 1,068억), 2006년에는 경기 장호원읍 등 66개읍에 4,012억원(국비 1,234억, 지방비 1,709억, 민자등 1,069억), 2007년에는 경기 여주읍 등 58개읍에 3,932억원(국비 1,584억, 지방비 1,791억, 민자 등 55억) 등 총 1조 5,127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산업, 유통시설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중심상점가 현대화,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2003년 선정된 인천 강화읍 등 14개 소도읍이 완공되었으며, 국가균형위원회와 농림부 삶의질 향상위원회 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 4월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완료소도읍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84%가 사업추진에 만족하고 있는 등 당초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읍을 경제, 사회, 문화 등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1년 지정된 194개읍중 지금까지 72개읍을 선정 추진중에 있으나, 그동안 신규지구 선정이 미흡하여 미 선정된 122개 읍에서는 조기 선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또한 팽배해 있다. 따라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나머지 122개읍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매년 25개의 신규지구 선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사.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촉진

(1) 2006 이행실적

행정자치부에서는 '76년부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6년까지 총 390,722동(사업비 4,338,029백만원)의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6년 당해에는 4,500(사업비 180,000백만원)의 주택 개량을 지원하였다.

(2) 2007 추진계획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부처간 업무조정예 의해 당초 행정자치부의 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림부 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된다. 농림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이관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년에는 총 5,600동(사업비 2,240억원)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신·개축시에는 4,000만원, 부분 개량·증축시에는 2,000만원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3~4%의 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향후 지원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부담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정주지원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주택의 노후화와 빈집의 증가, 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촌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웰빙과 녹색공간으로서 농촌이 재조명되고 농촌의 고유한 생태적, 문화적 자원 등 어메니티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면서 농촌이 건강과 장수의 대안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순환 방법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18개소를 보급하였다. 이 화장실의 특성은 병원성의 균의 완전사멸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가 없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 없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비화와 액비로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방지, 수자원절약, 분뇨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농작업 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활기능성, 에너지 절약, 전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1~2004)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농촌다운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5마을 138농가에 시범 보급하였다.

이 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농가 중심으로 전통적 농촌주거문화의 유지보전, 현대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성 확보를 통해 농촌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텃밭, 화단, 장독대, 정원,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옥외 공간 조성, 도배, 장판 등 주요사항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주택 내부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구성 요소 적용과 문화생활, 휴식공간, 손님맞이공간 설치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웰빙공간(생활+ 민박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친 도시민에게는 휴식을, 농가에게는 소득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5년 70개 지역을 시작한 이후 2009년까지 전국 600지역(1,230읍면 32천마을)에 대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환경, 경관, 유적지, 전통기술, 특산물 등 지역 고유의 농촌자원을 도식화,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농촌자원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자.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농산어촌의 기초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하여 상수원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91~2004년까지 2,092개소 마을에 4,000억원을 지원하여 하수관로 부설 및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였고, 2005년에도 1,858억원을 지원하여 205개 마을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2014년까지 하수시설이 불량한 1,827개 마을에 마을당 1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1995~2014)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14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총 2,722억원을 투자하여 83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6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mg/L, COD 40mg/L, SS 30mg/L, T-N 60mg/L, T-P 8mg/L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 841억원을 투자하여 120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시설개선 포함)한 바 있고, 2007년에는 114억원을 투자하여 11개소를 추진 중이며,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3)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 추진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1997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5,371억원을 투자하여 52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31개소의 시설은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이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자원화시설 설치, 친환경축사시설 지원, 친환경농산물이용촉진 등의 사업에 2조 1,03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처리율의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소인 제거설치, 공법개선, 축분의 분리·저장시설 설치 등 시설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차.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작업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업비 96억원으로 192개소에 설치하였다.

마을단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교육, 우수지역 현지견학, 마을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회관설치사업,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여타사업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태양열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근 보건소, 일반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서비스, 생활체육협회의 운동지도자 배치로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실시 등 농촌지역의 농업인 건강을 책임지는 센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들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 신규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을 수립,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신규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100개소, 42억원(개소당 42백만원, 3년간 육성, 국비, 지방비 각 50%)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은 300마을 육성(기존 100마을, 신규 200마을)을 목표로 개소 당 50백만원씩 총 15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55세~64세의 예비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등 4영역을 접목하여 생산적 여가활동을 촉진하여 농촌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고, 사업 참여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으며 노년층, 젊은층 등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마을주민이 단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과의 교류,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 등의 개발, 운영을 통하여 세대간 통합의 계기를 조성하는 등 농촌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쌀 문화 국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짚풀을 활용한 노인들의 전통솜씨와 기술 연마를 위한 일환으로 짚풀공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잠재력과 기술의 향상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고 있으며, 짚풀공예 기술을 현대생활에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활소품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도 한층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등 소득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2.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은 2007년도부터 현행 입학정원의 4%이고(2006년 3%에서 4%로 확대), 대상범위는 대학의 자율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이다.

- 1996 ~ 2007년까지 등록자 : 170,264명
- 2008학년도 선발 예정자 수 : 23,601명(일반대 13,390명, 전문대 10,211명)
- 실시 대학 수 337교(일반대 190교, 전문대 147교)
- ※ 전체 대학 수 : 346교(일반대 198교, 전문대 148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교육행정사무관 박대립)

나.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경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경지소 유규모 1.5ha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과 함께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사업은 2006년 25천명에게 67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26천명에게 7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용자해 주고 있으며, 1994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2003년까지는 학기당 200만원, 2004년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용자해 주고 있으며, 상환은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까지 252천명에게 3,9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 10월 현재 26천명에 대해 747억원을 지원하였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관광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문화 및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간 문화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02개관(587억원)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11개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지원에 56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에는 14개관에 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하여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는 2007년 6월말 현재 농어촌지역 가입자수는 1,950천명(농어업인 307, 비농어업인 1,643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1995.7~2002.12	2003.1~2004.6	2004.7~2005.12	2006	2007
기준등급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13등급	14등급
지원금액(원)	2,200~4,400	4,400~7,700	8,800~19,800	9,900~21,600	9,900~23,400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계획
212	221	293	271	399	502	605	673	761

(농림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복리 증진 등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금보험료 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노령연금 및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자동이체

제도 및 선납·분기납제도 등 납부편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가)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율을 22%로 확대(중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 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30%, 2005년에는 40%,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율 목표치인 5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나) 농어촌지역 범위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2)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제도개선 추진

농어민 건강보험료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많은 농어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및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및 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경감지원율을 차등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2006년 12월 말 현재 3,457개소에 대하여 3,64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6년 572억원을 확보하여 209개소의 시설개선과 115개소의 장비지원을 하였으며, 2007년에는 620억원을 확보하여 250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2)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981년부터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1,905

여개의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수단 및 의료시설 등이 미흡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확대

1998년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0년까지 91명의 한방공중 보건 의사를 배치·운영하였으며, 병역법 개정(2000.12.26)으로 한의사면허 소지만으로 공중보건의를 편입이 가능함에 따라 2001년 38명, 2002년 27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 유급 자원이 편입된 2003~2004년에는 2003년 387명, 2004년 303명으로 대폭 증원되었으나 이후 2005년 293명, 2006년 252명으로 감소되고, 2007년 다시 318명으로 증가하여 현재 총 863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농어촌의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7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7년 12월 일 인쇄

2007년 12월 일 발행

발행·대한민국 농 립 부

편집·농림부 농업정책과

인쇄·(주)동 양 피 앤 씨

☎ (02) 502-3994

<비매품>